



# 한국인 선호미래 조사 연구

박성원 외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한국인 선호미래 조사 연구



## 연구진

### 내부 연구진

박성원 연구위원(연구책임자)

정영훈 연구위원

김홍범 연구위원

민보경 부연구위원

강가경 연구원

최하예 연구원

송지은 연구원

### 외부 연구진

엠브레인퍼블릭

-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 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발 | 간 | 사

국회미래연구원의 비전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국민의 파트너'이다. 미래는 소수의 엘리트나 정치가, 기업가가 만들어가는 시공간이 아니다. 시민사회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그 미래를 실현할 때 사회는 진정한 발전을 일궈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의 비전대로 국민과 함께 국민이 선호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한 것이다.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502명의 시민들을 세 차례, 세 도시에서 만나 5시간 이상 소요되는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미래를 논의하고 선호하는 미래를 찾아가는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 의견뿐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들에게도 선호미래를 묻고 그 이유를 들어보았다. 또한 전문가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비교했으며, 국민이 선호하는 미래를 실현하는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박성원 박사는 연구책임자로서 연구 과정을 설계하고 추진하면서 제1장 서론부터 제5장 결론까지 직접 집필하거나 외부조사기관의 내용을 정리했다. 정영훈 박사는 미래사회 시나리오 도출 및 제4장 전문가 대상 선호미래 조사를 담당하고 집필했다. 김홍범 박사와 민보경 박사는 연구 설계 및 공론조사 진행에 참여하고 미래사회 시나리오 집필에 훌륭한 통찰을 제공했다. 강가연 연구원과 최하예 연구원은 공론조사 참여, 전문가 의견 정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공론조사를 진행하고 내용을 정리해준 엠브레인퍼블릭의 송미진 부장과 정재은 차장, 그리고 지금은 다른 연구원에 있지만 연구 초기에 참여하고 선행연구를 정리해준 송지은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공론조사 설계와 진행에 훌륭히 자문해주신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께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19년 12월  
국회미래연구원장 박진(朴進)



<b>제1장 서론</b> .....	<b>1</b>
<b>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b> .....	<b>3</b>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4
<b>제2절 연구의 질문 및 추진 방법</b> .....	<b>7</b>
1. 연구의 질문 .....	7
2. 연구 추진 방법 .....	8
<b>제3절 연구 방법론: 숙의토론 공론조사</b> .....	<b>9</b>
1. 공론조사의 기원과 발전 .....	9
2. 국내 공론조사 사례 .....	10
3. 공론조사 실행 관련 쟁점 .....	10
4. 미래연구 분야의 공론조사 사례 .....	14
<b>제2장 선호미래상 도출 및 국민숙의토론 설계와 진행</b> .....	<b>17</b>
<b>제1절 선호미래상 도출</b> .....	<b>19</b>
1. 선호미래의 정의 .....	19
2. 선호미래 도출 과정 .....	20
<b>제2절 국민숙의토론 설계 및 진행</b> .....	<b>29</b>
1. 사전조사의 필요성과 개요 .....	29
2. 국민숙의토론 설계 및 진행 .....	31

# 목 차

<b>제3장 선호미래 조사 결과</b> .....	<b>39</b>
제1절 선호미래 사전조사 결과 .....	41
1. 3,000명 온라인 사전조사 결과 .....	41
제2절 국민 선호미래 공론조사 결과 .....	44
1. 7가지 미래 이슈 인식조사 .....	44
2. 국민 참여단이 선택한 가능, 회피, 선호미래 .....	47
제3절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방향 .....	62
1.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10가지 방향 .....	62
2. 선호미래 1위인 R미래 실현을 위한 시사점 .....	67
<b>제4장 전문가 대상 선호미래 조사 결과</b> .....	<b>69</b>
제1절 전문가 대상 조사의 목적 및 설계·방법 .....	71
1. 목적 및 의미 .....	71
2. 조사의 설계 및 방법 .....	71
제2절 전문가 선호미래 조사 결과 .....	73
1. 가능미래 .....	73
2. 회피미래 .....	76
3. 선호미래 .....	79
4. 미래 사회 구성요인 조사 결과 .....	81
제3절 선호미래(R미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	86
1. 거버넌스 분야 .....	86
2. 성장과 발전 분야 .....	87

3. 의식주 분야 .....	89
4. 개인과 공동체 분야 .....	90
5. 휴먼 분야 .....	91

**제5장 결론 ..... 93**

**제1절 국민이 원하는 선호미래 ..... 95**

1. 선호미래 선택의 의미 .....	95
2. 세대별 선호미래의 시사점 .....	100

**제2절 어떤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가 ..... 104**

1. 최가능미래 Q의 조건 .....	104
2. Q의 환경에서 R의 미래를 원하는 사회 .....	105
3. R의 미래를 실현하는 방안: 전문가들의 견해 .....	107

**제3절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들 양성 ..... 110**

1. 미래 문해력과 미래 지향성의 향상 .....	110
2.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들 .....	111

**참고 문헌 ..... 113**

1. 문헌 자료 .....	115
2. 웹 사이트 .....	117

**부 록 ..... 119**

부록 1: 공론조사 설문지 .....	121
부록 2: 4가지 미래 시나리오 .....	126



## 표 목 차

[표 1-1] 국내외 공론조사 사례 .....	13
[표 2-1] 3가지 가치의 축이 만들어내는 4가지 미래상 .....	24
[표 2-2] 선호미래 작업(주요 가치 기반의 미래 사회 구분법) .....	24
[표 2-3] 선호미래별 뚜렷한 가치의 차이 .....	25
[표 2-4] 선호미래별 사회상의 차이 .....	25
[표 2-5] 4가지 선호미래의 10대 구성요인 .....	26
[표 2-6] 4가지 미래 사회상의 차별점 .....	27
[표 2-7] 표본 설계 .....	30
[표 2-8] 응답자 특성 .....	31
[표 2-9] 2050년 국민의 선호미래 조사를 위한 숙의토론 프로그램 .....	33
[표 3-1] 미래 인식 종합 .....	48
[표 4-1] 2050년 미래 우리 사회 구성요인: 사전 vs 사후 .....	82
[표 4-2] 선호미래 구현을 위한 우선 가치(사후) .....	85
[표 5-1] 5개 분야에서 제기된 R미래 실현 방안 .....	109

[그림 2-1] 국민 선호미래 연구 과정도 .....	19
[그림 2-2] 노동이민 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 결과 .....	21
[그림 2-3] 3가지 선호 가치의 축 .....	22
[그림 2-4]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의 4가지 미래 설명과 질의응답 .....	36
[그림 2-5] 4가지 미래 사회 관련 대표 질문 도출 및 발표 .....	37
[그림 2-6] 국민숙의토론 및 공론조사 만족도 .....	37
[그림 2-7] 선호미래 국민숙의토론 및 공론조사 인식 .....	38
[그림 3-1] 3,000명 응답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및 의견 분포 .....	41
[그림 3-2] 3,000명 온라인 사전조사 참여자의 미래 사회 구성요인별 선택 .....	43
[그림 3-3] 지역별 7가지 미래 이슈별 중요도 .....	45
[그림 3-4] 연령별(서울 기준) 이슈 중요도 차이 .....	46
[그림 3-5] R미래 실현을 위한 우선 가치 목록 .....	63
[그림 3-6] T미래 실현을 위한 우선 가치 목록 .....	64
[그림 3-7] P미래 실현을 위한 우선 가치 목록 .....	65
[그림 3-8] Q미래 실현을 위한 우선 가치 목록 .....	67
[그림 4-1] 전문가 조사 결과: 가능미래 .....	73
[그림 4-2] 전문가 조사 결과: 회피미래 .....	76
[그림 4-3] 전문가 조사 결과: 선호미래 .....	79
[그림 5-1] 선호미래 숙의토론 이전과 이후 참여단의 가치 변화 .....	97



## 요 약

### 1 서론

####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규범적 불확실성에 놓인 우리 사회**
  - 경제성장 목표 이후 국민이 바라는 미래 사회상의 실종.
  - 선호미래상의 부재로 다양한 변화의 활용 미약.
- **국민이 바라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
  - 기후변화 심화, 불평등 확대, 자국 우선주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일자리 변화 등의 파고를 고려하면서 우리 사회 선호미래를 논의할 필요.
  - 미래를 논의하면서 시민사회의 미래 적응력 향상.

#### □ 연구 질문 및 추진 방법

- **국민의 선호미래를 논의하고 도출하는 과정과 방법**
  - 국민과 함께 미래 사회의 다양한 가능성을 충분히 논의하고, 바라는 미래 사회를 선택하는데 적절한 과정과 방법은 무엇인가?
  - 국가의 중장기 전략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선택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가?
- **국민과 숙의토론 공론조사 실시 및 전문가 대상 조사**
  - 전국에 거주하는 502명 시민을 서울, 대전, 부산 등의 공론조사장으로 초청해 선호미래를 위한 숙의토론 실시.
  - 분야별 전문가 대상으로 선호미래 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의견과 비교하고,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도 함께 조사.

## 2 선호미래상 도출 및 공론조사 설계

### □ 2018년 정책 미래 조사를 활용, 선호미래 가치 체계 도출

- 변화와 안정, 미래 지향과 현재 지향, 개인 자유와 공동체 연대 등 3가지 축
  - 변화는 유연, 적응, 성장, 혁신, 탐색, 확장의 태도를, 안정은 정체성, 안정적 토대, 예측 가능성, 일관성, 규격화의 태도를 상징.
  - 미래 지향은 미래 세대 중심, 지속 가능성, 가치, 생태의 가치를, 현재 지향은 생존, 분기별 이익률 증가, 정확성, 민첩성 등의 가치를 추구.
  - 개인 중심은 권리, 자유, 독립성, 경쟁, 소유권 등의 가치를, 공동체 중심은 연대, 공공성, 집단지성, 조화 등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간주.
  
- 가치들의 결합으로 8가지 미래상에서 4가지 미래상으로 압축
  - 미래 중심 대 현재 중심, 개인 자유 대 공동체 연대의 교차로 4가지 미래 도출.

[표 요약-1] 선호미래별 가치의 차이

	미래 중심 (도전(장기)/변화 지향)	현재 중심 (안정(단기)/현행 유지)
개인 자유 (성장/경쟁)	선호미래1: 급진성장 사회 도전적 성장, 변화 지향 경쟁	선호미래2: 안정성장 사회 안정적 성장, 현행 유지 경쟁
공동체 연대 (분배/협력)	선호미래3: 보존분배 사회 장기적 분배, 변화 지향 협력	선호미래4: 현존분배 사회 단기적 분배, 현행 유지 협력

[표 요약-2] 4가지 선호미래의 10대 구성요인

2050년 미래 사회		급진성장 사회	안정성장 사회	보존분배 사회	현존분배 사회
개 인	자유/연대	개인 자유 중시	개인 자유 중시	공동체 연대 중시	공동체 연대 중시
	성장/분배	성장 중심	성장 중심	분배 중심	분배 중심
대 공 동 체	세금/복지	중부담 중복지	중부담 중복지	고부담 고복지	고부담 고복지
	정부/민간	민간 중심	민간 중심	정부 중심	정부 중심
미 래 중 심	공정/형평	절차적 공정성 중시	절차적 공정성 중시	결과적 형평성 중시	결과적 형평성 중시
	환경/자원	미래세대 중심	현재세대 중심	미래세대 중심	현재세대 중심
대 현 재 중 심	과학 기술	적극적 활용	안정적 활용	적극적 활용	안정적 활용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중심	원자력, 화석 중심	신·재생에너지 중심	원자력, 화석 중심
현 재 중 심	사회 변화	빠른 변화 추구	완만한 변화 추구	빠른 변화 추구	완만한 변화 추구
	도전/안정	도전/변화 추구	안정/현행유지	도전/변화 추구	안정/현행유지

## □ 국민숙의토론 공론조사 설계

### ● 공론조사 참여자의 대표성 강화

- 3,000명 대상 10가지 선호미래 구성요소 선호도 조사로 우리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4가지 그룹을 확인.
- 급진성장 지향 33%, 안정성장 지향 14%, 보존분배 지향 37%, 현존분배 지향 15%를 기반으로 4그룹 502명 선호미래 조사 국민 참여단 구성

### ● 공론조사의 절차적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강화

- 사전 온라인 숙의, 사전 설문 조사, 7개 미래 이슈 토론, 4가지 선호미래 상 이해 및 논의, 전문가와 질의응답, 사후 설문 조사의 순으로 진행

### 3 국민 선호미래 조사 결과

#### □ 7가지 미래 이슈 인식 조사

##### ● 자연환경, 일자리, 주거 환경이 선호미래 선택에 중요한 기준

- 국민 참여단은 기후변화, 환경, 식량 자원 등 자연환경이 가장 중요한 미래 이슈라고 응답.
- 그 다음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복지/노동 등 기술의 발전과 일자리의 변화 이슈가 중요하다고 응답.

#### □ 국민 참여단이 선택한 가능, 회피, 선호미래

##### ● 가능미래 1위는 Q미래(안정성장 미래)

- 국민 참여단 중 43.4%가 안정성장 미래를 가장 가능하다고 응답, 연령별로는 30대, 지역별로는 강원도, 경기/인천지역 거주자들이 다수.
- 대도시 중심, 경제성장 목표, 전문성과 효율성 중시, 기후변화 대응에는 미온적인 Q미래가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사회가 현재 고령화로 보수화 되어 필요한 변화를 거부해 Q미래로 가고 있다고 응답.

##### ● 회피미래 1위도 Q미래(안정성장 미래)

- 국민 참여단 중 34.9%가 안정성장 미래를 가장 회피하고 싶다고 응답, 연령별로는 50대,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과 서울 거주자들이 다수.
- 대도시와 지방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 확대, 경쟁의 과열로 사회적 문제 증가, 지구온난화 심화, 외국인 유입의 과다로 사회적, 문화적 갈등의 확대 등이 Q미래를 회피의 대상으로 인식.

##### ● 선호미래 1위는 R미래(보존분배 미래)

- 국민 참여단 중 43%가 보존분배 미래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 연령별로는 20대,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경기/인천지역 거주자들이 다수.

- 시민들은 도시와 농촌의 공존,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 노동시장의 자유로운 이동, 협력과 사회적 책임성을 주요 가치로 추구하는 R미래에 살고 싶다고 응답.
- 20대의 선호가 높았던 이유로는 유연한 가족의 구성, 인간 중심적 가치관의 구현, 발전과 혁신의 적절한 균형, 다원화된 사회 등.
- R미래에 이어 선호도가 높았던 미래는 T미래(현존분배 미래), P미래(급진성장 미래), 그리고 Q미래(안정성장 미래) 순.

## □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방향

### ● R미래(보존분배 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공공가치

- 국민 참여단은 선호미래 실현을 위해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태도, 절차적 공정성의 확보,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과 자원보존,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응답.
- 개인의 자유 중심과 공동체 연대의 중심이라는 상반된 가치의 선택에서는 50.5%와 49.5% 등 팽팽한 의견 대립, 변화의 속도는 완만하게, 과학기술도 안정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
- 정부보다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하면서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

## 4 전문가 대상 선호미래 조사

### □ 전문가 그룹이 선택한 가능, 회피, 선호미래

#### ● 가능미래 1위는 Q미래(안정성장 미래)

- 전문가 65명(거버넌스, 성장과 발전, 의식주, 개인과 공동체, 휴먼 분야 등으로 구성) 중 38.5%가 안정성장 미래를 가장 가능하다고 응답.
- 지난 30년 동안 한국 사회가 추구한 신자유주의, 성장 중심, 도전보다 안정의 중시, 급진보다 점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측해 Q미래를 가능미래로 선택.



- **회피미래 1위도 Q미래(안정성장 미래)**

- 전문가 그룹 중 43.1%가 안정성장 미래를 가장 회피하고 싶다고 응답.
- 외국인 노동자의 대거 유입으로 사회갈등 유발, 1인 가족 증가로 공동체 해체, 대기업 중심의 경제개발 모델의 한계, 계급제 사회의 심화, 성장 일변도의 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 실패 등은 피해야 한다고 평가.

- **선호미래 1위는 R미래(보존분배 미래)**

- 전문가 그룹 중 63.1%가 보존분배 미래를 가장 선호하다고 응답.
-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도전 지향성을 확대하고,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의 마련, 성장 담론을 대신할 대안의 실행, 높은 복지 수준의 국민적 요구 등을 고려하면 R미래가 적절하다고 평가.
- 경제학적 사고방식에서 인문학적 사고방식으로 전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분배의 확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연대, 외국인 노동자나 성 소수자 등과의 공생 등은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응답.

## □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R미래 실현 정책**

- **거버넌스 분야의 정책과제**

-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국민청원제도 개선, 국민소환제 도입.
- 정치적 소외 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선거제도의 개혁, 국회의 입법 및 정책 역량 강화, 지방분권의 강화와 동북아 협력 체계 구축도 제안.

- **성장과 발전 분야의 정책과제**

- 소득 재분배를 위한 세제 정책의 강화, 누진 소득세 강화, 소득 구간에 따른 세금 차별화,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 복지제도의 재구축,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전환, 기본소득 중심뿐 아니라 주 32시간 근로제 도입, 우주기술 혁신 역량 강화, 원자로 및 방사성 물질의 경제적이고 안전한 폐기 방법의 기술개발 등도 주장.

- **의식주 분야의 정책과제**

- 공용 주거 주택 공급의 확대, 청년층 주거 안정, 소규모 지역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생활권 단위의 자족성 확보 등이 필요.
-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도로, 철도교통 및 대중교통망 강화로 이동성 보장, 교육·의료 등 주요 서비스의 지방 연계 전략, 개인이나 가구 단위의 에너지 거래와 공유, 에너지 자급 마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

- **개인과 공동체 분야의 정책과제**

- 가족 개념의 재구성, 이를 반영한 범제도적 개선, 유사 가족 등의 새로운 가족 지원 방안, 동물 및 로봇 등의 가족화를 정책과제로 제안.
- 개인을 존중하면서도 개인의 고립을 막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 도입, 다문화 가정 지원 확대, 자율적 사회 조직의 활성화, 지역 수준에서 다양한 공동체 사업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제안.

- **휴먼 분야의 정책과제**

- 성 정체성, 맞춤형 아기 등 개인의 가치관을 고려해 규제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인간 이외의 주체(동물이나 로봇 등)에 대해서도 상속 허용.
- 고령화 시대에서 트랜스 휴먼의 역할, 기술 중심 시대에 종교의 역할, 인간과 기계의 새로운 관계를 정책 연구의 과제로 제안.

[표 요약-3] 5개 분야에서 제기된 R미래 실현 방안

분야	주요 정책과제	주요 연구 과제
거버넌스	-국민청원제도 개선, 국민소환제 도입 -정치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	-정부의 미래 계획 기능을 강화하고 계획의 실행에 관한 모니터링 구축
성장과 발전	-거주 지역 생활 기반 협동조합 활성화 -주 32시간 근로제 도입 -자급자족이 가능한 스마트 홈 보급 -1인 기업이나 소기업 등을 위한 공유형 혁신 플랫폼 구축 -성과 기반에서 신뢰 기반으로 과학기술지원 정책 방향 전환	-기본소득 중심의 복지 제도와 이를 위한 세제 개편 -원자로 및 방사성 물질의 경제적이고 안전한 폐기 방법에 대한 기술 개발
의식주	-고밀도 주거에서 저밀도 녹색 주거로 전환 -소규모 지역의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교육 의료 등 주요 서비스의 지방 연계 -기후환경 분야의 국제적 리더십 확보	-생활권 단위의 자족성 확보 -식량 자원 변화에 따른 질병 및 신체 변화 등의 예측
개인과 공동체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과 정책 개편 -노인 돌봄에 관한 공동체 책임 강화 -다문화 공생 사회에 따른 인구 구성 변화 전망 및 정책 방향 설계 -사회적 신뢰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혈연이 아닌 사람들의 집합체로 유사 가족을 이루는 다양한 공동체 발굴 -한국형 공동체 사회의 실태 및 발전 전략
휴먼	-성 정체성, 맞춤형 아기 등의 허용 -인간 이외의 주체(동물, 로봇 등)에 대한 상속 허용	-트랜스 휴먼 시대의 새로운 윤리적 기준 마련

## 5 시사점 및 결론

### □ 모든 세대가 원하는 R미래의 실현

#### ● 경제적 양극화, 지구온난화, 공동체 유지의 위기감 돌파 요청

- 선호미래 공론조사를 전후로 국민 참여단의 태도 변화 중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 세금 부담을 더 높이고 복지수준을 향상해야 한다는 점을 주목.
- 성장과 분배, 민간과 정부의 역할의 대립은 공론조사 전후로 변화가 적고 의견 대립이 팽팽해 문제의 초점을 어떤 성장이나, 누구를 위한 분배

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으로 전환해야 함.

## □ 20대와 30대가 원하는 미래

### ● 개인의 자유 중시, 과학기술의 급진적 발전을 선호

- 자동화, 지능화된 네트워크 도시의 선호, 인공지능 로봇의 급진적 활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구직 활동의 자유로움, 증강 인간과 변형 인간도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 등은 40~60대와 다른 의견임.

### ● R미래와 P미래의 조화

- 보존분배와 급진성장의 조화를 이루는 제3의 전략 필요.
- 두 미래의 구성요소 중 공통점은 안전보다 도전을, 현재보다 미래를 중심으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는 점임.
- 과학기술의 적극적 활용, 신재생에너지 중심, 빠른 사회 변화의 추구, 현상 유지보다는 실패해도 도전하는 자세 등은 두 미래의 공통 요소.

## □ Q미래라는 조건에서 R미래의 비전을 실현

### ● 경쟁주의, 대도시 중심, 효율성 추구의 추세에서 R미래 실현

- 소비를 통한 경제의 성장에서 환경문제나 기후변화의 대응은 뒷전.
- 안정성장 중심의 흐름에서 신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이나 유사 가족의 확대는 사회적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
- 새로운 비전을 기존의 환경과 조건에서 실현하려면 많은 갈등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고됨.
- 비전 실현의 새로운 주체, 새로운 사회를 열어갈 씨앗을 심고 있는 지역 사회 발굴, 이해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사례는 무엇인지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성 제기.

- R미래 실현을 위한 3가지 사회적 대전환 필요

- 물질적 풍요에서 마음의 풍요로 사회적 목표의 전환 (불평등 격차 완화,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는 사회통합 정책의 강화 등).
-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각각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의 장점을 연결하는 노력의 경주 (분야별 경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경계 밖으로 나아가기).
-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 지구 생태계를 보존하는 청지기로서의 의식 전환 (자연 생태계, 미래세대, 글로벌 시민사회를 고려하는 문제 해결).

# 제1장

##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질문 및 추진 방법

제3절 연구 방법론: 숙의토론 공론조사





## 제 1절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연구의 배경

#### 가. 선호미래상을 찾아서

지난 2018년 국회미래연구원은 선호미래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 바 있다: “한 사회가 지향하는 목적지가 부재하면 다양한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거나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대처하는데 순발력이 떨어진다”(박성원 외, 2018: i). 사회는 수많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매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 변화한다. 새로운 유행이 발생하면서 기존의 유행은 소멸한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물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인구의 증감, 경제 상황의 등락, 새로운 과학기술의 등장 등 수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사회가 무작위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일정한 방향성이 있고, 그 방향은 매일 조금씩 변화한다.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생존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나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대에 뒤쳐져 생존이 어려워진다.

사회는 늘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만, 그 방향성에는 시대적 요청이 담겨 있어야 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담겨야 한다.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풀어내는 대안이 그 방향에 담겨 있어야 시민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희망을 갖고 오늘의 어려움을 견뎌낸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회에서 시민들은 비로소 꿈을 꿀 수 있다. 꿈꿀 수 없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018년 선호미래 연구를 시작한 것은 시민들이 꿈꾸는 미래 사회는 어떤 사회일지 궁금해서였다. 민주적이고 능동적이며 현명한 시민들은 사회가 그저 바람에 휘둘리듯 방향 없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한 나라의 헌법이 바람직한 사회상을 제시하듯 모든 시민의 마음에는 자신이 바라는 사회의 모습이 존재한다. 그렇지 않은 사회는 남의 미래상을 베껴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시민들



이 상상하는 바람직한 미래는 무엇일지 연구해보기로 했다.

2018년에는 선호미래상의 정의, 기존의 국내외 연구 흐름, 선호미래에 담겨야 할 선호 가치, 시민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상상하는 선호미래상, 선호미래의 정책적 활용 방안 등을 연구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가 선호미래를 논의하고 실현하려고 했음을 발견했다. 일례로 조선시대 정도전, 세종, 실학파 학자들은 민본의 미래를 꿈꾸고 이 미래를 실현하는 조건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했다. 근대 이후 한국 사회는 헌법의 제정으로 다양한 선호미래상을 제시하고 선호미래상에 부합하는 규범과 권력 체계를 갖추는 노력을 경주했다.

이렇듯 선호미래와 관련한 여러 이론적 논의를 분석한 뒤, 우리는 2019년에 미래 시나리오를 들고 직접 시민들을 만나 어떤 미래를 선호하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한 나라의 방향을 정해보는 중요한 만남이어서 우리는 숙의토론이 가능한 공론조사 형식을 빌려 국민의 선호미래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 2 연구의 목적

### 가. 선호미래연구의 목표

이 연구의 목표는 국민이 선호하는 미래 사회상을 밝히는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 시대마다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국민 각자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미래는 누구라도 선호한다. 그렇다면 이 연구의 목적은 이렇듯 뻐한 결론을 내는 것인가.

앞서 언급했듯 선호미래 연구는 국민이 선호하는 사회의 방향,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묻는 연구다. 이는 시대마다 달라진다. 예를 들면, 1960년대 한국사회의 선호미래상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였다.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경제를 부흥시켜 가난은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차츰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자 정치적 민주주의를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으로 간주했다. 이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경제적 성장, 정치적 발전이라는 목표를 성취한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 미래를 추구해야 할까. 우리는 경제적, 정치적 발전을 추구했던 때와 달리 새로운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다. 전 지구적 대응이 필요한 기후변화, 날로 악화되어 가는 경제적 불평등, 세계화에 반대하는 자국민 우선주의, 인간의 일을 대신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은 우리가 목도하는 새로운 문제들이다.

따라서, 지금 꿈꿀 수 있는 미래 사회는 이런 문제들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정책을 우선해야 할지, 누구를 먼저 사회가 도와야 할지, 누가 소외될 수 있는지 등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가치를 정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선호미래의 도출에는 전문가의 지식과 식견이 필요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국민의 선호미래를 밝히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자면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예측하려는 미래의 시계(視界)를 정해야 한다. 우리는 30년 뒤인 2050년의 선호미래를 밝히는 것으로 정했다. 너무 짧은 미래의 시계는 선호미래가 실현된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 5년 뒤의 미래는 사실상 지금까지 해왔던 추세와 관행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적어도 한 세대(30년) 앞을 예측의 시점으로 잡아야 선호미래상을 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미래는 단일할 수 없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시공간이어서 하나의 미래만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몇 개의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미래학계는 통상 10년 안팎의 미래라면 2개의 미래 시나리오를, 20년이 넘는 장기 미래의 경우 3~4개의 미래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선호미래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므로 4개의 미래를 시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셋째, 국민과 함께 선호미래를 논의하는 과정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단순히 질문지를 주고 응답하는 일반적인 조사 과정은 적합하지 않다. 미래는 인구, 문화, 환경, 에너지, 과학기술, 정치, 경제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엮여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많은 논의와 가정이 필요하다. 앞서 든 요인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가 변화하면 다른 요소도 변하게 만들기 때문에 분절화한 시각보다는 통합적인 시각을 요구한다. 우리는 숙의토론이 가능한 공론조사의 형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의 선호미래뿐 아니라 전문가 그룹의 선호미래도 확인하기로 했다. 전문가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호미래를 밝힐 권리가 있다. 또한 선호미래를 실행하려면 전문가들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선호미래를 실현하자면 전문가 그룹이 이를 정책화해야 한다. 선호미래를 두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린다면 이는 매우 흥미로운 요소로 볼 수 있다. 시민과 엘리트의 의견이 왜 다른지, 서로 어떤 미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달리하는지 연구할 좋은 주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전문가 그룹은 따로 온라인 형태로 선호미래를 묻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가 그룹에게는 선호미래를 실현할 정책적 제언도 받기로 했다.

앞서 언급한 네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선호미래 연구의 목표다. 이를 통해 균형 있는 시각으로 국민의 선호미래를 제시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를 정할 때 참고할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 제2절

## 연구의 질문 및 추진 방법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연구의 질문

본 연구가 제기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국민과 함께 미래 사회의 다양한 가능성을 충분히 논의하고, 바라는 미래 사회를 선택하는데 적절한 과정과 방법은 무엇인가?” “국가 중장기 전략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선택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가?”

국회미래연구원은 선호미래 연구뿐 아니라 2050년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도 수행했다. 이른바 선호미래와 대별되는 가능미래 연구다. 이 미래연구에서 선호미래연구는 4개의 미래 시나리오를 구성할 재료들을 받았다. 선호미래도 가능미래의 일종이기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자료들은 선호미래를 구성하는 재료가 된다.

국민이 바라는 미래 사회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추구할 만한 공공가치를 담아야 한다. 우리가 상정하는 2050년 미래에는 현재의 청소년이나 청년 세대가 주역이 될 것이다. 이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의 의견을 담는 방법은 고민이 된다. 숙의토론에 참여할 국민을 선별할 때 현재의 인구 비율로 한다면 40대 이상의 인구가 다른 세대에 비해 많이 포집될 것이다. 2050년에 주역이 될 20대와 30대는 덜 포집된다. 따라서, 장기적 선호미래를 구성할 때는 그 시대에 주역이 될 세대군을 현재의 인구비율보다 과대 포집하는 것이 정책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보았다. 정책의 미래라는 관점은 바람직한 미래라는 것을 상정하고 그 미래를 실현하는 정책을 고안해내는 관점을 말한다. 우리는 선호미래 공론조사에 참여할 국민 참여단을 모집할 때 20~30대가 인구 비율보다 과대 포집되도록 했다.

국민이 바라는 미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대표성 확보, 가치 표명과 종합화의 과정, 자원의 보존과 대체 가능성 논의, 단기적 시간 지평(세대 간 비형평성)의 극복 등을 추

가 연구과제로 논의했다. 이 중에서 단기적 시간 지평의 극복은 앞서 언급한 대로 20대와 30대가 현재 인구비율보다 과대 포집되게 함으로써 해결하기로 했다. 네 가지 추가 질문 중 앞선 세 가지 질문은 공론조사 설계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이후 방법론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끝으로 연구 질문에서 제기하는 것 중 국민의 선택이 국가의 중장기 전략 도출과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것도 중요하다. 앞선 이론적, 경험적 증거들은 무엇이 있으며, 우리 연구가 정책에 어떤 기여를 해야 하는지는 본 보고서의 토론 부분에서 담기로 한다.

## 2 연구 추진 방법

선호미래 연구 추진을 위해 내부 연구진을 구성했다. 2018년 선호미래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뿐 아니라 미래 예측에 전문성이 있는 연구자를 추가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연구한 내용을 다시 리뷰하고 올해 각자 맡을 부분을 정했다. 2050년 미래예측 연구팀에서 선호미래에 사용한 재료를 논의하는 팀, 선호미래를 도출하기 위한 공론조사 기획 및 설계팀, 그리고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정책 도출에 필요한 전문가 섭외 및 조사팀 등으로 구성했다.

선호미래 조사를 위한 공론조사는 전문 조사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숙의토론을 운영한 경험이 많은 전문업체를 공개입찰 형식으로 정했다. 연구비에 제약이 있어 숙의토론 공론조사를 지역별로 실행하기는 어려워 서울과, 대전, 부산 등 3곳에서 공론조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물론 3곳에 모이는 참가자들은 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해 모았다. 서울은 서울, 경기, 강원예 거주하는 시민들이고, 대전은 충청도와 전라도에 거주하는 시민들, 그리고 부산은 경상도에 거주하는 시민들이다.

전문가 대상 선호미래 조사는 2018년 정책 미래를 조사할 때 구축한 300여 명의 전문가 목록을 활용했다. 당시 2050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미래에 필요한 정책을 도출하는 과정에 이 전문가 그룹을 활용했다. 미래연구를 이해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이해하고, 올해도 이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 제3절

## 연구 방법론: 숙의토론 공론조사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은 공론조사로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숙의형 여론조사’라고도 한다. 공론조사는 주제에 관련된 자료집, 유인물, 시청각 자료,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 및 정보 제공 아래 토론이 진행된다. 이때 충분한 정보와 여러 차례의 토론을 통해 참여자의 의견과 선호는 변화할 수 있다(김창수, 2019).

## 1 공론조사의 기원과 발전

공론조사의 기원은 1970년대 미국과 독일 등에서 개발하여 이후 1990년대까지 사용한 ‘시민 배심원 제도’의 경험과 1980년대 덴마크에서 개발해서 사용되고 있는 ‘합의회의’ 방법론 등에서 찾을 수 있다(이준웅, 2017). 공론조사 방법론은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인 제임스 피시킨(James S. Fishkin)이 1991년 저서 『민주주의와 공론조사(Democracy and Deliberation)』를 펴내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피시킨은 고대 아테네인들이 의사 결정 방법으로 활용했던 추천제 방식에서 착안, 과학적인 확률 표집과 여론조사 기법을 영상, 웹 사이트와 같은 대중매체와 결합하여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오수길, 2017).

1994년 영국을 시작으로 지난 30여 년간 미국, 호주, 덴마크, 불가리아,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주제로 공론조사를 시행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2007년 지역 예산 할당과 운영에 대해 3번의 공론조사를 수행했다. 유럽연합 27개국에서 무작위 추출한 360명의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23개의 언어로 공론조사를 수행한 적도 있다.

공론조사의 대표성 확보 문제로 방법론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공론조사 방법론을 이용하여 세금 인상, 사형제 폐지, 군왕제 유지, 정부 지출 우선 순위, 원자력 에너지 문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정책적 방침을 결정하는 데 활용하였다.

## 2 국내 공론조사 사례

우리나라는 2003년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북한산 관통과 2007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주제로 공론조사가 검토되었지만, 불교계 반발 등의 이유로 무산된 적이 있다(오수길, 2017).

국내에서 실시한 공론조사에서 2005년 재정경제부에서 실시한 사례는 흥미롭다. 당시 재정경제부는 ‘국민의 참여와 합의에 바탕을 둔 사회 협약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사안으로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제도개혁 방안에 대해 ‘국민 참여 부동산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부동산 정책은 지역적, 사안별로 첨예한 갈등 관계를 내포하고 있어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위해 정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자는 정부 내 공감대를 형성했고, 정책의 입안 과정에 토론을 통한 국민의 참여 보장, 여론 진단, 정책 실행 시 문제점 사전 대응 차원에서 피시킨의 공론조사 방법론을 참고했다. 이는 기존에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 세미나, 공청회 등을 활용한 것과 대비되었다.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정책에 공론조사라는 여론조사 기법을 계획했을 때, 정책과 관련된 다른 부서에서 공론조사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과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여론조사보다 민주적 갈등관리 수단으로 적절하고,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들어 공론조사 반대 의견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2005년 8월 31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론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6월 27일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공론조사도 시행할 수 있었다.

## 3 공론조사 실행 관련 쟁점

우리나라 사례를 살펴보면, 공론조사의 성공 여부는 진행 과정의 투명성, 전문성, 설명 책임 등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공론조사 자문에 응하는 스탠퍼

드대학 속의민주주의센터(Center of Deliberative Democracy, 이하 CDD)는 방법론적 엄밀성도 중요하지만, 조사 진행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시민들이 정책 당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믿지 못한다면 공론조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2012년 일본은 원자력 에너지 정책대안에 대한 공론조사를 준비하면서, 4개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론조사 전반을 기획하고 감독하는 실행위원회, 토론 자료를 준비하고 설문 대안을 만들 때 도움을 준 전문가위원회, 스탠퍼드 대학의 피시킨 교수를 포함한 감수위원회, 그리고 조사의 진행과 분석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3자 검증위원회 등을 구성하였다.

조성겸·조은희(2007)는 토론 절차 내 일반 시민이 균형 잡힌 정보를 접할 것이라고 이론적으로 상정하지만, 실제로 이런지는 현실 토론을 통해 검증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충분히 정보가 제공되었거나, 숙의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공론조사 실시에 따른 토론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참여한 시민들이 경험한 토론의 효과를 100% 검증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론조사에는 토론의 시작, 주제의 몰입, 정보의 확인 등 단계별 논의의 심화 과정을 배치해놓고 최대한 참여자들이 숙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의견과 태도의 변화는 숙의 과정 전후를 비교해서 분석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조성겸·조은희의 의견은 우리 사회가 아직 공론조사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전의 평가로 보인다. 이후 실행을 거듭하면서 공론조사는 진화하고 있다.

신상준·이숙중(2016)은 정부 신뢰는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성과 수용성을 높여야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며, 공정성을 중요시하였다. 공정성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절차 공정성, 분배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등으로 구분하며, 이 가운데 절차 공정성은 의사결정의 통제, 과정의 일관성, 중립성 등이 절차에 포함되어야 한다.

절차 공정성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한다. 정부의 정책 결정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편견이 없고 치우치지 않는 정책 결정을 한다고 시민들이 느낄 때 절차 공정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연구는 이러한 절차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정책 과



정에서 시민들의 참여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국민이 선호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도출한 뒤, 2020년에는 이 미래 사회를 실현할 정책들을 도출하고, 다시 공론조사를 실시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밝힐 예정이다.

최태현(2018)은 숙의제도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갖는 대표성에 대한 한계와 그에 수반하는 공적 의사 결정이 갖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한다. 나아가 최태현(2018)은 대표성이 갖는 여러 의미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묘사적/통계적 대표성, 반응적/선출적 대표성과 같은 대표 구성과 책임의 원리를 고려한 다면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론조사 과정에서 대표성의 기준을 만족하려면 참여자들을 과학적 확률 표집에 의거해서 선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공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으로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로써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로 지적되는 ‘합리적 무지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실제로 2005년 8.31 부동산 정책 공론조사 시행 시, 1차 설문 조사에 참여한 511명 중 47명의 토론 참여자를 토대로 공론조사를 실시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464명에게 전체 토론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보내줌으로써, 충분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표성의 오류를 제거하고자 했다. 2차 설문 조사를 하기 전까지 시청·학습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함으로써 토론회 참석자와 같은 양의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정한 정보 습득을 가능케 하였다.

최근 공론조사를 실시한 신고리 5,6호기 사례를 보자. 2017년 7월 7일 정부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정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하였고, 위원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 통계, 갈등 관리 분야 각 2인으로 구성하였다. 위원의 남녀 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의 4대 원칙을 세웠다. 공론화 과정에서 1) 이해 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2)정보, 규칙 등을 제공하고 정하는 데 있어 중립성을 지켰으며, 3)위원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수용성 있는 공론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4)공론화 전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였다. 특히, 공론화 전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증진하기 위해 공론화 검증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검증 결

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증위원회의 활동은 공론화위원회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공론화 시민참여단은 여느 공론조사와 마찬가지로 국민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층화 추출을 위한 이중 추출법을 사용하였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국민(주민등록 기준)들을 지역(16개 시도)·성·연령으로 3차원 층화(160개 층)한 후, 비례 배분한 20,000명을 층화 무작위 추출하여 1차 표본을 구성했다. 1차 표본(20,000명)을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중단/판단유보·성·연령으로 3차원 층화(30개 층)한 뒤, 비례 배분한 500명을 층화 무작위 추출했다(국무총리실, 2017). 다만, 이 공론조사에서는 원전 및 에너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 포함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정책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낳았으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는 취지에서 개별 자격으로 연구원이 참여할 수 있었다.

[표 1-1] 국내외 공론조사 사례

국가	공론조사 의제	조사 시기	1차 조사 참여자(명)	2차 조사 참여자(명)	숙의 기간
호주	입헌군주제와 공화제	99년 10월	1,220	347	2박 3일
덴마크	유로화 도입	00년 8월		364	2박 3일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발전소 소비자 에너지 포럼	04년 11월	852	135	1박 2일
중국	사회간접자본 시설 관련 투자	05년 4월	275	235	1일
그리스	제1 야당의 마루시(Marousi) 시장 후보 선출	06년 7월	1,275	138	1일
유럽연합	유럽의 미래	07년 10월	3,500	362	1일
미국	버몬트주의 미래 에너지 정책	07년 11월	750	146	1박 2일
아르헨티나	라플라타의 교통문제 해소 방안	09년 10월	1,476	62	1일
브라질	공무원의 경력 및 처우 개선	09년 6월	1,651	226	2박 3일
미국	By the People 캘리포니아의 미래	11년 6월	712	412	2박 3일
일본	에너지 환경 정책	12년 8월	6,849	285	10일
한국	8.31 부동산 정책	05년	511	486	1일
한국	한미 FTA	06년	800	599	2일
한국	북항 재개발 프로젝트	07년	1,099	544	1일
한국	GMO	08년	1,518	100	1일

국가	공론조사 의제	조사 시기	1차 조사 참여자(명)	2차 조사 참여자(명)	숙의 기간
한국	통일 정책	11년	-	193	1박 2일
한국	고용 양극화 복지 국민 대토론회	14년	967	254	1박 2일
한국	사용 후 핵연료	15년 3월	2,321	173	1박 2일
한국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17년 10월	20,006	471	2박 3일

출처: 국무총리실. (2017). 신고리 5·6호기『정책권고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 4 미래연구 분야의 공론조사 사례

미래연구 분야에서 공론조사를 실행한 사례들을 살펴보자. 「유럽의 미래 비전」(2007), 미국의 「By the People:캘리포니아의 미래」(2011) 등은 흥미롭다. 「유럽의 미래 비전」(2007)은 27개국 EU 회원국의 362명 시민을 대상으로 EU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 및 외교정책 문제를 논의하였다. 유럽 의회 건물에서 22개 언어로 논의한 공론조사였고, 경제 및 외교정책에 관한 59가지 태도를 조사하였다.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선호도 인식조사였다.

미국은 2002년부터 공영방송인 PBS와 함께 외교정책, 의료보험, 교육정책, 정치 개혁 등에 대한 주제로 「By the People」이라는 공론조사 프로젝트를 시행했다(은재호, 2016). 예컨대, 국가 안보와 경제 이슈(2004), 보건과 교육(2005), 시민의 권리와 책임(2007), 빈곤, 실업, 교육(2009) 등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캘리포니아의 미래에 대한 이 공론조사는 2011년 6월24~26일에 무작위로 추출된 412명의 캘리포니아 시민들이 모여 입법상 대표, 지방 정부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력을 가져야 하는지 등을 포함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PBS NewsHour의 주디 우드러프(Judy Woodruff)가 진행하였으며, 캘리포니아와 다른 지역의 PBS 방송국에서 녹화하여 방송되었다.

한국에서 실시된 바 있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처럼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결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공론조사를 활용한 사례도 찾을 수 있다. 1996년 미국 텍사스주의 각종 발전소 등과 같은 전기 시설에 대한 공론조사, 2007년 미국 버몬트주의 미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론조사, 2012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누출 이후 원자력 관련 공론조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 「버몬트주의 미래: 에너지 정책」(2007) 공론조사는 11월 3~4일까지 버몬트가 미래의 전기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풍력, 원자력 및 수력과 같은 다양한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에 대한 논의부터 국가가 몇 개의 큰 중앙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지리적으로 분산시켜 규모가 작은 시설에 더 의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 등을 진행하였다.

호주의 「입헌군주제와 공화제 논의」(1999)처럼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국가 재정을 소요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논의나 법과 제도들에 관한 논의도 있다. 경제성 분석과 환경영향평가를 시도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선택하기도 하고, 국민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타국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공론조사도 있었다.

미래 가치를 고려하여 문제 해결을 해석하고자 하는 공론조사는 싱가포르에서 실시한 것이 눈에 띈다. 「Our Singapore Conversation Survey」는 4,000명의 싱가포르인이 원하는 2030년의 선호미래와 현재 해야 할 우선 순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 또한, 2030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가치들과 주요 이슈에 대한 선호를 조사했다. 조사의 주제 중 하나로, 경력 향상의 기회와 편안한 삶 중에서 선택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싱가포르인들은 가족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효(孝), 안전, 정직, 공손 등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싱가포르인들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였다.



## 제2장

### 선호미래상 도출 및 국민숙의토론 설계와 진행

---

제1절 선호미래상 도출

제2절 국민숙의토론 설계 및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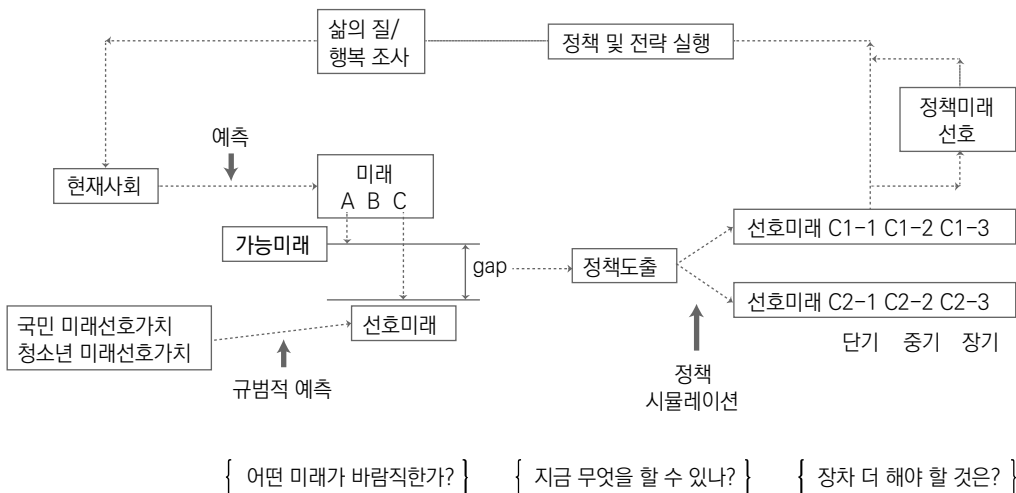
# 제 1절 선호미래상 도출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선호미래의 정의

선호미래(preferable futures)는 가능미래(possible futures)와 달리 규범적이고 정치적인 특성을 갖는다. 누군가가 선호하는 미래이기 때문에 정치적 특성을 띠고, 미래상에 가치를 반영하는 작업이기에 규범적 특성을 띤다. 선호미래는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한 여러 미래들 중에 개인, 조직,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바라는 미래로 정의할 수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수행한 국민 선호미래 연구는 “미래에 대한 국민의 희구(希求)가 무엇인지 밝혀내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힌다(박성원 외, 2018: 2, 그림 2-1 참조).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들이 원하는 미래를 도출하고 실현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림 2-1] 국민 선호미래 연구 과정도



[그림 2-1]은 선호미래 연구가 무엇이고 이 연구가 미래의 예측과 전략 연구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가능한 미래들을 예측하고 이를 시나리오로 구성해 국민들과 숙의토론을 통해 어떤 미래로 가는 것이 사회에 이로운지를 결정한다. 이처럼 선호미래를 결정한 뒤, 이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단기, 중기,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이를 하나씩 실현한다. 선호미래를 실현하는 정책, 전략이 잘 수행되면 국민의 행복도는 높아지고, 사회는 선호미래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 2 선호미래 도출 과정

국가 수준의 선호미래는 어떻게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할까. 연구 기간과 연구비, 연구 인력이 충분하다면 지역별로 지역 주민을 무작위로 추출해 구성한 뒤, 이들과 장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 닥칠 다양한 미래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그 가능한 미래 중에 시민들이 원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밝혀낼 수 있다. 이런 작업은 통상 한 지역만 잡아도 1~2년은 소요된다.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시간은 더 걸린다.

우리는 연구비, 연구 기간의 한계로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 우선 국민이 우리 사회가 실현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탐색했다. 2019년 1월 국회미래연구원은 ‘정책 미래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의 연구진은 사회, 경제, 환경, 에너지, 과학기술, 문화, 정치 등의 영역에서 미래의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도출한 뒤, 이런 이슈를 해결할 방안을 두 개로 분류해 전국의 시민 3000명(만15세 이상 65세 이하 전국 남녀)에게 온라인 조사로 어떤 방안을 선호하는지 물었다. 총 17개의 미래 이슈와 미래 이슈별 대립하는 정책 34개를 두 쌍으로 각각 제시하고, 국민의 선호를 물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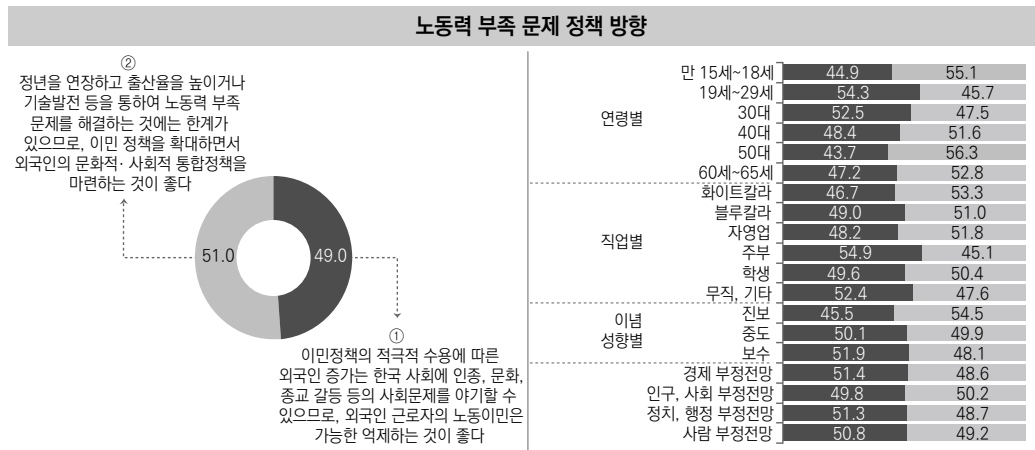
예를 들면,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노동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며,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방안: 이민정책의 적극적 수용에 따른 외국인 증가는 한국 사회에 인종, 문화, 종교 갈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이민은 가능한 억제하는 것이 좋다.

둘째 방안: 정년을 연장하고 출산율을 높이거나 기술 발전 등을 통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민정책을 확대하면서 외국인의 문화적, 사회적 통합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정책을 놓고 국민에게 선호를 물었다. [그림 2-2]는 두 가지 정책에서 국민 중 누가(성별·연령별·직업별·이념성향별 등) 어떤 정책을 선호했는지 나타낸다.



[그림 2-2] 노동이민 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 결과

우리는 이런 결과를 활용해 국민이 어떤 가치를 더 선호하는지, 어떤 가치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민은 변화 수용의 정도와 속도, 변화 기간, 변화의 주체 등 3가지 측면에서 선호 의견이 나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선호미래를 구성할 때 중요한 가치의 축이 된다. 즉, 국민은 선호미래를 상상할 때 3가지의 가치 축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3가지 가치 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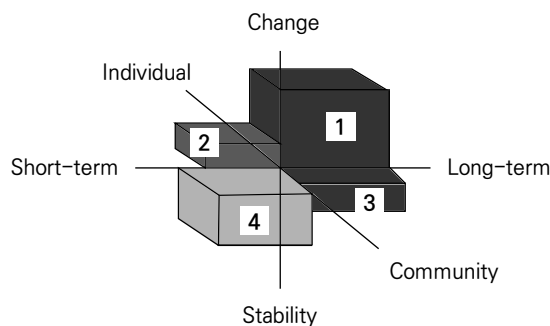
### □ 변화 수용의 정도와 속도(변화 Change 대 안정 Stability)

- 변화(change or challenge)를 선호하는 국민들은 도전해야 기회도 많아지고 활동 영역도 넓어진다고 믿는다. 변화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유연(plasticity), 적응(adapt), 성장(growth), 혁신(innovating), 탐색(exploring), 기회(opportunity), 확장(expanding) 등의 태도가 엿보인다.

- 안정(Stability)을 선호하는 국민들은 사회가 급변해도 지켜야 할 정체성과 가치가 있고,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체성(identity), 견고한 토대(solid foundation), 안전성(security),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 일관성(consistency), 규격(standard)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가치가 사회에 우선해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변화의 기간(미래지향적 Long-term 대 현재지향적 Short-term)

-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내한다. 노력하면 언젠가는 미래가 더 좋아질 것으로 믿는다. 이 가치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미래지향성(future-oriented), 미래세대(future generations),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가치(value), 생태(ecology) 등의 키워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 반면, 현재지향적인 사람들은 미래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믿는다. 이들에게 미래는 불확실성이 높다. 불확실한 것에 기대를 거는 것보다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현재지향성(present-oriented), 생존(survival), 분기별 이익률(quarterly earnings), 정확성(accuracy), 민첩성(agility) 등을 중요한 키워드로 삼는다.



[그림 2-3] 3가지 선호 가치의 축

## □ 변화의 주체(개인 Individual 대 공동체 Community)

- 변화의 주체는 개인이고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고 능력 있는 개인이 많을수록 사회는 발전한다고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권리(rights), 자유(liberty, freedom), 독립성(independence), 경쟁(competition), 소유권(ownership) 등의 키워드를 선호한다.
- 반면, 변화의 주체는 공동체이고 공동체의 연대와 결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공동의 선을 이루려는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사회가 발전한다고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연대(solidarity), 공공선(common good), 국가 공인(state guarantee), 집단지성(collective wisdom), 조화(harmony) 등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

3가지 가치의 축을 조합하면 이론적으로 8가지의 선호미래상이 도출된다[그림 2-3]. 이 작업을 완료한 뒤, 우리는 앞서 설명한 17개 분야 34개의 정책(특정 가치가 반영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다시 살펴보았다. 국민의 선호가 어느 가치를 더 우선하는지 살펴 보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3가지의 가치 축은 2가지로 융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4가지의 선호미래상으로 귀결되는 것을 발견했다[표 2-1]. 즉, 변화지향(change)과 미래지향(long-term)이 하나로 묶이고, 안전지향(stability)과 현재지향(short-term)이 하나로 묶였다. 달리 말해, 변화를 지향하는 태도와 현재지향은 잘 어울리지 않고, 반대로 안전지향적 태도는 미래지향과 잘 어울리지 않았다. 현재의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이 불확실성이 높은 장기적 미래를 선호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선호미래 구성의 중요한 축을 발견한 과정을 정리하면, 우선 2050년 미래 예측을 통해 17개 분야의 34개 정책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깊이 있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임을 발견했다. 이 34개의 정책이 도출되는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3가지의 주요 가치 축이 대립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3가지의 가치 축을 교차하면 8가지의 미래 사회상이 나온다. 우리는 다시 34개 정책 선택지에서 국민이 선호하는 정책이 무엇이었는지 그 결과를 다시 훑어보면서 결국 두 가지 가치 축이 대립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를 통해 [표 2-1]에서 제시하듯 4가지의 미래 사회상을 도출하게 되었다.

[표 2-1] 3가지 가치의 축이 만들어내는 4가지 미래상

	변화 지향 & 미래 지향 Change & Long term	안전 지향 & 현재 지향 Stability & Short term
개인의 자유 Individual-freedom	선호미래 1	선호미래 2
공동체 연대 Community-solidarity	선호미래 3	선호미래 4

선호미래1은 변화 지향, 미래 지향, 개인의 자유 중시가 결합된 미래다. 선호미래2는 안전 지향, 현재 지향, 개인의 자유 중시가 결합된 미래다. 선호미래3은 변화 지향, 미래 지향, 공동체 연대 중시가 결합된 미래이며, 선호미래4는 안전 지향, 현재 지향, 그리고 공동체 연대 중시가 결합된 미래이다.

34개의 정책 미래 조사를 통해 8개에서 4개로 선호미래상을 좁힌 뒤, 우리는 4가지 미래가 추구하는 가치를 대입해보았다. 내부 연구진과 외부 자문을 받아 선호미래별로 가치를 대입했다. [표 2-2]를 보면 선호미래1은 성장, 경쟁, 도전, 변화 지향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선호미래2는 성장, 경쟁, 안정, 현행 유지를 바란다. 선호미래3은 분배, 협력, 도전, 변화 지향을, 선호미래4는 분배, 협력, 안정, 현행 유지를 추구한다.

[표 2-2] 선호미래 작업(주요 가치 기반의 미래사회 구분법)

	미래 중심 (도전/변화 지향)	현재 중심 (안정/현행 유지)
개인 자유 (성장·경쟁)	선호미래1: 성장, 경쟁, 도전, 변화 지향	선호미래2: 성장, 경쟁, 안정, 현행 유지
공동체 연대 (분배·협력)	선호미래3: 분배, 협력, 도전, 변화 지향	선호미래4: 분배, 협력, 안정, 현행 유지

연구진은 다시 선호미래별로 추구하는 중심 가치를 좀 더 분명하면서도 요약적으로 표현해보았다[표 2-3]. 그 결과, 선호미래1은 도전적 성장과 변화지향적 경쟁으로, 선호미래2는 안정적 성장과 현행 질서를 유지하면서 경쟁을 선호하는 미래다. 선호미래3

은 장기적 분배와 변화 지향적 협력을, 선호미래4는 단기적 분배와 현재의 관행을 유지하는 협력을 추구한다. 이렇게 정리해보니 선호미래별로 차이가 더욱 뚜렷해졌다.

[표 2-3] 선호미래별 뚜렷한 가치의 차이

	미래 중심 (도전(장기)/변화 지향)	현재 중심 (안정(단기)/현행 유지)
개인 자유 (성장/경쟁)	선호미래1: 도전적 성장, 변화 지향 경쟁	선호미래2: 안정적 성장, 현행 유지 경쟁
공동체 연대 (분배/협력)	선호미래3: 장기적 분배, 변화 지향 협력	선호미래4: 단기적 분배, 현행 유지 협력

연구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선호미래별로 추구하는 가치를 고려하면서, 각 미래가 어떤 사회의 모습을 바라고 있는지 의논했다. 그 결과, 도전적 성장과 변화 지향의 경쟁을 추구하는 선호미래1을 급진성장 사회로 명명했다. 안정적 성장과 현행 유지의 협력을 추구하는 선호미래2는 안정성장 사회로 이름 붙였다. 같은 방법으로 선호미래3은 보존분배 사회, 선호미래4는 현존분배 사회로 명명했다. 보존분배사회는 현재세대가 쓸 자원을 보존해서 미래세대가 쓰도록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간주하는 사회다. 반면, 현존분배 사회는 현재세대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현재세대가 골고루 분배해서 사용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간주하는 사회다.

[표 2-4] 선호미래별 사회상의 차이

	미래 중심 (도전/변화 지향)	현재 중심 (안정/현행 유지)
개인 자유 (성장·경쟁)	도전적 성장 × 변화 지향 경쟁 = 급진성장 사회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급진성장)	안정적 성장 × 현행 유지 경쟁 = 안정성장 사회 (지금 생존을 위한 안정성장)
공동체 연대 (분배·협력)	장기적 분배 × 변화 지향 협력 = 보존분배 사회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자원 보존)	단기적 분배 × 현행 유지 협력 = 현존분배사회 (현재세대를 위한 환경자원 분배)

연구진은 마지막으로 4가지 선호미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결합해 구성될 수 있는지 논의해보았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연대라는 상반된 가치는 성장이나 분배나, 민간 중심이나 정부 중심이나, 절차적 공정성 중시나 결과적 형평성 중시나 등에 따라 나뉠 것으로 보았다. 변화(도전)와 미래 지향은 안전과 현재 중심과 대별되는 가치다. 이 대별되는 가치에 따라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활용할지, 빠른 변화를 추구할지 완만한 변화를 추구할지,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갈지 아니면 원자력/화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표 2-5]에서 제시한 10가지 요소별로 4가지 미래 사회상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급진성장 사회의 경우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분배보다 성장이 우선이며 세금과 복지는 중부담 중복지 수준을 선호하고 정부보다 민간기업 중심, 결과적 형평성보다 절차적 공정성(절차가 공정하다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감수)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급진성장사회와 대칭을 이루는 보존분배 사회의 경우, 공동체 연대를 중시하고 성장보다 분배를, 고부담 고복지의 사회시스템을, 민간보다 정부 중심의 나라 운영을 선호한다. 또한 과학기술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체제로 갈 것을 선호하며, 빠른 변화를 추구하고 안정보다는 변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5] 4가지 선호미래의 10대 구성요인

2050년 미래 사회	급진성장 사회	안정성장 사회	보존분배 사회	현존분배 사회	
개인	자유/연대	개인 자유 중시	개인 자유 중시	공동체 연대 중시	공동체 연대 중시
	성장/분배	성장 중심	성장 중심	분배 중심	분배 중심
대	세금/복지	중부담 중복지	중부담 중복지	고부담 고복지	고부담 고복지
	정부/민간	민간 중심	민간 중심	정부 중심	정부 중심
공동체	공정/형평	절차적 공정성 중시	절차적 공정성 중시	결과적 형평성 중시	결과적 형평성 중시
도전미래 중심	환경/자원	미래세대 중심	현재세대 중심	미래세대 중심	현재세대 중심
	과학기술	적극적 활용	안정적 활용	적극적 활용	안정적 활용
대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중심	원자력, 화석에너지 중심	신재생에너지 중심	원자력, 화석에너지 중심
	안전현재 중심	사회변화	빠른 변화 추구	완만한 변화 추구	빠른 변화 추구
도전/안정		도전/변화 추구	안정/현행 유지	도전/변화 추구	안정/현행 유지

연구진은 위의 도표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10가지 구성 요소가 포함된 하나의 미래 시나리오를 써보았다. 선호미래별로 10가지의 구성 요소를 적절하게 고려하면서도 각 미래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변수들을 조정했다.

예를 들면, [표2-6]에서 P미래로 표시한 선호미래1의 사회 구성원은 급진성장 사회의 특징을 고숙련 외국인이 증가하고 인간의 몸이 변형된 트랜스 휴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선호미래2(Q미래로 표시)의 사회 구성원은 트랜스 휴먼같은 급진적인 인간형은 보이지 않고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의 증가 정도로 사회 구성원의 특징을 언급했다. 선호미래3의 경우(R미래로 표시) 다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시민의 증가에 성차별이 적은 사회 그리고 노인이 되어서도 일을 하는 생애 현역자의 증가를 특징으로 보았다. 선호미래4(T미래로 표시)는 공동체 내에 다양한 이웃이 증가하는 정도로 사회 구성원의 특징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주거 환경, 자연환경, 대인관계, 가족관계, 일터, 중요하게 간주하는 가치 등에서 4가지 미래 사회는 차이가 있다. 앞서 [표 2-5]에서 언급한 10가지의 요인은 4개의 미래 사회를 구성하는 요인이고, [표 2-6]에서 언급한 사회 구성원, 주거, 자연환경, 대인 및 가족관계, 일터의 모습 등은 각 미래가 나타난 현상을 표현한다.

[표 2-6] 4가지 미래 사회상의 차별점

		P미래	Q미래	R미래	T미래
주요 결과	사회 구성원	고숙련 외국인 증가, 트랜스 휴먼 등장	외국인 이민/노동자 증가	다문화 공생, 생애 현역, 젠더 프리	공동체의 다양한 이웃 중심
	주거 환경	스마트 시티 (어느 곳이든 연결)	메가 시티 (대도시 중심)	대중소 도시+농촌 공존 (탄소 제로 사회)	중소 도시+마을공동체
	자연 환경	기후변화 1.5°C 상승 여름철 평균 일 최고기온 2°C 상승, 평균 폭염일수 28.5일 (2001~2010년 서울 11.1일) 곤충 6%, 식물 8%, 척추동물 4% 서식지 절반 감소 연안 홍수 위험 보통	기후변화 2.5°C 상승 여름철 평균 일 최고기온 3°C 상승, 평균 폭염일수 45.4일 (2001~2010년 서울 11.1일) 곤충 18%, 식물 16%, 척추동물 8% 서식지 절반 감소 연안 홍수 위험 높음	기후변화 1.5°C 상승 여름철 평균 일 최고기온 2°C 상승, 평균 폭염일수 28.5일 (2001~2010년 서울 11.1일) 곤충 6%, 식물 8%, 척추동물 4% 서식지 절반 감소 연안 홍수 위험 보통	기후변화 1.5°C 상승 여름철 평균 일 최고기온 2°C 상승, 평균 폭염일수 28.5일 (2001~2010년 서울 11.1일) 곤충 6%, 식물 8%, 척추동물 4% 서식지 절반 감소 연안 홍수 위험 보통
	대인 관계	가상현실 만남 지향	온/오프라인 개인 취향 중심 만남	오프라인/사이버 공동체 만남 활발	오프라인 공동체 만남 선호
	가족 관계	1인 가구+유사 가족 +사이버 가족	1인 가구 증가, 가족 유형 점진적 다양화	공동체 가족+유사 가족 공존	전통+공동체 가족



		P미래	Q미래	R미래	T미래
	일터	온라인 플랫폼 기반, 로봇이 인간 일 대체	새로운 대기업 출현+ 온라인 플랫폼 혼합	대기업+중소기업 공생, 온라인 플랫폼 기반, 노동시장 자유로운 이동	거주 지역 중심
	상대적으로 중요한 가치	자유, 혁신, 성공	공정한 경쟁, 전문성, 효율성	공공 이익, 협력, 위기 대응성, 책임성	대화/소통, 신뢰, 친밀감

※ 모든 시나리오에서 남북한 통일 변수는 제외(현재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들고 직접 국민들과 만나 어떤 미래를 가능하다고 예상하는지, 그리고 어떤 미래를 선호하는지 들어보았다. 숙의토론이 가능한 공론조사의 형식을 빌려 국민들과 6시간 동안 미래를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 제2절

## 국민속의토론 설계 및 진행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사전조사의 필요성과 개요

오프라인으로 국민속의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전국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호 미래 사전조사를 진행하였다. 사전조사는 두 범주로 상반되는 10가지의 가치 선택 목록에서 고르도록 하였다. 상반되는 가치는 미래 중심(도전/변화지향)과 현재 중심(안정/현행유지), 성장과 분배, 경쟁(개인/자유)과 협력(공동체/연대) 등 앞서 언급한 10가지 가치 목록에서 제시된 것들이다. 3,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조사에서 미래 사회 구성 요인별 인구통계학적 선호 성향을 파악하고 이후에 진행되는 500명의 국민 참여단 구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 가. 성별 분포

응답자 성별은 남성이 1,527명(50.9%)으로 여성(1,473명, 49.1%)이었다.

#### 나. 연령별 분포

40대가 683명(2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가 678명(22.6%), 20대가 594명(19.8%), 30대가 584명(19.5%), 60대가 461명(15.4%) 순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비율을 따랐다.

#### 다. 지역별 분포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의 표본이 931명(31%)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서울이 590명(19.7%), 부산/울산/경남이 464명(15.5%), 대전/세종/충청이 310명(10.3%), 대구/경북이 295명(9.8%), 광주/전라가 286명(9.5%), 강원/제주가 124명(4.1%)이었다. 실제 지역별 인구 현황을 반영했다.

## 라. 직업별 분포

직업별로는 샐러리맨이나 사무직 노동자를 일컫는 화이트칼라가 1,111명(37%)으로 가장 많으며,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블루칼라가 517명(17.2%)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주부(461명, 15.4%), 무직 또는 기타(431명, 14.4%), 학생(258명, 8.6%), 자영업(222명, 7.4%) 순이었다.

[표 2-7] 표본 설계

(명)	연령대										합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62	63	62	62	64	65	60	63	42	47	590
부산	20	18	19	18	21	21	23	24	18	20	202
대구	16	13	13	13	16	17	17	17	11	12	145
인천	19	17	18	17	20	20	20	20	12	12	175
광주	9	9	8	8	10	10	9	9	5	6	83
대전	10	9	9	8	10	10	10	10	6	6	88
울산	8	6	7	6	8	8	9	8	5	5	70
경기	79	72	79	76	93	90	86	82	49	50	756
강원	9	7	7	7	10	9	11	11	8	8	87
충북	10	8	9	8	10	10	11	10	7	7	90
충남/세종	13	11	14	13	16	14	15	14	11	11	132
전북	10	9	9	8	12	11	12	12	9	9	101
전남	10	8	9	8	12	10	13	12	10	10	102
경북	15	12	14	12	17	15	19	18	14	14	150
경남	19	16	19	17	23	22	23	22	15	16	192
제주	4	3	4	3	5	4	4	4	3	3	37
합계	313	281	300	284	347	336	342	336	225	236	3000

[표 2-8]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 전체 ■		(3000)	100.0
성별	남자	(1527)	50.9
	여자	(1473)	49.1
연령별	19~29세	(594)	19.8
	30대	(584)	19.5
	40대	(683)	22.8
	50대	(678)	22.6
	60대	(461)	15.4
지역별	서울	(590)	19.7
	경기/인천	(931)	31.0
	대전/세종/충청	(310)	10.3
	광주/전라	(286)	9.5
	대구/경북	(295)	9.8
	부산/울산/경남	(464)	15.5
	강원/제주	(124)	4.1
직업	화이트칼라	(1111)	37.0
	블루칼라	(517)	17.2
	자영업	(222)	7.4
	주부	(461)	15.4
	학생	(258)	8.6
	무직, 기타	(431)	14.4

## 2 국민속의토론 설계 및 진행

앞서 설명한 3,00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했다는 점은 공론조사 과정에서 ‘정보화’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우리가 공론조사에서 만난 502명은 앞서 사전조사 대상인 3,000명에 포함된 시민으로 이들은 공론조사에 참여하기 전 미래문제에 대해 1차로 학습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502명의 공론조사 참여자들은 공론조사장에 오기 2주 전부터 7가지 미래 이슈와 4가지 미래 시나리오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

받아 학습할 기회가 주어졌다. 502명의 공론조사 참여자들은 2번 사전 학습의 기회를 가졌다. 공론조사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시간도 있어 선호미래를 선택하는데 다양한 정보화 과정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온라인 선호미래 사전조사에 참여한 3,000명의 표본 중 3개 권역별 인구 규모를 감안하여 100-250명을 각각 할당하였다. 총 502명이 참여한 국민숙의토론은 20대와 30대가 전체 참여자의 50%를 차지하도록 연령을 층화해 임의 할당한 후 배분하였다. 2050년의 미래에 20대와 30대는 선배 세대가 은퇴한 이후 사회를 주도할 세대이기에 이들의 의견을 더 듣기 위해 더 많이 모집했다.

3개 권역별 국민 참여단의 지역은 고르게 구성하였다. 서울권역은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및 강원도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포함했다. 대전권역은 대전, 충청, 광주 및 호남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포함했다. 부산 권역은 부산, 대구, 울산 및 영남에 거주하는 시민들로 구성하였다. 실제 인구 현황 및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서울 권역이 가장 많은 250명, 대전권역 100명, 부산권역 150명을 할당했다.

서울권역 국민숙의토론은 2019년 11월 30일 토요일 13시부터 18시까지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진행되었다. 강원도에서 12명, 경기도에서 89명, 서울에서 130명, 인천에서 19명으로 총 250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률은 100%였다. 대전권역 국민숙의토론은 2019년 11월 23일 토요일 13시부터 18시까지 대전 예술의 전당 컨벤션홀에서 진행되었다. 광주에서 16명, 대전에서 30명, 세종에서 2명, 전라남도에서 6명, 전라북도에서 15명, 충청남도에서 16명, 충청북도에서 19명으로 총 104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률은 104%였다. 부산권역 국민숙의토론은 2019년 11월 24일 일요일 13시부터 18시까지 부산 코모도호텔 해마루홀에서 진행되었다. 대구에서 28명, 부산에서 52명, 울산에서 19명, 경상남도에서 32명, 경상북도에서 17명으로 총 148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률은 98.7%였다.

국민선호미래 연구는 사전 및 사후조사를 통해 4가지 미래상에 대한 국민 참여단의 선호미래뿐 아니라 가능미래와 회피미래도 파악해보았다. 공론조사에서는 자료집과 연구진의 발표 청취를 통해 미래 사회 구성요인별 선호도조사, 선호미래관련 7개 핵심질문과 대한민국 4가지 미래상에 대한 숙의를 진행했다[표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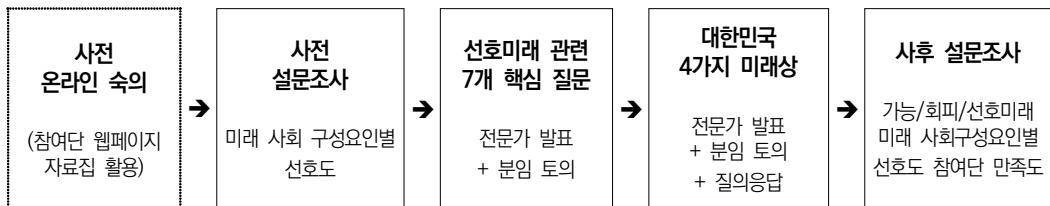
속의토론 공론조사는 미래 이슈 논의, 2차례의 분임 토의, 질의응답 및 설문 조사로 구성 및 진행했다. 사전 및 사후조사 모두 미래 사회 구성요인별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속의토론 공론조사를 통해 참여자들의 의견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속의토론 프로그램 중 <발표1>에 해당하는 7개 질문(미래 이슈)은 다음과 같다.

- ①우리는 어떤 주거 환경에서 살게 될까요? (부동산, 인프라, 우주)
- ②우리는 어떤 자연환경에서 살게 될까요? (기후/에너지, 환경, 식량 자원)
- ③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게 될까요? (가족제도, 이민)
- ④우리의 일터는 어떤 모습일까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복지/노동)
- ⑤우리는 어떤 정치체제에서 살게 될까요? (지방분권, 정치 갈등)
- ⑥우리는 어떤 국제 정세에서 살게 될까요? (외교 안보)
- ⑦우리는 몸과 생명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명기술, 안락사)

앞서 언급한 7개 미래 이슈는 미래를 예측할 때 고려해야 하는 핵심 의제들이다. 우리는 참여자들에게 곧바로 선호미래를 상상하도록 하지 않고, 천천히 미래 사회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과정을 설계했다. 미래 예측을 한다면 적어도 7가지 이슈는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슈별로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하도록 했다. 논의의 집중을 위해 각 논의 테이블별(한 테이블에 10명씩)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래 이슈 2개를 꼽으라고 요청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국민이 미래를 예상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표 2-9] 2050년 국민의 선호미래 조사를 위한 속의토론 프로그램**



시간	내용
13:00-13:20	등록 및 간식, 사전 설문
13:20-13:45	개회사 환영사 (박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공론화 취지 안내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13:45-13:55	〈여는 마당〉 - 인사 및 소감 나누기
13:55-14:15	〈발표1〉 선호미래 관련 7개 핵심 질문(이슈)는 무엇인가? (박성원 연구위원)
14:15-14:55	〈1차 분임 토의〉 내가 생각하는 핵심 이슈는 무엇인가?
14:55-15:10	1차 분임 토의 전체 공유
15:10-15:20	휴식
15:20-16:00	〈발표2〉 대한민국 미래상 관련 4가지 옵션 : 미래상 도출 경위와 주요 특징 (국회미래연구원 김홍범, 민보경, 정영훈, 박성원 연구위원)
16:00-16:40	〈2차 분임 토의〉 4개 미래상 관련 대표 질문 도출 4개 미래상별 주요 특징은 무엇이라 이해하나요? 궁금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16:40-16:50	휴식
16:50-17:30	〈질의응답〉 4개 미래상에 대한 국민 참여단 질의
17:30-17:55	〈설문 조사 및 평가/ 소감 나누기〉
17:55-18:00	향후 일정 안내 및 폐회

〈발표2〉에서는 2050년 대한민국의 가능한 4가지 미래 사회의 모습을 소개했다. 이 시나리오는 선호미래상 도출에서 설명한 바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은 4가지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를 고려하고, 미래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요소의 흐름을 예측하면서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2050년 미래예측팀에서 만든 자료를 참조했다. 미래예측팀은 미래 사회의 주거 환경, 자연환경, 경제/사회 환경, 정치 환경, 보건의료 및 과학기술 환경 분야에서 2050년을 예측했고, 우리는 이 자료를 활용해 선호미래 시나리오 4가지를 작성하는 데 참고했다.

여기서 도출한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 우리는 P, Q, R, T미래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름에 특정한 가치나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으면 국민 참여단이 면밀히 미래를 검토하기도 전에 선입견을 가질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이름을 별 의미 없이 알파벳 P부터 시작 T까지 붙였다(순서로 보면 맨 끝이 S지만, S가 Super라는 의미로 통용되어 또 다

른 선입견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T로 이름을 붙였다). 각 미래는 사회 구성원, 주거 환경, 자연환경, 대인 관계, 가족 관계, 일터 및 상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기본 재료로 구성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2차 분임 토의>에서 국민 참여단은 4개 미래 시나리오를 읽고, 관련한 질문을 도출했다. 무엇보다 국민 참여단이 4개 미래 사회의 주요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자면 미래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질문과 답변의 과정이 필수였다. 국민 참여단이 최종 선호미래 등을 선택하기 전,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여기서 참여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자신이 이해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심화시켰다.

4가지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 후 국민 참여단은 주어진 설문지에 자신이 선호하는 미래와 이유,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미래와 그 이유,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될 회피미래와 그 이유에 대해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선호미래를 염두에 두고 이 선호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10가지 조건에 답했다. 10가지 조건이란 앞서 나왔던 선호미래를 구성하는 10가지 요소를 말한다.





[그림 2-4]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의 4가지 미래 설명과 질의응답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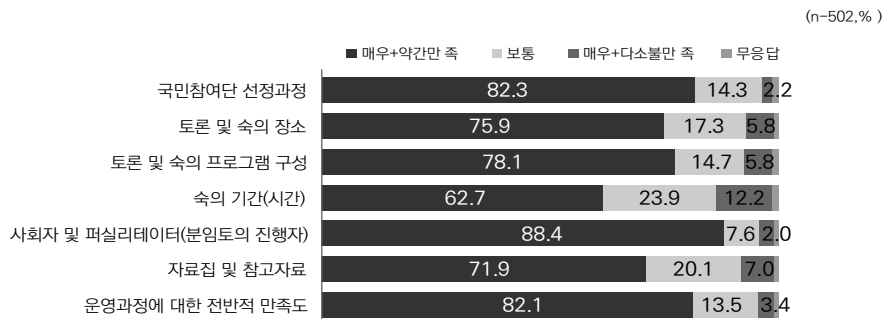
[그림2-4]는 국민참여단의 분임 토의 및 질의응답하는 모습이다. <1차 분임 토의>에서는 7개 이슈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 2개를 선택했고, <2차 분임 토의>에서는 4개 미래 사회상 관련 질문을 제기했다.



[그림 2-5] 4개 미래 사회 관련 대표 질문 도출 및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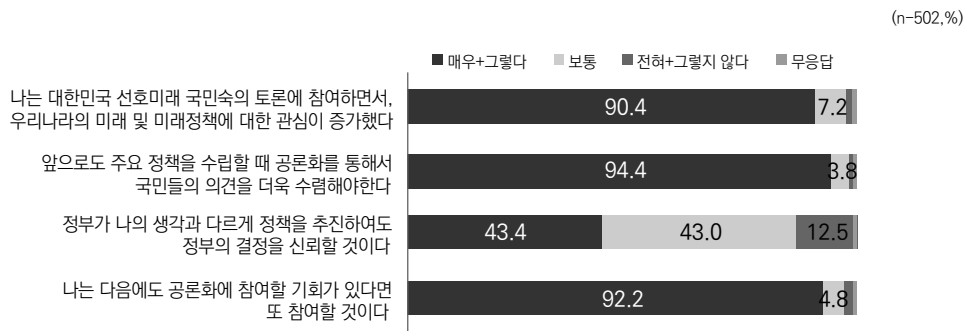
<2차 분임 토의>에서 도출한 대표 질문들을 토론장 뒷면에 준비된 ‘질문 주차장’에서 일괄적으로 수집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은 대표 질문에 답변했다[그림2-5].

우리는 국민 참여단이 선호미래를 선택하는데 적절한 정보를 얻었는지, 토론의 과정이 적절했는지, 시간은 충분했는지 평가했다. 국민 참여단은 토론 및 속의장소, 토론 및 속의 프로그램 구성, 속의 시간, 자료집 및 참고자료의 제공, 운영과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서 대부분 70~80%의 만족도를 보였다. 다만, 속의시간의 만족도는 62.7%였는데, 다소 부족했다는 아쉬움으로 읽혔다[그림 2-6].



[그림 2-6] 국민속의토론 및 공론조사 만족도

국민 참여단은 선호미래 국민속의토론에 참여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와 미래정책에 대해 관심이 증가(90.4%)했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94.4%)고 언급했다.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정부가 나의 생각과 다른 정책을 추진하여도 정부의 결정을 신뢰하겠다는 응답에는 43%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인 셈이다[그림 2-7].



[그림 2-7] 선호미래 국민속의토론 및 공론조사 인식



# 제3장

## 선호미래 조사 결과

---

제1절 선호미래 사전조사 결과

제2절 국민 선호미래 공론조사 결과

제3절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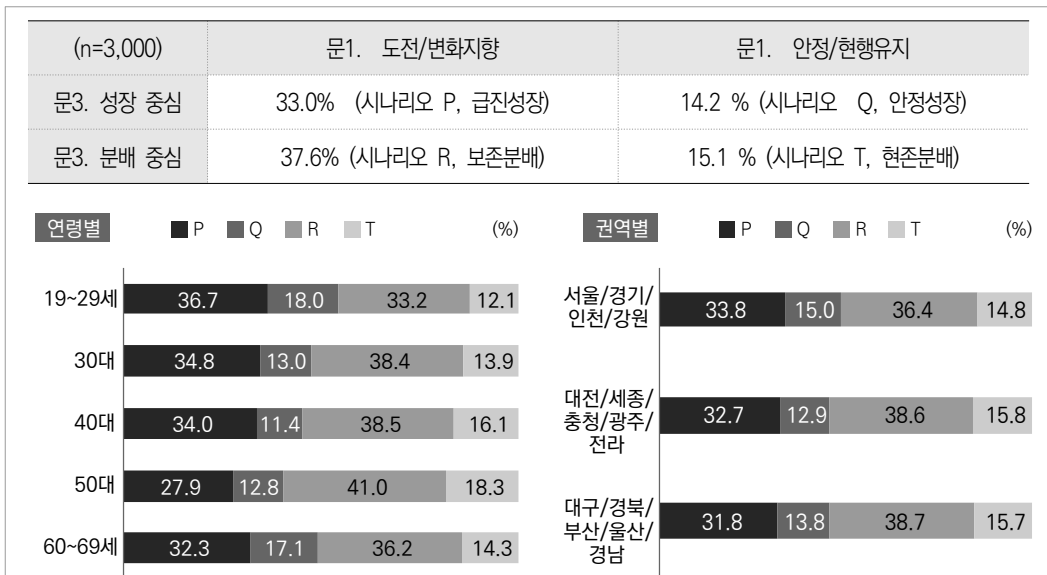
## 제 1절

## 선호미래 사전조사 결과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3,000명 온라인 사전조사 결과

선호미래 사전조사의 목적은 국민숙의토론에 참여할 최종 500명을 선별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밝혔듯 공론조사는 대표성이 중요한 이슈다. 500명의 공론조사 참여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3,000명의 시민들에게 선호미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물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3,000명의 의견 분포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3-1] 3,000명 응답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및 의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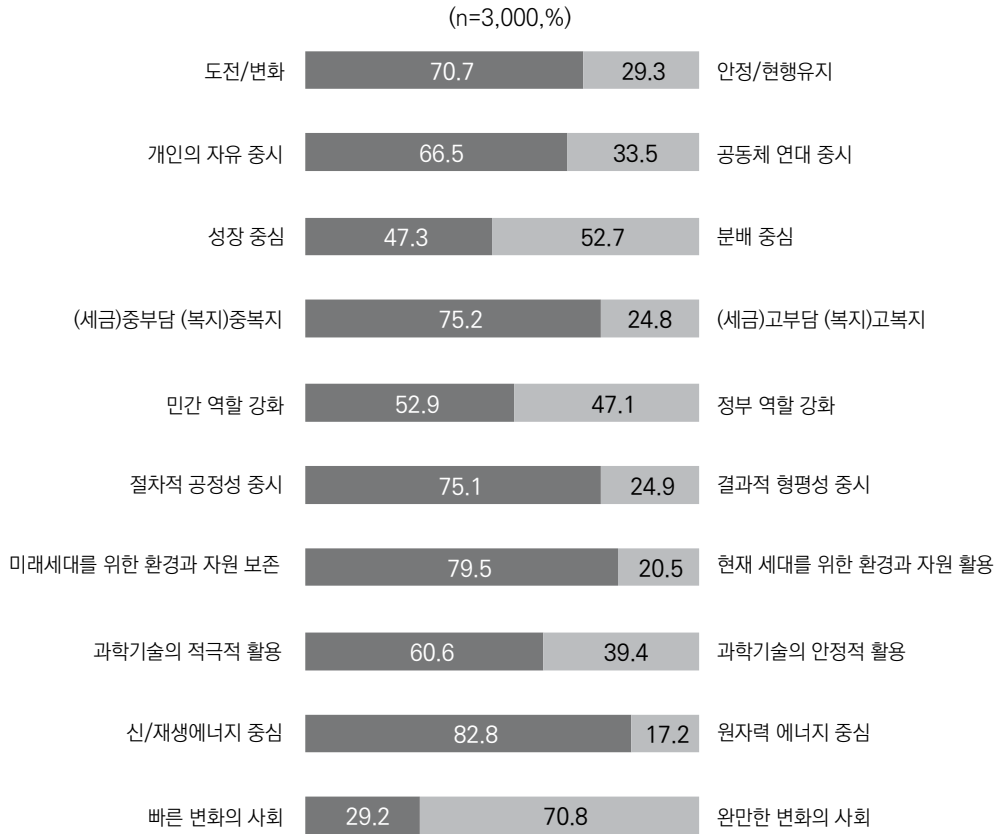
[그림 3-1]은 3,000명의 의견 분포를 나누는 기준을 보여준다. 우리는 10가지 미래 구성요소별 질문에 답변을 조사하면서 도전/변화지향과 안정/현행유지, 성장 중심과 분배 중심이라는 가치가 3,000명의 의견을 적절하게 나눌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보았다. 그 결과 도전/변화지향과 성장 중심을 선택한 응답자가 33%, 안정/현행유지와 성장 중심을 선택한 응답자 14.2%, 도전/변화지향과 분배 중심을 선택한 응답자 37.6%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현행유지와 분배 중심을 선택한 응답자 15.1%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이 네 그룹이 한국 사회를 대표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최종 국민숙의토론 공론조사에 참여할 500명은 앞서 언급한 네 그룹의 비율로 모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간주했다.

사전 온라인 조사 참여자 3,000명이 10가지 선호미래 구성요소에 대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자. 도전/변화와 안정/현행유지 중에서 70.7%가 도전/변화를 중요하다고 선택하였다. 개인의 자유 중시와 공동체 연대 중시라는 항목에서는 66.5%의 응답자가 개인의 자유 중시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성장 중심과 분배 중심 항목에서는 52.7%가 분배 중심이 중요하다고 선택했다.

(세금)중부담 중복지와 (세금)고부담 고복지 항목 중에서 75.2%가 (세금)중부담 중복지를 선택했다. 민간 역할 강화와 정부 역할 강화 항목 중에서 52.9%가 민간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고 선택했다. 절차적 공정성 중시와 결과적 형평성 중시 항목 중에서 75.1%가 절차적 공정성 중시를 중요하다고 선택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과 자원 보존과 현재세대를 위한 환경과 자원 활용 항목 중에서 79.5%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과 자원 보존이 중요하다고 선택했다. 과학기술의 적극적 활용과 과학기술의 안정적 활용 항목 중에서 60.6%가 과학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하다고 선택했다. 신/재생에너지 중심과 원자력 에너지 중심 항목 중에서 82.8%가 신/재생에너지 중심이 중요하다고 선택했다. 빠른 변화의 사회와 완만한 변화의 사회 항목 중에서 70.8%가 완만한 변화의 사회가 중요하다고 선택했다.

정리하면, 3,000명의 응답자는 도전과 변화, 개인의 자유 중시, 분배 중심, (세금)중부담 중복지, 민간 역할 강화, 절차적 공정성 중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과 자원 보존, 과학기술의 적극적 활용, 신/재생에너지 중심, 그리고 완만한 변화의 사회를 더 중요하다고 선택했다.



[그림 3-2] 3,000명 온라인 사전조사 참여자의 미래 사회 구성요인별 선택



## 제2절

## 국민 선호미래 공론조사 결과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7가지 미래 이슈 인식 조사

공론조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선호미래를 확인하기 전, 우리는 502명 참여자들과 장기적 미래를 예측하는데 고려해야 할 7가지 미래 이슈를 논의했다. 미래 사회에 어떤 요인과 이슈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토론했다. 7가지 이슈에 대한 인식 조사는 이후 진행된 4가지 미래상에 대한 선호를 정하는 데 나침반 역할을 한다. 미래이슈 인식 조사를 통해 국민 참여단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와 가치관을 4개의 미래 사회상에 대입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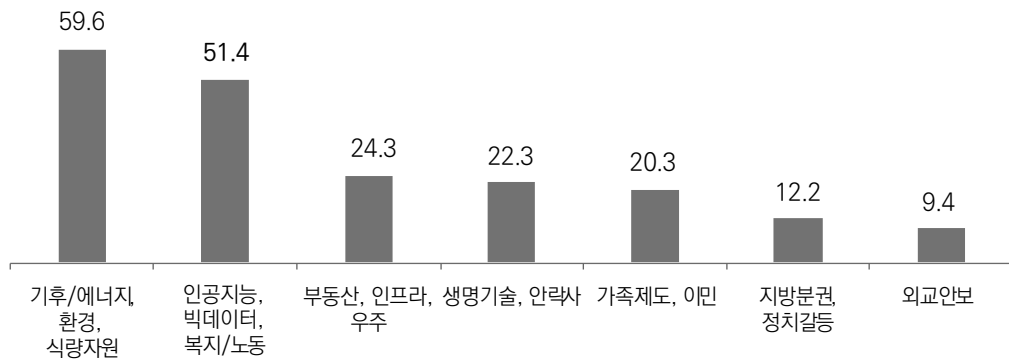
참여자들은 7개 이슈 중 2개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였다. 3개 권역에서 대부분 참여자들은 '기후/에너지, 자연환경, 식량 자원 (59.6%)'이 가장 중요한 미래 이슈라고 응답했다. 2위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복지/노동'(51.4%) 이슈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위협받는 일터 및 일자리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내놓았다.

3위는 '부동산, 인프라, 우주'(24.3%)였다(우주도 부동산처럼 주거 환경 이슈로 간주). 3위를 차지한 주거 환경 이슈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서울에서 3위는 '부동산, 인프라, 우주'(24.0%)이지만, 부산의 3위는 생명기술, 안락사(28.4%), 대전의 3위는 가족제도, 이민(29.8%)였다. 이처럼 1, 2위까지는 권역별로 중요도가 같았지만, 3위는 권역별로 차이가 났다. 권역별로 주요 현안에 대한 시각은 달랐다.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의 등락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서울 권역은 3위로 부동산 이슈를, 정부 청사와 국책연구단지가 밀집한 대전 권역(세종 포함)은 원거리 출퇴근이나 주말 부부 등의 문제로 가족제도 이슈가 중요 이슈로 거론되었다. 부산 권역은 고령 인구 증가로 생명기술, 안락사 같은 휴먼 이슈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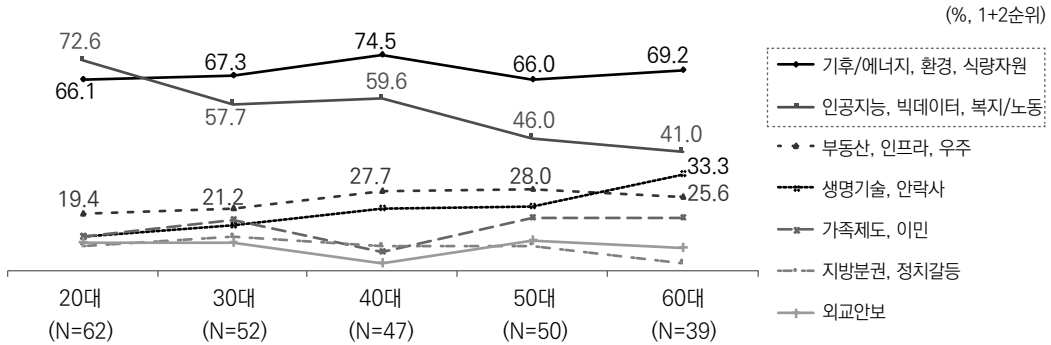
4위는 생명기술, 안락사(22.3%) 이슈였다. 5위는 가족제도, 이민(20.3%) 이슈였다. 6위는 지방분권, 정치 갈등(12.2%) 이슈였다. 7위는 외교 안보(9.4%) 이슈였다[그림 3-3].

서울로 지역을 한정하면 연령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의 차이를 볼 수 있다. 20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복지/노동을, 30대~60대는 기후/에너지, 환경, 식량 자원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즉, 20대를 제외하고는 기후/에너지, 환경, 식량 자원을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20대는 기후변화 이슈를 2위로 꼽아 그 중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분석되나, 20대는 기술과 사회(특히 일자리와 직업)의 변화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4).



(%, 1+2순위)	표본수 (명)	기후/에너지, 환경, 식량 자원	인공지능, 빅데이터, 복지/노동	부동산, 인프라, 우주	생명기술, 안락사	가족제도, 이민	지방분권, 정치갈등	외교 안보
전체	502	59.6	51.4	24.3	22.3	20.3	12.2	9.4
서울	250	68.4	56.8	24.0	19.6	14.0	8.0	8.0
부산	148	52.7	49.3	22.3	28.4	24.3	13.5	9.5
대전	104	48.1	41.3	27.9	20.2	29.8	20.2	12.5

[그림 3-3] 지역별 7가지 미래 이슈별 중요도



[그림 3-4] 연령별(서울 기준) 이슈 중요도 차이

국민 참여단의 의견을 요약하면, 우리 사회가 미래를 설계하고 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기후변화, 환경이고, 그다음으로는 일자리였다. 우리는 국민 참여단이 미래 이슈를 논의하는 과정을 직접 들어보면서 자연환경의 미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시민들에게 자연환경은 삶의 터전이자 인간의 생존 조건이었다. 시민들은 자연환경이 망가지면 그 밖의 요소들이 막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 지구적 대응이 필요한 기후변화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의 삶은 보장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자연환경 이슈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일자리 이슈였다. 예상대로 20대와 30대 등 젊은 세대에게서 일자리 걱정은 심각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존하는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일자리의 증감은 어떤 추세를 보일 것인지, 어떤 일자리가 새롭게 등장할 것이고 그에 대비한 전략은 무엇인지 시민들은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일자리의 증가 없는 경제적 성장이 꽤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이미 직업의 안정성은 흔들렸다. 여기에 전례 없는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일자리의 미래는 매우 불확실해졌다. 일자리의 문제는 비단 젊은 세대의 문제만은 아니어서 사회적 대응이 요구된다.

종합하면 기후변화의 전 지구적/지역적 대응, 일자리의 안정성과 새로운 직업역량의 획득, 신기술의 사회적/윤리적 수용 등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암울한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다.

## 2 국민 참여단이 선택한 가능, 회피, 선호미래

### 가. 전체 결과

국민 참여단은 어떤 미래에 가능, 회피, 선호라는 의견을 달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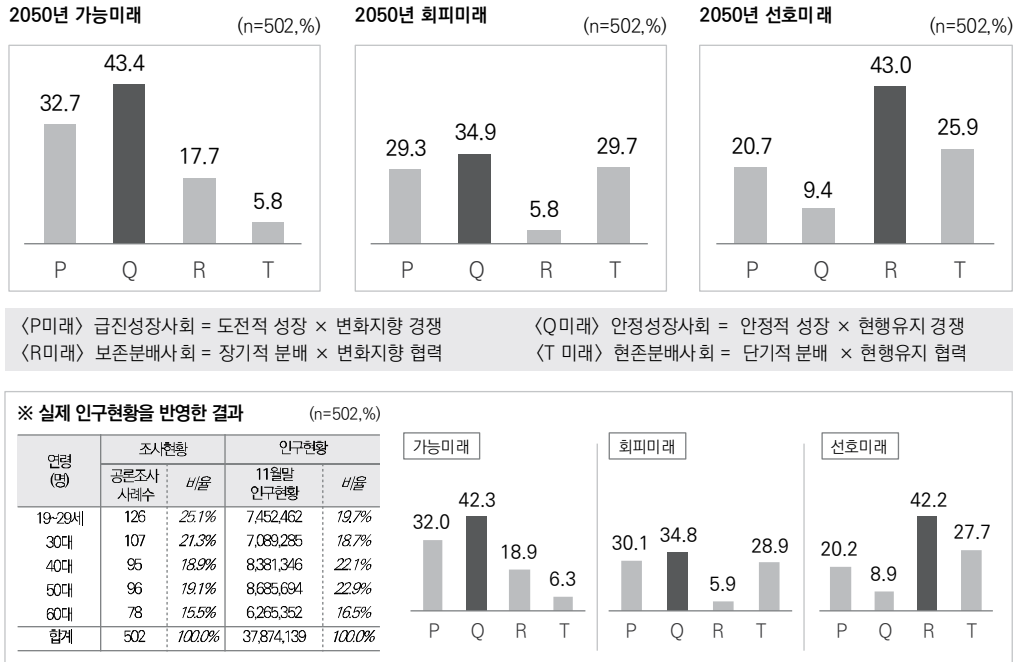
참여단은 우리 사회가 2050년에 맞이할 개연성이 가장 높은 미래(가능미래)로 Q미래(43.4%)를 뽑았다. Q미래는 우리가 앞서 안정성장 사회로 지칭한 미래다. 이어 급진성장 사회로 지칭한 P미래(32.7%), 보존분배 사회로 지칭한 R미래(17.7%), 현존분배 사회로 지칭한 T미래(5.8%) 순으로 가능성을 뽑았다.

2050년에 보고 싶지 않은 회피미래 1위는 Q미래(34.9%)였다.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Q미래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미래로 꼽힌 것이다. 뒤를 이어 T미래(29.7%), P미래(29.3%), 그리고 R미래(5.8%) 순이었다. 이 결과만 놓고 해석하면, 국민들은 가장 피하고 싶은 미래가 곧 현실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깊이 있는 해석이 요구되지만, 다가오는 미래에 살고 싶지 않은 국민의 마음이 읽힌다.

그렇다면 선호미래는 무엇일까. 국민 참여단은 2050년에 선호하는 미래 1위로 R미래(43%)를 뽑았고, 이어 T미래(25.9%), P미래(20.7%), Q미래(9.4%) 순으로 선택했다. 미래세대에게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현재세대의 욕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R미래에게 가장 높은 선호도가 부여된 것이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전문가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여서 주목된다.

국민 참여단은 20대와 30대의 참여 비율을 실제 인구 비율보다 높게 포집했다고 설명한바, 실제 인구 현황을 반영해 20대와 30대의 참여자 수를 축소한 결과에서도 가능, 회피, 선호미래에 대한 1순위는 동일했다. 현재의 인구 비례로 측정하나, 미래세대의 의견에 비중을 높게 매겨 측정하나 결과는 같다는 점이 흥미롭다(표 3-1 참조). 이런 국민의 의견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선, 가능미래부터 그 의미를 분석해보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인용하면서 누가, 어느 지역에서,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회피하고 싶은지, 선호하는지 따라가 보자.

[표 3-1] 미래 인식 종합



## 나. 가능미래

### 1) Q미래

국민 참여단은 가장 가능한 미래로 Q미래(43.4%)를 꼽았다. 누가 이 미래를 가장 가능하다고 꼽았는지 살펴보니 연령별로는 30대(61.7%)였고, 지역별로는 강원도와 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참여자들이 두드러졌다.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 응답지를 살펴 보았다.

“현재 사회상이 Q미래와 흡사하다. 현재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Q미래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이다.” (강원도, 남성, 30대)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더 보수화되고 변화를 거부하게 되므로 (Q미래의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여성, 30대)

위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은 Q미래가 개연성이 높다고 본 이유로 우리 사회의 관성을 꼽았다. Q미래는 현재 사회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우리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 변화를 싫어하기에 현재의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30대의 뒤를 이어 20대의 47.6%, 40대의 43.2%, 50대의 38.5%, 60대의 17.9%가 Q미래를 가능미래로 선택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Q미래의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이들의 의견을 차례로 들어보자.

“일단 언론에서나 현실에서 보듯 2~30대 한국 젊은이들의 일자리 찾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외국인 이민 노동자의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미세먼지나 기온 상승으로 실제로도 동식물, 곤충의 종류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가을이 사라진다거나 봄도 실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면 젊은 세대는 본인을 위해 1인 가구가 될 것이며 일터 자체의 개념도 바뀔 것 같다.” (경기도, 남성, 20대)

“인구가 대도시로 쏠리고 있고, 인간적 가치로서의 기술혁신보다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보다 자유가 아닌 방종처럼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서울, 여성, 40대)

“사회적 관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회의 모습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으리라고 예측된다. 특히, 기후변화는 개도국과 후진국의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예상보다 더 크게 변할 것으로 추측한다.” (경기도, 남성, 50대)

“곤충, 식물, 척추동물의 서식지 감소 등이 피부에 와닿는다. 기온도 3도 이상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 (부산, 여성, 60대)

Q미래는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닮았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Q미래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이 Q미래를 닮았다고 간주한다. 국민 참여단은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 외국인 이민자 증가, 미세먼지의 심각성, 기온 상승 등의 이유를 들면서 Q미래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1인 가구의 증가를 언급한 시민들도 많았는데 이대로라면 출산율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외국인 이민자들과의 갈등도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앞으로 더욱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요인으로 보인다. 여러 사회적 이유로 받아들인 외국인 이민자들이 국내 실업률의 증가라는 현상과 맞물려 차별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이민자들을 포괄하는 사회 통합의 정책이 요구된다.

## 2) P미래

국민 참여단은 Q미래 다음으로 가능한 미래를 P미래(32.7%)로 꼽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와 부산/울산/경남이었다. 이들은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과학기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었다.

“AI의 기술이 현재에도 진보하고 있고 사람들이 편리함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개인화, 자기중심화가 가속하고 있어 싸늘함이 존재하는 미래가 될 것이다.” (울산, 남성, 20대)

울산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은 인공지능 기술로 세상은 더 편리해지겠지만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태도가 더욱 강화되어 사람 간 소통은 줄어들어 냉담한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2019년 현재도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진출 범위가 축소되고 있으며, 유망 직업 또한 AI, 즉 인공지능과 관련된 직업인 점에서 P미래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또한,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인간소외가 되는 현재를 넘어 30년 후에는 인공지능이 활발히 개발, 적용될 것이다.” (경상북도, 남성, 20대)

경북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일자리가 축소될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현재의 기술적 추세로 보았을 때 P미래가 가장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 20대 남성도 기술에 의한 인간의 소외를 걱정하고 있다. 아래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여성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지금처럼 꾸준히 발전하면 P사회의 모습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다. 그러나 P사회는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과학기술의 급진적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간 소외현상이나 급진적으로 변화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증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주의해야 할 것이다.” (부산, 여성, 20대)

한국 사회는 과학기술의 수용성이 높은 나라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산업이 발전하고 그래야 성장의 동력이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믿는다. 한국 정부가 투자하는 R&D 자금의 비중은 세계 최고다. 과학기술로 경제를 성장시켜 왔다는 믿음이 강하다. 이런 믿음이 강해지면 맹목적으로 과학기술을 신봉하기도 한다. 예컨대,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P미래의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 새롭지는 않다.

### 3) R미래

국민 참여단은 P미래 다음으로 가능한 미래를 R미래(17.7%)로 꼽았다. 연령별로는 40대, 지역별로는 서울과 대구/경북이었다.

“지속적인 저성장,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지만 사회적 반발이 가장 적은 미래가 R이라고 생각.” (서울, 여성, 40대)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은 R미래가 사회적으로 거부감이 적어 실현될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적었다. R미래의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실질 임금의 격차가 줄어들고,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부족한 일자리를 나누는 것으로 묘사한다. 또한 고용 기회 차별을 없애고 소수자 고용도 증대하는 미래다. 이 여성은 R미래가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능력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요구될 것이고 안정성과 공정성이 현재 화두이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려는 정책과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경상북도, 여성, 30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은 현재 우리 사회가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목표를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R미래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아래 50대 여성은 R미래가 급진적이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여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R미래의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현재 상태에서 가장 근접하게 발전할 가능성의 요소가 다분하다. 지나치게 진보적이거나, 그렇다고 T미래대로 갈 것 같지는 않고, 환경문제가 우선인 시대에 R미래만이 탄소 제로 사회를 지향하므로.” (경상북도, 여성, 50대)

#### 4) T미래

국민 참여단은 R미래 다음으로 가능한 미래를 T미래(5.8%)로 꼽았다. T미래는 4가지 미래 중 가장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미래가 되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지역별로는 서울, 강원과 부산/울산/경남이 많았다.

“현재 사회의 피로도가 높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자치단체와 개인이 (T미래가 지향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꼭 T미래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서울, 여성, 40대)

“공동체 생활과 모임은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고 응급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다. 경쟁이 아닌 공정, 분배, 나눔, 인간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것을 지향한다. 계층의 갈등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경기도, 남성, 60대)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은 우리 사회가 너무 피곤하다고 간주한다. 이미 이런 피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단체가 지역 정부에서

나눔이나 인간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활동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활동에 힘입어 우리 사회가 T의 미래로 갈 것으로 이들은 예측했다.

## 다. 회피미래

### 1) Q미래

회피의 미래는 선호미래를 조사하면 부수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미래다. 가장 덜 선호하는 것을 회피하는 미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 내부에서도 회피미래를 꼭 물어봐야 하느냐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조사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회피의 이유가 분석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덜 선호의 이유가 아닌, 회피의 이유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들춰낼 수 있는 단서다. 미래라는 시각에서 현재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은 미래 연구의 주요 목적이기도 하다.

국민 참여단은 가장 회피하고 싶은 미래로 Q미래(34.9%)를 뽑았다. 앞서 언급했듯 가장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 미래가 가장 회피하고 싶은 미래가 되었다. 누가 이 미래를 가장 회피하고 싶은지 살펴보니 연령별로는 50대(37.5%)였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과 서울에 거주하는 참여자들이었다.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 응답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대도시 중심 발전으로 지방 소외가 가속화되어 수도권/지방 격차가 심화 된다. 지방의 인구 공동화 현상, 서울 인구 과밀화 현상이 발생한다. 개인의 경쟁 과열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다.” (인천, 여성, 50대)

인천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은 Q미래가 대도시와 지방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확대하는 미래로 보았다. 서울은 대도시로 발전하겠지만 이곳도 사람들 간 경쟁의 심화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50대의 뒤를 이어 20대의 35.7%, 30대의 35.5%, 60대의 33.3%, 40대의 31.6%가 Q미래를 회피미래로 선택했다. 연령대별로도 별 차이 없이 고르게 이 미래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의 의견을 차례로 들어보자.

“한국의 노동 인력이 부족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불안하게 될 것 같다. 또 지구 온도가 2.5도 상승하는 것도 위험하다. 지금도 이미 온난화가 심각한데 더 심해지면 더위로 사망자가 급상승하고 노약자, 장애인들에게 더 위험해진다. 따라서 반드시 피해야 한다. 대도시 중심이기 때문에 지방 도시는 발전도 못 한다.” (서울, 여성, 20대)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은 Q미래의 특징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사회적, 문화적 불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것도 불안한 요소다. 사회의 약자들이 피해를 입고, 도시별로는 지방 중소 도시가 도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래 부산의 30대 여성도 기후변화를 가장 걱정하고 있다.

“평균 폭염일수 45.4일의 미래에서 60대를 보내고 싶지 않다.” (부산, 여성, 30대)

“이민 노동자가 증가한 것도 회피미래로 선택한 이유이다.” (경기도, 여성, 60대)

“중소 도시, 농어촌도 함께하는 네트워크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서울, 여성, 40대)

회피미래로 Q를 선택한 시민들은 기후변화의 위험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확대, 중소 도시의 쇠퇴를 많이 걱정했다. 발전하는 곳은 인프라와 인력이 집중된 대도시이고, 나머지는 뒤쳐질 것으로 예상했다. 발전에 뒤처지는 곳에서 실업률은 높아질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의 유입이 많아지면 일자리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질 것이다. 시민들이 외국인 유입의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국민들이 Q미래를 가장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언급했던 이유와 Q미래를 가장 피하고 싶다고 든 이유가 약간 다르다는 점이다. 회피의 관점에서 국민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 대도시와 중소 도시의 격차를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런 가설이 가능하다: 가능성의 관점에서 시민들은 현재의 추세(기후변화 심각성, 이민자 증가 등)를 언급하게 되고, 회피의 관점에서는 추세보다 고질적 문제(도시화, 불평등)를 언급한다. 또한, 가능의 관점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언급하는 반면, 회피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사회적 요인들이 더욱 부각된다는 점이다.

## 2) T미래

국민 참여단은 Q미래 다음으로 회피하고 싶은 미래를 T미래(29.7%)라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서울이었다.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 응답지를 살펴보았다.

“T미래는 폐쇄적이다.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폐쇄는 언젠가 오픈하는 순간 자급자족의 행복감을 잃게 될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보다 뒤쳐진 상태에서 경쟁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다들 경쟁을 하지 않아 서비스, 상품의 품질은 제자리걸음 혹은 떨어질 것이다.” (경기도, 남성, 20대)

“서술된 미래관은 낭만과 행복(풍요롭지는 않지만)이 넘치는 미래 사회이지만, 자본주의로 점철된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미래관은 낭만보다는 불공정, 배타주의에 갇혀 대한 제국이 일본에 식민 지배를 당하듯 외부적 요인으로 다시 한번 멸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 남성, 20대)

“게임 속에서 그려지는 배경 중 하나이기도 한 T미래는 핵전쟁 등으로 초토화되고 황폐해진 다음에 재건하기 위해 가는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메트로 시리즈가 대표적이고, 즉 자연스러운 방향이 아닌 인위적 사건에 의해 가는 경우가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남성, 20대)

T미래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은 이 미래가 변화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세계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뛰어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경쟁하지 않는 T미래는 도태될 것이란 예측이다. 이 미래를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비유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경쟁하지 않겠다는 것은 멸망한다는 것이다.

## 3) P미래

국민 참여단은 T미래 다음으로 회피하고 싶은 미래를 P미래(29.3%)라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이었다.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 응답지를 살펴보았다.

“인간에게는 편리한 세상이 될지는 모르나 트랜스 휴먼 세상은 인간미 0%의 세상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로봇이 인간 일을 대체하면 인간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가 아직 다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2050년까지 개발이 완벽히 될지 의문이다.” (대구, 남성, 40대)

“너무 먼 미래 느낌이긴 하나 인간의 도덕성 상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랜스 휴먼, 스마트 시티는 좋게 말하면 발전된 미래상일 수 있으나, 나쁘게 말하면 개인 정보 유출과 같은 문제가 많아질 듯합니다.” (대구, 여성, 40대)

P미래를 회피하고 싶은 시민들은 대부분 기술에 의한 인간의 소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누구에는 과학기술이 편리하겠지만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부적응, 소외, 관계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 4) R미래

국민 참여단은 P미래 다음으로 회피하고 싶은 미래를 R미래(5.8%)라고 응답했다. 4가지 미래 중에서 가장 회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므로 거꾸로 말하면 가장 선호하는 미래로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제기한 회피의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R미래의 어두운 면을 들춰내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60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였다.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 응답지를 살펴보았다.

“R미래의 문제를 꼽는다면 고복지/고부담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 등의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위험한 발상으로 본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회의 하향 평준화를 부르고 생산성을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 여성, 60대)

“R미래는 탄소 제로를 지향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열이 뜨거운 사막이나, 풍력은 바람이 많은 네덜란드에서 가능해 우리나라가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 없이 신재생에너지를 추구한다면 좁은 국토에서 많은 환경적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다.” (서울, 여성, 60대)

울산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R미래의 전략을 하향 평준화로 이해하고 있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임금을 줘야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역적 고려 없이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자는 주장은 오히려 우리 국토에 환경적 위험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 라. 선호미래

### 1) R미래

선호미래는 이 연구의 하이라이트이다. 어떤 미래를 바라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국민 참여단은 가장 선호하는 미래로 R미래(43%)를 꼽았다. 선뜻 이해하기 힘든 결과이다. 특히 경제적 성장에 과도하리만치 집착해 온 한국 사회에 성장의 중요성을 낮춰보는 R미래가 가장 선호하는 미래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누가 이 미래를 가장 선호하는지 살펴보니 연령별로는 20대(53.2%)였고,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경기/인천이었다.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 응답지를 살펴보았다.

“평소 생각하던 이상적 미래 모습을 담고 있었으며, 가족의 개념이 유연하게 나타나 있었다. 인공지능의 발달이 멈추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좋았다.” (경상북도, 여성, 20대)

“저출산 시대에 가정에서 많은 자녀를 낳지 않는 현실에 외동인 자녀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서로 도와가며 꼭 혈연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여성, 20대)

“발전 및 성장과 혁신의 가장 적절한 타협점인 것 같다. 특히 여러 문화가 융합되는 오늘날과 같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현재 우리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생하고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가치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경기도, 여성, 20대).

“발전과 현재 중요히 여기는 가치의 균형이 맞는 미래 같았습니다. 개인성이 부족하고 사회적 많은 합의로 개인 부담이 크지만 다른 미래상보다 좀 더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사회 같았습니다.” (부산, 남성, 20대)

전국 각지의 20대들 의견에서 읽을 수 있는 R미래 선택의 이유는 유연한 가족의 구성, 인간중심적 가치관의 구현, 발전과 혁신의 적절한 균형, 다원화된 사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은 R미래의 개연성이 크지 않더라도 꼭 살아보고 싶은 미래라고 했다. 특히, 유연한 가족 구성을 허용하는 사회가 바람직한 이유로 꼽힌다는 점이 흥미롭다. 가족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최소단위의 공동체여서 가족의 개념이 바뀐다면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다양한 가치가 허용되는 사회를 원한다는 점에서도 R미래의 선택이 주는 의미는 크다. 젊은 세대는 사회가 획일적 기준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평가하지 말고 각자 고유한 능력을 평가해줄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듯하다. 개별적인 특성과 장점을 알아주는 새로운 공동체의 등장을 원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20대의 뒤를 이어 30대의 44.9%, 40대의 42.1%, 50대의 40.6%, 60대의 28.2%가 R미래를 선호미래로 선택했다. 60대를 제외하고 40%대 이상의 높은 선호를 보인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들의 의견을 차례로 들어보자.

“미래 사회 이슈 모두 중요하지만, 결국엔 자연환경이 유지가 되어야 다른 이슈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탄소 제로의 R세상이 선호될 것 같다.” (경기도, 남성, 30대)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서로 협력, 공존하고. 대기업,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사회야말로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상이라 생각한다.” (인천, 여성, 40대)

“대기업+중소기업 공생으로 청년들 취업난 완화에 좋을 것 같고 노동시장 자유로운 이동 또한 너무 반길만한 미래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여성, 50대)

“미래세대는 공생하는 사회를 선호할 것입니다. 계층 간의 갈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사회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대구, 남성, 60대)

R미래를 선호한다고 밝힌 국민 참여단은 미래에 사람들이 살아갈 자연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우리의 자연환경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기후변화다. R미래는 기후변화 적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사회다. 비록 이 미래를 실현하려면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지만 가야 할 목적지라는 데에는 이견이 적었다.

아울러 이 미래의 지지자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격차의 완화 등의 요소 때문에 이 미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차의 완화는 앞서 회피의 미래를 논의할 때, 국민 참여단이 강조한 요인이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R미래 지지들에게 격차는 도농 간, 대도시와 중소 도시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계층 간 격차뿐 아니라 미래세대와 현재세대의 격차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계(視界)가 장기적이고, 세대 간 정의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2) T미래

R미래 다음으로 국민 참여단이 선호하는 미래는 T미래(25.9%)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와 서울이었다. 앞서 설명한 R미래는 선호미래 1위지만 과반을 넘지 않았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2위로 꼽힌 미래상과 어느 정도 섞여서 좀 더 포괄적인 선호미래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2위의 선택 이유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대량생산 제품보다 개인의 취향을 고려하는 소량 제품을 선호한다. 미래의 시민들은 비록 예전처럼 돈을 벌지는 못해도 다양하고 즐거운 일거리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자발적으로 다양한 대안을 개발하고 함께 실험할 사람들을 찾아 시도해보는 것도 마음에 든다.” (전라북도, 여성, 60대)

“어찌 보면 과거지향적인 삶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인간관계에서는 과거로 돌아가 서로 보살피고 도울 수 있는 사회가 내 자식과 내가 고령이 되어서도 서로에게 불편하지 않는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P와 같은 미래를 지향하였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T와 같은 공동체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여성, 30대).

“개인을 중시하면서도 공동체 협력의 가치를 중시한다. 함께 잘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기계나 기술의 발전 또한 사회적 약자를 고려, 개인의 정서적 부분을 함께 고려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 여성, 40대)

“T미래에서는 고성장, 기술 주도의 정책에 따른 개인의 차별과 희생 부분들이 최소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적순이 아닌 각개인의 능력과 성향을 발전시키는 환경을 부여함에 따라 사회문제를 줄이는 동시에 건강한 공생적 커뮤니티를 구현하는 미래로 보여 기대가 큼니다.” (경기도, 남성, 30대)



T미래를 선호하는 시민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지쳐 있으며, 공동체의 붕괴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았다. 서로 힘든 부분을 공유하고 보듬어주는 공동체의 등장, 실패해도 격려해주는 사회, 소수로부터 대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사회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개인도, 공동체도 우선하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 중시되는 사회를 T미래라고 보았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술로 사회적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적순으로 개인을 평가하지 말고 개인이 가진 장점을 돋보이게 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은 앞서 살펴본 R미래의 특징과 겹쳐진다.

선호미래 1~2위 순위에 오른 R미래와 T미래는 공동체 연대라는 특징을 공유한다. 그렇다고 공동체의 연대를 위해 개인의 자유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개인의 성장을 도와주는 공동체, 개인의 성장 덕분에 공동체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상생적 관계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R과 T미래 지지자들은 협력할 수 있을 것 같다.

### 3) P미래

국민 참여단은 T미래 다음으로 선호하는 미래로 P미래(20.7%)를 꼽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과 강원이었다.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 응답지를 살펴보았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항상 경쟁에 노출되어있는 사회에서 자랐고, 현재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에 익숙한 세대들이기에 더욱 개인적 특성과 성향을 표출할 수 있고 더욱 편리해진 세상을 선호할 것 같다.” (서울, 남성, 30대)

“가장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이다. 현재도 많은 부분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개인화되고 있어서, 그 부분의 장점을 살린 P의 미래가 미래세대가 가장 살고 싶을 것 같다.” (충청남도, 여성, 30대)

충남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좀 더 편리하고 개인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P미래에 끌렸다고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은 현재

개인주의적 특성을 보이는 젊은 세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미래가 P라고 보았다. 기술적 낙관론자의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 4) Q미래

국민 참여단은 P미래 다음으로 선호하는 미래가 Q미래(9.4%)였다. 사실상 순위가 가장 낮아 선호 미래로의 의미는 적지만, 왜 선호하는지는 들어봐야 한다. 연령별로는 20대, 지역별로는 강원과 대구/경북이었다.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 응답지를 살펴보았다.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이 원하고,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체제여야 환경문제를 비롯한 여타 다른 이슈의 문제들도 자연스레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충청남도, 남성, 20대)

“인프라 확장으로 대도시가 넓어지고 새로운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혼합으로 많은 인구가 지금의 서울 중심적 체제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수도권 쪽으로 인구 이동이 있을 것이다.” (강원도, 여성, 20대)

“외국인 이민 노동자가 증가하며 현재와 같이 점차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대기업들이 등장하며, 기존의 문화를 탈피하고 창의와 자유가 중시 될 것이다.” (경상북도, 남성, 20대)

개인의 자유 중시, 대도시 중심의 생활 패턴, 수도권의 확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사회적 다양성 확대, 새로운 대기업의 등장, 창의와 혁신의 격려 등이 Q미래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였다.

## 제3절

#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방향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10가지 방향

### 가. R미래를 선호하는 국민 참여단이 선택한 10가지 우선 가치

이번 절에서는 국민 참여단이 가장 많이 선호한 R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가치를 우선해서 추구해야 하는지 그 결과를 설명한다. 502명의 참여단 중 R미래를 선호미래로 꼽은 216명(43%)이 응답한 'R미래 실현을 위한 가치 선택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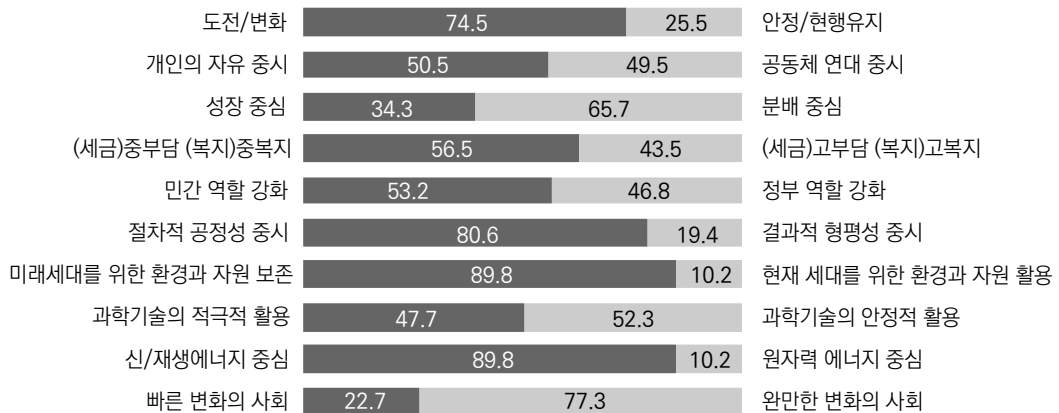
R미래를 선호한다는 응답자 216명 중 74.5%가 도전과 변화가 안정과 현행유지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압도적으로 선택이 많았던 응답은 절차적 공정성이 결과적 형평성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과 자원보존이 필요하다는 것,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성장의 기회를 차별 없이 공정하게 부여하는 사회, 현재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웰빙까지 고려하는 사회 정책의 실현, 그리고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 획기적인 에너지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R미래 지지자들의 주요 의견이었다.

이들의 마음을 다시 분석하면, 성장 중심에서 분배 중심으로 사회적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현재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미래에도 적용해야 하는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과 자원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대목이 그렇다.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자원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세대가 성장하면 미래세대도 성장할 것으로 믿었던 이전 세대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R미래의 지지자들은 현재세대가 성장을 고집하면 미래세대에게 좋지 못한 환경과 고갈된 자원을 물려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좀 더 긴 안목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도 해석된다.

R미래 지지자들은 결과적으로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전 세대의 생각과 달리 과정에서 공정함을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불평등할 수는 있지만, 과정에서는 모두 차별 없이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다. 물론 모두를 같은 출발선상에 놓고 경주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약자와 소수는 보호하면서 각자 최선을 다하면 스스로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R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빠른 변화보다 완만한 변화의 속도를 보이는 사회가 바람직하고, 과학기술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정부보다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을 선호했고, 세금은 중부담 수준, 복지는 중복지 수준이 고부담 고복지보다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개인의 자유 중시냐 공동체 연대의 중시냐는 질문에는 50.5%와 49.5%로 의견이 팽팽했다.

(R미래 선호 응답자, n=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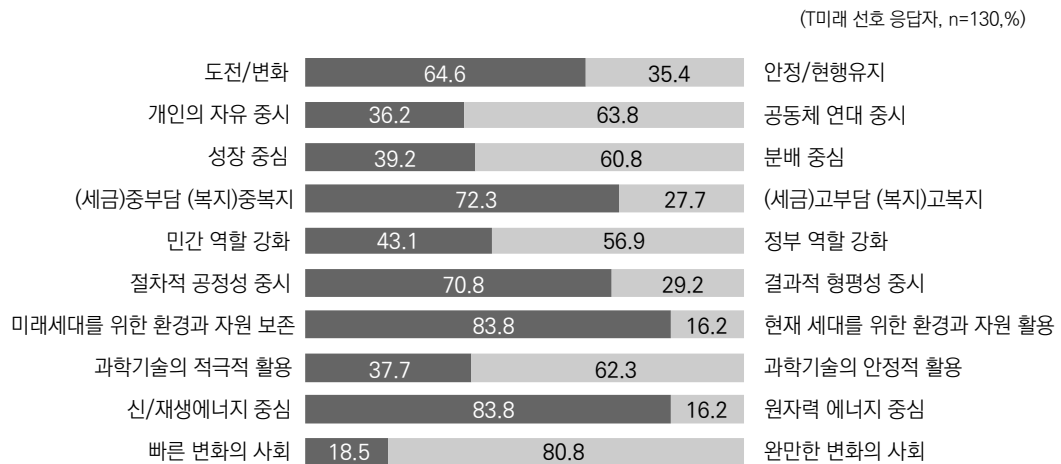


[그림 3-5] R미래 실현을 위한 우선 가치 목록

## 나. T미래를 선호하는 국민 참여단이 선택한 10가지 우선 가치

국민 참여단 중 130명(25.9%)은 T미래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는 R미래에 이어 2위에 올랐다. T미래를 선호하는 응답자 중 64.6%가 도전과 변화가 안정과 현행유지 전략보다 낫다고 보았다. 이는 R미래를 선호하는 응답자들과 같은 의견이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과 자원 보존, 과학기술의 안정적 활용, 신재생에너지 중심, 완만한 변화의 사회 등도 R미래 선호자들과 의견이 비슷했다(그림 3-6).



[그림 3-6] T미래 실현을 위한 우선 가치 목록

T미래를 선호하는 참여자가 R미래 선호자들과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연대를 중시한다는 대목, 민간보다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대목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도전하고 변화하는 것에 T미래 지지자들도 동의하고 있지만, 변화의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하고,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노력보다 공동체의 연대로 변화를 일궈내야 한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더 중시한다는 점에서 T미래는 R미래보다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안정적 변화를 일궈낼 수 있다는 점, 결과보다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점, 공적인 결정에 권위가 부여된다는 점이 T미래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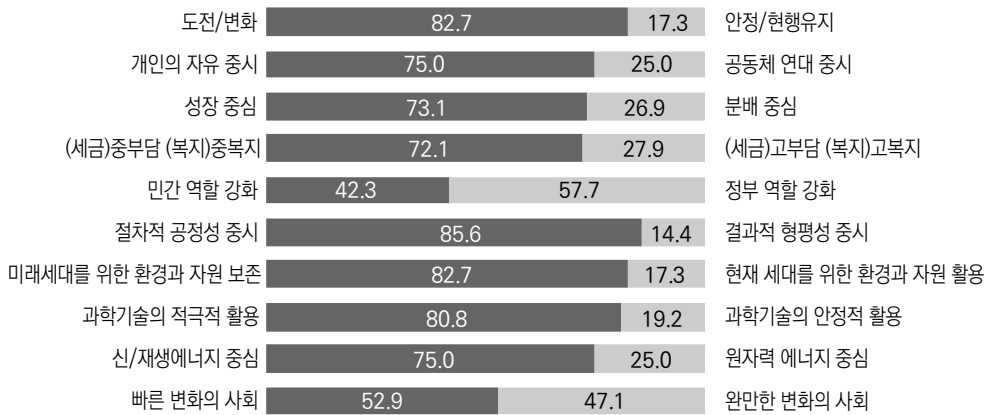
이 같은 T미래의 특징은 다음의 선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향은 비슷하지만 T미래 선호자가 R미래 선호자보다 안정과 현행유지를 조금 더 선호한다는 점, 결과적 형평성을 조금 더 선호한다는 점, 과학기술의 안정적 활용과 완만한 변화의 사회를 원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안전, 현행, 공동체 연대, 정부 중심, 점진적, 완만한 변화 등의 가

치를 R미래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P미래를 선호하는 국민 참여단이 선택한 10가지 우선 가치

국민 참여단 중 104명(20.7%)은 P미래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는 4가지 미래 중 3위다. P미래를 선호하는 응답자 중 82.7%가 도전과 변화가 안정과 현행유지 전략보다 낫다고 보았다. 이는 R이나 T미래를 선호하는 응답자들과 같은 방향성이긴 하지만 응답자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았다. P미래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그림 3-7].

(P미래 선호 응답자, n=104,%)



[그림 3-7] P미래 실현을 위한 우선 가치 목록

앞서 2개의 미래와 비교해 P미래 지지자들은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 연대보다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분배보다 성장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민간보다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다소 이례적이다. 개인의 자유가 중시되어야 한다고 보면서도 민간보다는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한가지 가능한 해석은 P미래 지지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와 다른 변형적 미래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변형적 미래가 가능하려면 민간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미래가 불확실한 변형적 미래에 민간이 선뜻 투자하기는 어렵고 정부가 장기적으로 앞날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선택으로 P미래 지지자들은 다른 미래 지지자들과 달리 과학기술의 적극적 활용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완만한 변화보다 빠른 변화의 사회를 원한다고도 했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균형적 시각을 갖춘 정부가 미래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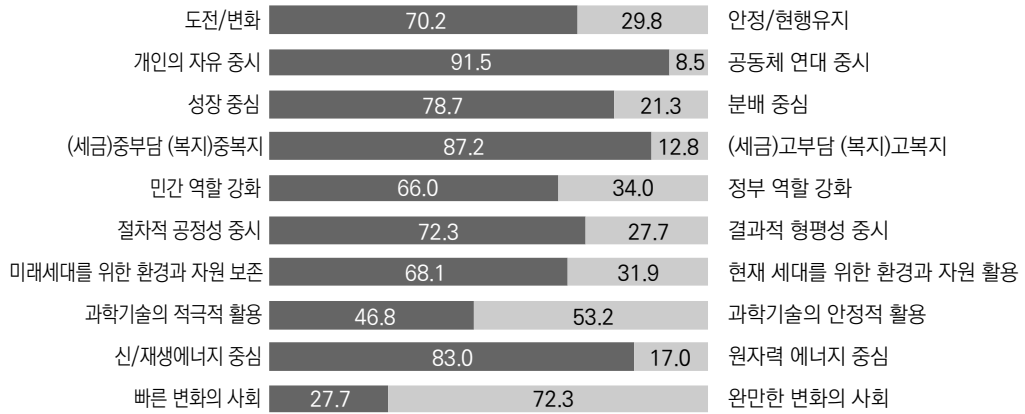
절차적 공정성의 중시(기회의 평등),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과 환경의 보존, 신재생에너지 중심, (세금)중부담 중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미래와 방향성이 같다.

## 라. Q미래를 선호하는 국민 참여단이 선택한 10가지 우선 가치

국민 참여단 중 47명(9.4%)만이 Q미래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Q미래는 우리 사회가 미래에 실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래이면서도 회피하고 싶은 미래 1위로도 꼽혔기 때문에 선호미래 선택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Q미래 지지자들은 P미래와 달리 완만한 변화의 사회, 과학기술의 안정적 활용을 선호했다. 방향에서는 같았지만 Q미래 지지자들은 현재 세대를 위한 환경과 자원의 활용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31.9%)을 보였다. 다른 미래 지지자들보다 현재세대의 생존이 미래세대의 생존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면서 성장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변화의 주체는 민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Q미래가 독보적이다. 가장 높은 비율로 이 가치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Q미래 선호 응답자, n=47.%)



[그림 3-8] Q미래 실현을 위한 우선 가치 목록

## 2 선호미래 1위인 R미래 실현을 위한 시사점

국민 참여단은 4가지 선호미래상 중 R미래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R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참여단이 선택한 가치가 과연 R미래를 실현하는데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연구진이 이론적 분석을 통해 제시한 R미래의 구성요건은 도전과 변화, 공동체 연대의 중시, 분배 중심, 고부담(세금)과 고복지, 정부 중심, 미래세대 중심, 과학기술의 적극적 활용, 신재생에너지 중심, 빠른 변화의 추구, 그리고 결과적 형평성의 선호 등이다. 이런 10가지 구성요소로 R미래가 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실제 R미래를 선호하는 참여자들은 위의 10가지 구성요소 중 도전/변화, 분배중심, 미래세대 중심, 신재생에너지 중심 등 4가지 요소만 선호했다. 나머지는 우리의 예상과 다른 선호도를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나머지 선택하지 않은 6가지 요소에서 다른 미래 지지자들과 달리 좀 더 높은 응답의 비율을 보이기는 했다. 예를 들면, 50.5%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고 했지만, 이들이 택한 49.5%의 공동체 연대의 중시는 다른 미래 지지자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었다.



이런 불일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R미래 지지자들이 6시간의 공론조사 경험으로는 R미래의 실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해석이다. 만일 시간이 좀 더 주어졌으면 R미래 지지자들은 공동체의 연대, 고부담 고복지, 정부 중심, 적극적 과학기술의 활용, 빠른 변화의 추구 등을 선호했을 수 있다.

반면, 다른 시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10가지 구성요소가 R미래를 만드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민의 선택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모든 미래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다. 현재와 미래를 0과 1의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변화는 디지털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0.001, 0.002...처럼 아날로그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시각을 수용한다면, R미래 실현을 위해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도전과 변화, 분배 중심, 미래세대 중심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인 셈이다. 나머지 6가지 요소는 때를 보가며 조금씩 실현해야 하는 과제이자 목표로 볼 수 있다.

# 제4장

## 전문가 대상 선호미래 조사 결과

---

제1절 전문가 대상 조사의 목적 및 설계·방법

제2절 전문가 선호미래 조사 결과

제3절 선호미래(R미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 제 1절

# 전문가 대상 조사의 목적 및 설계·방법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목적 및 의미

앞서 일반 국민 502명을 대상으로 2050년 한국 사회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①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미래(가능미래), ② 선호하는 미래(선호미래), ③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래(회피미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선택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50년 대한민국 선호미래 국민숙의토론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숙의토론을 통해서 국민이 어떠한 미래가 가능한지, 어떠한 미래를 선호하는지를 파악하고 그 이유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어떠한 미래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 502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만을 가지고 이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래를 예측하는 정보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고, 미래를 실현하려면 어떤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전문가 그룹이 국민숙의토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미래 전망에 대한 식견과 정책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2050년 선호미래상과 선호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를 묻는 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설명한다.

## 2 조사의 설계 및 방법

### 가. 조사대상 및 표본 크기

조사 대상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구축한 각 분야의 전문가 풀(총 411명)을 기반으로 했다. 총 411명의 전문가에게 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 의향을 묻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 중 75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최종 65명이 응답했다.

응답자의 연구 분야를 보면, 거버넌스 분야가 6명, 성장과 발전 분야 40명, 의식주 분야 7명, 개인과 공동체 분야 11명, 휴먼 분야 2명이다. 이와 같은 5개의 분류는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영향 결합 분야 종합 시나리오 및 정책과제 도출 연구(2019, 김홍범)」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분에 따른 것이다. 각 분야의 세부 영역은 ① 거버넌스 분야: 정치, 행정, 의회, 외교, 안보 ② 성장과 발전 분야: 경제, 노동, 복지, 분배, 기술혁신 ③ 의식주 분야: 정주 여건, 기후·환경, 식량, 여가 ④ 개인과 공동체 분야: 사회적 관계, 사회 구성원, 혼인, 가족 ⑤ 휴먼 분야: 생로병사, 인간 정체성, 종교, 트랜스 휴먼 등이다.

## 나.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Web 기반 설문으로 조사했다. 대상자는 먼저 사전조사 설문에 응답하고, 2050년 4개 미래 시나리오 자료집 내용 내용을 숙지한 뒤에 사후조사에 응답했다.

## 다. 조사내용

조사에 활용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설문 내용, 2050년 4개 미래 시나리오 등은 선호미래 국민숙의토론에서 국민 참여단에게 제공된 것과 동일하다. 다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선호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가 무엇인지를 추가로 물었다. 전문가가 선택한 선호미래를 두고, 이 미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과제를 적도록 했다. 정책과제를 적을 때는 앞서 언급한 5개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성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야 2개를 선택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각각에 해당하는 정책과제 5개를 적어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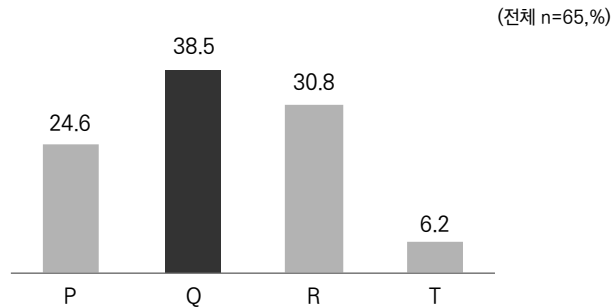
## 제2절

## 전문가 선호미래 조사 결과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가능미래

#### 가. Q미래



[그림 4-1] 전문가 조사 결과: 가능미래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현재와 같은 상태로 30년이 지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가능성(개연성)이 가장 높은 미래 모습으로 Q미래를 꼽은 응답이 38.5%로 가장 많았다.

“현재 한국사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성장을 분배보다 중시하는 세력의 힘이 강하다. 이러한 역학관계가 조만간에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한, 도전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학과 부교수, 사회학자)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양대 진영논리가 수십 년간 지속해 왔고, 앞으로도 커다란 정치지형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지역 논리가 정치 논리와 결합한 상황이 가까운 미래에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양대 진영 논리가 팽팽하게 형성된 상황에서는 급진적 미래보다는 점진적 미래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연구원 정책전략부장, 물리학자)

“현재 우리나라는 성장 정책과 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갈리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사회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고성장 시대를 겪었던 노년층은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장년층 이하 세대는 분배에 더욱 관심을 갖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도 개인의 이익 앞에서는 흔들리는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를 위시한 부동산 투기, 복지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세금 인상에 대한 저항 등은 사회 전반의 복지보다는 여전히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가, 기계공학자)

위의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Q미래의 개연성을 높이 보았다.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였고,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지역 논리가 결합된 진영 논리가 팽배했다. 또한 급격한 성장 및 발전을 겪은 세대와 저성장, 저금리 시대의 세대 차이가 사회 전반에 형성되어 성장 정책과 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 등 여전히 개인적 성장에 중점을 두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수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는 대기업의 생산 라인이 있는 일부 지역의 산업만 발전하고, 중소기업이 위치한 대다수의 지역은 낙후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기업 고소득층의 수도권 동력 또한 대기업의 고소득과 중소기업의 저소득 격차가 심화하면서 파편화된 플랫폼 노동이 증가할 것이다.” (기술경영 전문가)

“현재 한국의 광역권 집중과 발전을 가속화하여 지역별 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노간 구조, 사회 구조와 사회적 가치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의 미래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공간 구조가 큰 변화 없이 진행된 주거환경, 외국인이 농어촌이나 도시 저임금 노동자로 유입되는 현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의 부족, 가상현실 만남의 증가, 1인 가구 증가, 유니콘으로서의 새로운 형태의 대기업 증가와 온라인 플랫폼 선점 경쟁, 경쟁과 공정한 절차의 강조 등이 그러한 특징이다.” (국토 및 도시 정책 전문가)

지난 20-30년 동안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적 원리에 의해 사회가 재조직화되는 과정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산업 구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판단했다. AI 등 과학기술의 발전, 대기업 중심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성장/안정 중심세력의 영향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나. R 미래

전문가들은 Q미래 다음으로 30.8%가 R미래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R미래는 공공이익, 협력, 위기 대응성, 책임성을 중요한 가치라고 믿는다. 다문화가 공생하고 대중소 도시-농촌이 공존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제로 사회에서 거주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노동시장이 자유로운 사회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1인 가구 중심의 삶의 형태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순혈주의로 급격한 외국 노동자의 유입은 없을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대도시 포화상태와 있기에 현재의 행정구역 수준에서 상호발전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물리학 전공, 초빙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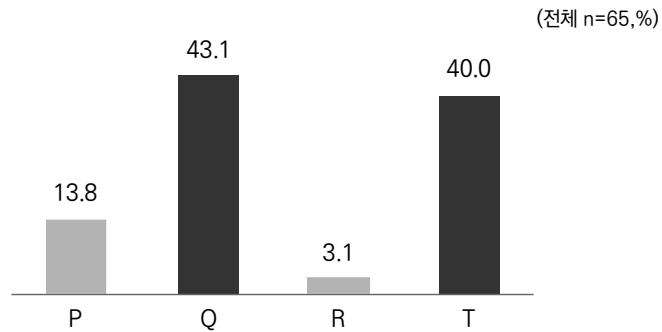
“전통적 가치(공동체의 행복, 기업들의 공생/상생 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생각한다.” (산업공학 및 기술경영 전문가)

“패권 국가가 사라지고,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국제질서가 약화할 것으로 생각한다. 전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소수 슈퍼(메가) 기업의 영향도 약화할 것으로 생각하며, 인간 본연의 삶과 가치에 대한 문화 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공학 및 기술경영 전문가)

“국민 가치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며, 이는 한국 사회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 사회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어 어떤 방식으로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주목할 것이다. 분배, 공정과 형평이 주요 가치로 부각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특성인 인구밀도가 높고 집적성이 높은 조건에서 대중소 도시가 공존하면서 분배가 중심 가치로 부각할 개연성이 높다.” (사회학자)



## 2 회피미래



[그림 4-2] 전문가 조사 결과: 회피미래

2050년 대한민국 피해야 할 미래상(회피미래)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Q미래와 T미래를 비슷한 비중으로 선택했다. 회피미래상 1위는 Q미래(43.1%), 2위는 T미래(40.0%)였다.

### 가. Q미래

전문가들의 43.1%는 Q미래를 가장 회피해야 할 미래상으로 판단하였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 노동자의 대거 유입은 우리나라에 심각한 사회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족 구성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물리학자)

“한국의 경제/산업 구조인 대기업 중심의 모델은 지속 가능한 형태가 아니며, 이 방식이 계속되는 한 재산/부의 양극화는 심화할 수 밖에 없다. 저소득층의 삶은 자본에 더욱 종속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계급제 사회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배구조의 안정성은 강화될 것이나, 사회안전망이 약화되어 범죄 및 갈등의 가능성이 높다.” (물리학자)

“안정을 지향하면서도 성장을 중시하려면 하위계층이 상위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계층 상승이 성장 중시와 현재 안정이라는 두 축을 지탱할 수 있다. 그런

데 하위계층이 줄어들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 계층의 이민이 활성화되고 이들이 우리나라의 하위계층으로 유입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우리나라는 유럽, 미국과는 달리 단일 민족 형태, 단일 문화가 몇천 년을 유지해온 터라, 이러한 외국인 계층의 유입은 사회 분열로 문제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학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폐쇄적 사회구조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한다면 사회에 끼치는 부작용이 커진다고 염려했다.

“성장 일변도의 정책으로 온실가스의 무한적 배출과 이에 따른 기후변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대도시 중심의 확장은 지역 소득 격차,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과 연관성이 높다. 사회적 격차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성장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책학자)

“분배보다는 성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현재에 고착된 사고방식으로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이익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연구 개발을 실시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자원경제 전문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성장 중심 정책을 근거로 회피미래를 Q미래로 판단하였다. 경로 의존성 및 관성 등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 대기업 중심 사회 등 기존 성장 위주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미래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했다.

## 나. T미래

전문가들은 Q미래 다음으로 T미래를 회피미래로 지목했다. T미래는 다양한 이웃으로 구성된 시민들이 중소 도시와 마을공동체가 결합된 주거환경에서 대화와 소통, 신뢰, 친밀감 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다. 이들은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프라인 만남을 선호한다. 왜 이런 미래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이미 개발된 대도시 중심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의료와 보안 문제 등 도시문제로 이어진다. 오프라인 공동체는 점차 감소할 예정으로 마을공동체를 유지

하기 어렵다. 사회의 다원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이 나타날 예정으로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기술경영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국경 없는 사회는 미래 사회의 핵심적인 모습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국경 없는 사회에서 국가적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 형성이 미래 경쟁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이다.” (정책연구자)

“T미래는 현재의 문물과 혜택을 일정 정도 포기하고 과거의 촌락사회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상호 간에 기대를 포기하면 행복한 사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지구공동체에도 큰 폐를 끼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미래는 주변 강대국들의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국력을 유지하려면 이런 사회체제는 해가 될 수 있다.” (생명과학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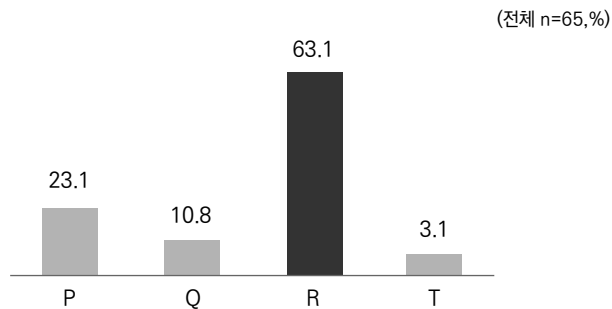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회피미래상으로 T미래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국가 간 경계가 없어지는 글로벌 시대에 전통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T미래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일터와 거주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시대이며, 우리나라는 자원 부족으로 기술과 혁신 중심의 사회발전 모델을 가져야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T미래가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판단한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소규모 개방경제이기에 대외무역과 경제 효율화 달성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왔다. 인구 5천만의 규모에서 최소생산과 소비를 통한 자급자족적 경제 시스템은 분배를 중시하고, 공동체에 대한 의식 개선을 통한 공생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급격한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때문에 소량생산과 최소소비보다는 저성장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경제 분석가)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므로, 분배 위주의 안정적 사회로 가는 것은 퇴보와 같을 것이다. 분배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산이 요구된다. 그런데 T미래는 기본적인 생산도 불가능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식량과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없으며, T미래에도 불가능할 것이다.” (사회학자)

### 3 선호미래

전문가들은 선호미래상으로 R미래를 꼽았다(63.1%). 국민 참여단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이 미래를 선택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P미래(23.1%), Q미래(10.8%), T미래(3.1%)의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왜 R미래를 선호한다고 응답했을까.



[그림 4-3] 전문가 조사 결과: 선호미래

#### 가. R미래 선택의 이유

전문가들이 R미래를 선택한 이유를 들어보자.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고려할 때, 도전 지향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분명히 중요한 과제이지만, 우리 사회의 기본 방향이 안정 지향성일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인 것 같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성을 취하는 것은 필수적일 것이다.” (사회학자)

“더 이상의 성장 담론은 곤란하다. 국민소득 3만 달러에서 계속 성장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장이 아닌 분배노선은 분명하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와 경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사회, 경제, 정치 등 모든 것을 개혁해야 한다.” (사회학자)

“현재의 양상이 지속되면 누구나 복지 부족을 느끼고 연대감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

다. 중대 결단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높은 복지 수준을 위해 높은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은 합의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자신의 적성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라는 점에서 미래세대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 전체적으로 연대의식이 확산하면서 세대 간 사회갈등도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

“현재 한국은 경제, 환경, 사회적 차원에서 모두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사안들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에서 확인되듯이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이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환경의 차원에서 수년 안에 기후변화는 임계점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역시 현세대부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미래와 후손들의 미래를 염려해서 공동체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치사상가)

“분배 중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서 필수적인 방향이다. 물론, 현재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여전히 발전주의적 담론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성장을 중시하고 있다. 단기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성장을 중시하는 발전주의적 담론은 앞으로 현실 적합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발전 단계에서 가능했던 급격한 성장은 이제 한국 사회의 규모나 수준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학 전문가)

“한국 사회의 난제로 외국인 이민/노동자 증가는 필요하며 점차 증가할 미래 모습이라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은 다문화 공생이 반드시 필요하다. 2050년에는 성 소수자 문제와 가족 유형의 다양화, 획일적 남녀 구분의 무의미성, 디자이너 베이비 등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과 공감대가 커질 것이므로 젠더 프리 개념이 강화될 것이다.” (행정학 전문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모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 판단한다. 맑은 환경과 개인의 건강함,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래와 도전 지향, 분배를 지향하는 R의 미래를 선호할 것이다. 물론 높은 수준의 복지를 위하여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겠지만, 그것이 본인의 노후와 자녀들의 미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또한 환경과 생태계 보전,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여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되,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는 신기술을 개발

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술 개발도 적극 지지할 것이라 생각한다.” (경제에너지 전문가)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 향후 우리 사회가 성장할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 따라서 경제학적 사고방식에서 인문학적 사고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저성장이 우리 사회에 부정적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분배 측면이 간과될 수 없다.” (직업교육 및 평생학습 전문가)

정리하면, 전문가들은 10명 중 6명 이상이 R미래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국민 참여단이 10명 중 4명 이상이 R미래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것과 대별된다. 전문가 그룹의 지지가 더 높은 셈이다. 이유도 국민들과 차별화된다. 우선, 전문가 그룹은 기존의 성장 담론에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한다. 더 이상의 성장 담론은 문제를 키울 뿐 당면한 새로운 문제, 예를 들면 경제적 양극화,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다문화 갈등을 풀 수 없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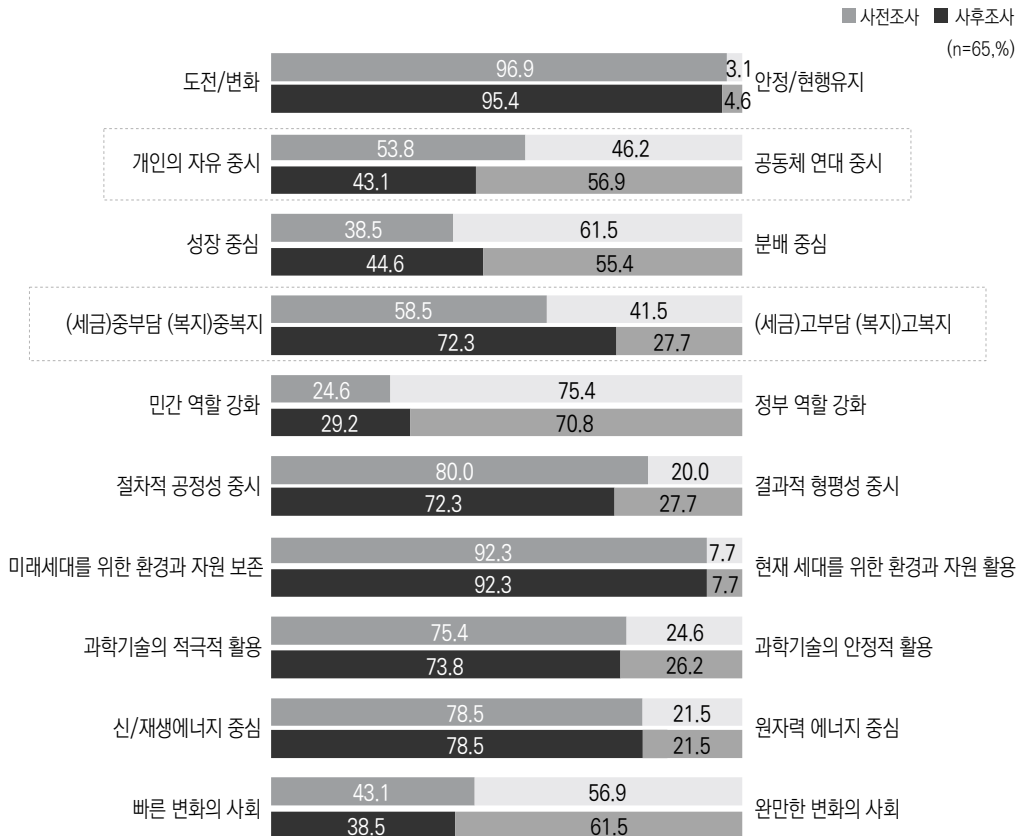
사회적 통합성을 강화하려면 R미래의 도래가 필요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는 공동체 연대의식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결속감을 훼손한다. 이렇게 되면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힘이 약해진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외부의 위협이나 급변은 치명적일 수 있다. 우왕좌왕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대안으로 분배의 강화가 언급되었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새로운 사회적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 4 미래 사회 구성요인 조사 결과

### 1) 미래 사회 구성요인에 관한 전문가의 선택

전문가들은 선호미래 실현을 위해 어떤 방향을 중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을까. [표4-1]을 통해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결과를 비교해보면서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자.

[표 4-1] 2050년 미래 우리 사회 구성요인: 사전 vs 사후(점선은 태도 변화된 부분)



조사 결과, ‘도전/변화’와 ‘안정/현행’ 유지의 경우, 사전/사후조사 결과 모두 약 95% 이상으로 ‘도전/변화’의 가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자유 중심’과 ‘공동체 연대 중심’의 선택에서, 사전조사에서는 개인의 자유 중시(53.8%)가 공동체 연대 중시(46.2%)보다 높았다. 그러나 사후조사에서는 공동체 연대 중시(56.9%)를 개인의 자유 중시(43.1%)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중심’과 ‘분배 중심’의 경우, 사전조사에서는 ‘성장 중심’ 38.5%, ‘분배 중심’ 61.5%로 나타났으며, 사후조사에서는 성장 중심 44.6%, 분배 중심 55.4%로 나타났다. 사후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여전히 분배 중심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응답 비율은 줄어들었다. 다양한 미래를 생각해보니 분배보다는 성장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음을 알 수 있다.

‘(세금)중부담 (복지)중복지’와 ‘(세금)고부담 (복지)고복지’에서는 사전조사의 경우, ‘(세금)중부담 (복지)중복지’가 58.5%로 나타났으며, 사후조사의 결과는 72.3%로 더욱 상승하였다. 앞서 분배 응답이 다소 줄었음을 감안하면, 이 조사에서도 고부담 고복지가 왜 줄었는지 이해가 된다. 미래를 생각할수록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전과 사후조사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것이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 연대 선호, 그리고 고부담 고복지보다 중부담 중복지 선호였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결속이 유지, 강화되려면 세금이나 복지 혜택은 중간 수준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중부담 중복지 수준도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스웨덴 등 북유럽처럼 올릴 경우 우리 사회의 결속력은 약화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민간 역할 강화’와 ‘정부 역할 강화’에서는 사전조사 결과, ‘정부 역할 강화’가 75.4%로 ‘민간 역할 강화’ 24.6%보다 더욱 중시되었다. 사후조사의 결과에도 ‘정부 역할 강화’ 70.8%, ‘민간 역할 강화’ 29.2%로 사전조사의 결과와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절차적 공정성 중시’와 ‘결과적 형평성 중시’에서는 사전조사 결과 ‘절차적 공정성 중시’가 80%로 ‘결과적 형평성 중시’ 20%에 비해 우선하는 가치로 나타났으며, 사후조사의 결과 역시 ‘절차적 공정성 중시’ 가치가 72.3%로 나타나 ‘결과적 형평성 중시’ 27.7%보다 우선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과 자원 보존’과 ‘현재 세대를 위한 환경과 자원 활용’ 가치에 대해서는 사전/사후조사의 결과 모두,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과 자원 보존’ 가치가 92.3%로 ‘현재 세대를 위한 환경과 자원 활용’ 7.7%보다 압도적으로 우선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적극적 활용’과 ‘과학기술의 안정적 활용’에 대해서는 사전조사 결과, ‘과학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75.4%로 ‘과학기술의 안정적 활용’ 24.6% 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나타났다. 사후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과학기술의 적극적 활용’ 73.8%이 ‘과학기술의 안정적 활용’ 26.2%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중심’과 ‘원자력 에너지 중심’에서는 사전/사후조사 모두, ‘신/재생에너



지 중심'이 78.5%로 '원자력 에너지 중심' 21.5%보다 우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빠른 변화의 사회'와 '완만한 변화의 사회'에 대해서는 사전조사의 경우, '완만한 변화의 사회' 56.9%가 '빠른 변화의 사회' 43.1% 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나타났다. 사후조사의 경우에도 '완만한 변화의 사회'가 61.1%로 '빠른 변화의 사회' 38.5% 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2) 선호미래를 위한 미래 사회 구성요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 참여단은 4가지 선호미래상 중 R미래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전문가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여기서 국민참여단과 전문가 사이에 매우 중요한 차이가 발견된다.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국민 참여단 중에서 R미래를 선호하는 참여자들은 10가지 구성요소 중 도전/변화, 분배 중심, 미래세대 중심, 신재생에너지 중심 등 4가지 요소를 선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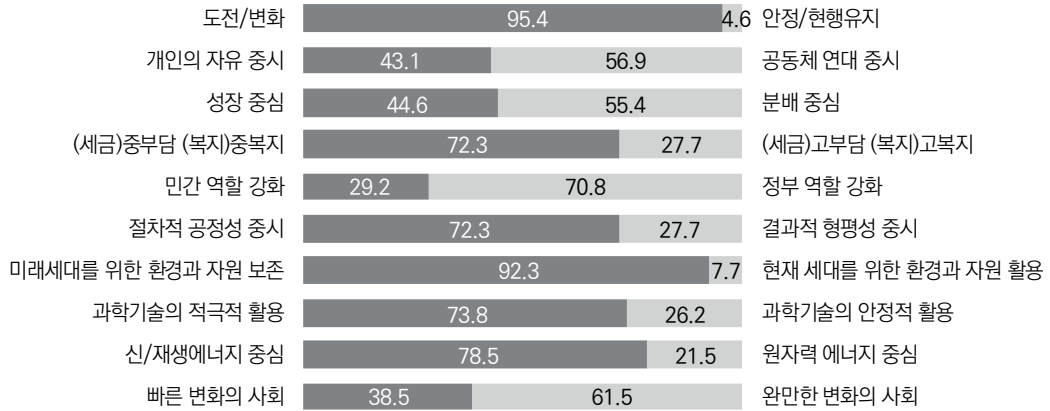
그러나 전문가 그룹에서 R미래를 선호하는 전문가들은 도전/변화, 공동체 연대 중시, 분배 중심, 정부 중심, 미래세대 중심, 과학기술의 급진적 변화와 활용,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 7가지 요소를 꼽았다. 국민 참여단보다 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는 당초 선호미래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론적으로 R미래가 갖춰야 할 10가지 구성요소를 설정한 바 있다. 이중 국민 참여단은 4개를, 전문가는 7개를 일치시켰다. 앞서, 국민 참여단이 4개의 가치만 선택한 것에 대해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R의 미래를 실현하자면 국민이 꼽은 4가지 요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나머지는 시기를 봐가면서 실현해야 할 요소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중 7가지를 일치시켰다. 우선, 이 같은 사실로 한가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론적 틀이 틀리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선호미래를 구성하는 요인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들이 국민 참여단보다 더 많은 구성요소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표 4-2] 선호미래 구현을 위한 우선 가치(사후)

(n=65,%)



7개 일치

2050년 미래사회		급진성장사회(P)	안정성장사회(Q)	보존분배사회(R)	현존분배사회(T)
도전/변화 VS 안정/현행유지		도전/변화	안정/현행유지	도전/변화	안정/현행유지
개인/공동체	자유/연대	개인 자유 중시	개인 자유 중시	공동체 연대 중시	공동체 연대 중시
	성장/분배	성장중심	성장중심	분배중심	분배중심
	세금/복지	중부담 중복지	중부담 중복지	고부담 고복지	고부담 고복지
	정부/민간	민간중심	민간중심	정부중심	정부중심
미래중심/ 현재중심	환경	미래세대 중심	현재세대 중심	미래세대 중심	현재세대 중심
	과학기술	급진적	점진적	급진적	점진적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중심	원자력, 화석에너지 중심	신·재생에너지 중심	원자력, 화석에너지 중심
	사회변화	빠른 변화 추구	보통	빠른 변화 추구	보통
공정성 VS 형평성		절차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	결과적 형평성	결과적 형평성

## 제3절

# 선호미래(R미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거버넌스 분야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 우리가 얻고 싶었던 것은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목록이었다. 국민 공론조사에서 우리는 국민에게 어떤 정책과제가 필요한지 묻지는 않았다.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르다. 이들에게는 정책과제를 물어볼 수 있다. 65명의 전문가가 응답한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5개 분야별로 정리했다.

먼저 거버넌스 분야(정치, 행정, 의회, 외교·안보 등)에서 제기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들은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를 꼽았다. 국민청원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부터 최신의 ICT 기술을 이용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 정치를 구현하고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입법 체계를 구축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현재 대의민주제 개혁, 특히 국회 개혁 의견도 나왔다.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법안 처리의 자동화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정치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거나 사회 변화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정당정치를 활성화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국회의 입법 및 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통치구조의 개혁, 특히 대통령제 개혁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현재의 단임제를 연임제로 변경하자는 제안, 대통령 중심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행정부 혁신에 관한 제안도 있었다.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정부의 능력을 강화하여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시대 변화

에 맞게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협치 체제를 형성하고 관료제를 혁신해야 한다는 제안, 공공데이터 거버넌스를 체계화, 합리화하여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정부의 미래 계획 기능을 강화하고 계획의 실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동북아의 정세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 2 성장과 발전 분야

성장과 발전 분야(경제, 노동, 복지, 분배, 기술혁신 등)에서 제기된 정책과제를 살펴보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의 구축이나 신규 창업을 위한 지원과 신종 업종의 규제 완화 방안 마련, 그리고 노동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법의 혁신적 개정을 제시했다.

대기업과 재벌의 횡포 방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협력,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의 합리적 분배,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 독일형 강소형 제조업 육성, 거주 지역 생활기반 중심 협동조합 활성화와 같은 정책과제가 제안되었다.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고용의 유연성은 높이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고임금을 적용하는 등 서구식의 고용 유연화를 도입하자거나 노동 유연성 제고와 함께 실직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나 분배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하여 소득 재분배를 위한 누진소득세 강화나 소득 구간에 따른 세금 차별화, 부동산 보유세 인상, 불로소득 차단, 부의 세습에 대한 제한 등이 제안되었다. 기술혁신의 성과를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로봇세의 도입 주장도 있었다.

복지제도의 재구축은 자주 제기된 의견이었다.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제도 개편 및 수준 강화, 고부담(세금) 고복지 사회로의 전환, 고용 중심의 복지에서 경제 사회활동 중

심의 복지제도로 전환, 기본소득 중심의 복지 제도와 이를 위한 세제 개편 같은 제안도 있었다. 그 외 연금제도 개혁 및 연금 수준의 현실화, 실업급여제도의 개편, 에너지 복지, ICT기술 활용을 통한 의료 복지 증진과 같은 제안도 나왔다.

고용과 노동, 일자리에 관한 제안을 살펴보면, 노동 시간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기본 일자리 보장제도 및 자아실현이 가능한 일자리 기회 보장, 인간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동 조건 확보, 주 32시간 근로제 도입,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보장을 위한 차별 폐지, 직무와 직종 전환의 자유도 증가를 위한 과정의 공정성 제고, 노동 과정의 차별 폐지 및 공정한 성과 분배 성과, 일과 가정(삶)의 양립(균형)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로서 온라인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동 보호 및 사회보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서 1인 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지원,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고령자를 위한 고용 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는 미래 노동시장에 맞도록 직업교육 및 고용서비스를 혁신하고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생애 단계별 교육시스템의 구축도 제안되었다. 사업장 및 기업 수준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공동의사결정 체제 구축 및 노사협력을 위한 노사문화 관행의 정착이 제안되었다.

산업 정책으로는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발전 정책 및 모델의 제안, 인공지능 기술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유경제 및 네트워크 경제의 구현, 데이터 경제의 구현,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제안되었다. 1인 기업이나 소기업 등을 위한 공유형 혁신 플랫폼 구축, 개인 및 소규모 공동체 단위의 생산 및 경제 체제의 구축, 가정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스마트 홈 공장 보급 등도 제안되었다.

과학기술 정책으로는 인공지능 및 로봇의 역할과 책임 소재 명확화,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및 유전자 조작 등 신기술 출현에 대한 기술영향 평가와 그에 기반한 대책 수립, 따뜻한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 과학기술 혁신의 결과물이 기업에게 독점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방지 및 공공 활용이 언급되었다. 또한, 사회문제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및 지원, 성과 기반에서 신뢰 기반으로 과학기술지원 정책 방향 전환, 인간과 로봇의 협업 체계 구축, 우주기술 혁신 역량 강화, 원자로 및 방사성 물질의 경제적이고 안전한 폐기 방법에 대한 기술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 3 의식주 분야

의식주 분야(정주 여건, 기후·환경, 식량, 여가 등)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쾌적한 거주 공간 보장, 공용 주거 주택(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주거)의 공급 확대, 청년층의 주거 안정, 고밀도 주거에서 저밀도 녹색 주거로 전환, 소규모 지역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생활권 단위의 자족성 확보, 스마트 시티 건설, 도시재생사업, 인구의 도시 집중화에 대비한 새로운 행정기반 구축, 인구 구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인프라 건설, 교통시스템 강화를 통한 이동 편의성 제고, 교통약자에게 보편적 교통 서비스 제공,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도심 내 교통문제 및 주차난 해결 등이 제안되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 인상,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부동산 정책 등이었다.

지방 발전에 관한 정책도 많이 제안되었다.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도로와 철도교통 및 대중교통망의 강화로 이동성 보장 강화, 최첨단 교통(완전자율주행, 초고속열차 등)을 통해 지역 접근성 강화, 혁신도시·지방 중소 도시 등을 지역의 거점으로 육성, 지방거점대학 육성, 지방거점 지역의 도시산업 육성,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주거의 실현, 교육 의료 등 주요 서비스의 지방연계, 도농 상생 발전, 신기술 도입을 통한 도농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이 제안되었다. 지역 간 갈등으로 등장할 수 있는 문제, 예컨대 지역 간 물 에너지 식량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배나 지역 간 환경 영향 감소를 위한 입지 설정, 자원 분담을 위한 주민 주도의 거버넌스 마련에 대한 정책과제도 제기되었다.

식량에 관한 정책으로는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친환경 식품 생산 및 유통 체계 확립,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저비용 식품 개발, 식량 기술 지원 강화, 무인 도시형 스마트 농장 인프라 구축, 농업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로봇 자동화 기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량 기술, 식량자원 변화에 따른 질병 및 신체 변화 등의 예측, 식량 자급 강화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모두 흥미로운 과제들이었다.

에너지 및 기후환경에 관한 정책을 보면, 개인 또는 가구 단위의 에너지 거래와 공유, 화석연료 사용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에너지 자급 도시(마을), 에너지 효율 패시브(Passive) 건축 촉진, 탄소 배출 제로 도시의 구현, 탄소세 등 환경세 징수, 탄소

제로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 추진,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고취 및 지속 가능한 기후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 지불 의사 고취, 친환경적 생활양식 확립을 위한 시민 사회의 활성화 등이 제안되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책에 적극적 참여 및 기후환경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 확보, 기후변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사후 복구)을 위한 종합적 대책, 기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에너지 기술 개발 등이 정책과제로 제안되었다. 일부는 현재도 진행하고 있으나, 매우 새로운 과제도 제안되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 4 개인과 공동체 분야

개인과 공동체(사회적 관계, 사회 구성원, 혼인·가족 등) 분야에서 제안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구 가족 혼인의 변화에 관한 정책과제로 1인 가구의 생활 안정성 및 삶의 질 제고,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과 이에 따른 정책 개편을 제안했다. 가족 개념의 변화와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 가족 개념의 재정비, 이를 반영하는 법 제도적 개선, 공동체 가족 또는 유사 가족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 지원 방안, 혈연이 아닌 사람들의 집합체로 유사 가족을 이루는 다양한 공동체 발굴 등도 언급되었다. 더 나아가 동물이나 로봇 등의 가족 화도 정책과제로 제안되었다.

혼인을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초중등교육과정에서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 출산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 출산을 위한 업무 부담 면제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제안되었다. 양성평등을 위하여 출산-교육-직장(사회)-노후 등 생애주기에서 제도적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결혼 제도와 문화 변화 등을 제안했다. 노인 공동체의 구성과 노인 돌봄에 관한 공동체 책임, 노인 고독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도 제안하였다.

개인의 도약을 지원하는 자기 개발 투자금 지원, 다양한 개인 정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인권법 제정,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교육 실시도 제안되었다. 다문화에 대한 존중의 아이디어도 제기되었다. 다문화 공생 확보 방안으로서 다문화 가정 지원

확대 및 다문화 환경 인식 개선, 다문화 시대에서 세계화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 공생 사회에 따른 인구 구성 변화 전망 및 이에 근거한 정책 방향 설계 등이 제안되었다.

공동체 및 사회관계의 발전에 관한 정책으로는 지역사회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자율적 사회 조직의 활성화, 지역 수준에서의 다양한 공동체 사업 전개, 동아리 활성화 정책을 통한 공감과 소통의 장 마련, 스마트 시티 내에 공동체 구축, 사회구성원 다수가 동의하는 공공생활의 문화 형성, 세대 간 공감대를 확산하는 문화 진흥, 인종성별종교 등에 따른 갈등 해소 방안, 한국형 공동체 사회의 실태 및 발전 전략,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양상 및 구성원의 가치 조사 등이 제안되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사회관계의 구축 지원,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소셜미디어의 역할을 분석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한 문화 활성화 지원, 사회적 신뢰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가상현실에서의 만남 및 관계에 대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정책과제로 제안되었다. 모두 흥미로운 과제였다.

## 5 휴먼 분야

휴먼(생로병사, 인간 정체성, 종교, 트랜스 휴먼 등) 분야의 정책과제로는 개인의 상황 혹은 가치관에 따른 선택(성 정체성, 맞춤형 아기 등)의 허용, 규제의 기준 마련, 안락사 허용 기준의 제도화, 인간 이외의 주체(동물, 로봇 등)에 대한 상속 허용, 생노병사를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는 생명 교육의 실시 등이었다. 고령화 시대에 트랜스 휴먼의 역할, 기술중심 시대에 삶의 질을 위한 종교의 역할, 대중매체에서 보이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성, 트랜스 휴먼 시대의 새로운 윤리적 기준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었다.





# 제5장

## 결론

---

제1절 국민이 원하는 선호미래

제2절 어떤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가

제3절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들 양성



## 제 1절 국민이 원하는 선호미래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선호미래 선택의 의미

#### 가. 모든 세대가 원하는 R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선호미래는 R미래다. 이 미래는 공공의 이익, 협력, 책임성 등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고 기후변화라는 커다란 지구적 난제를 풀어어나가는 데 주력한다. 이 때문에 위기 대응성이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이기도 하다.

R미래는 경제적 양극화, 지구온난화 등 기후와 환경문제, 저출산, 고령화, 공동체 유지에 대한 위기감 등을 돌파하는 데 주력한다. 세금은 좀 더 걷어서 복지 수준을 높이며, 기후변화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사회변환을 시도해 극복한다. 이 미래에서 시민들은 신재생에너지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며 지금의 시각에서는 매우 새로운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친환경 교통체계가 잘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축물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매우 적고 자체 에너지를 생산해 유지한다.

이렇듯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까닭은 자연환경의 급격한 훼손 때문이다. 2050년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12.8℃ 상승해 서울의 평균기온은 2019년 부산이나 제주와 비슷하다. 남해안과 서해안, 경상북도 동해안 일부 지역은 아열대화 되었고, 해수욕장의 이용이 급증했다. 날씨가 더워진 탓이다. 아열대 농작물 재배가 급증하는 등 한국인의 식재료와 식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다. 한가지 긍정적인 점은 나무의 생육 기간이 길어 도시의 숲이나 녹지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열섬 현상은 감소했다. 미세먼지도 대폭 감소하였다. 호흡기 질환과 이에 따른 사망자 감소도 눈에 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한 결과, 2050년 한국은 탄소 제로 사회를 구현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가 매우 심각해지면서 R미래의 정책가들과 시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고부담 사회, 복지는 확대하는 고복지 사회를 구축한다. 불합리한 차

별과 장벽 없이 대부분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한다. 고용 기회의 차별을 없애고 소수자를 고용하는데 적극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질 임금의 격차도 많이 줄었다.

첨단 과학기술과 빠른 변화에 대한 시민의 수용성도 증가했다. 평생직업이나 평생직장에 대한 의미는 상실한 지 오래다. 노동시장이 매우 유연해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프로젝트에 따라 다양한 직장에서 일한다. 정규직, 비정규직, 재택 근로, 플랫폼 노동, 클라우드 워크 등 근로 제공 형태도 자유롭다.

이 미래에서 한국인은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들과 어울려 산다. 다문화 가구와 외국인 가구가 증가했다. 그러나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공장의 자동화, 무인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는 이전보다는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 다문화 공생 사회를 구축하고 있으며 성적 소수자도 사회가 적극 포용한다. 전통적 개념의 가족과 신개념 가족이 공존한다.

지방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이 강화된다. 협상과 타협을 통해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는 정치 문화가 발달했다. 다양한 이해와 가치를 대변하는 정당이 다수 원내에 진출했다.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신뢰도,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 등도 이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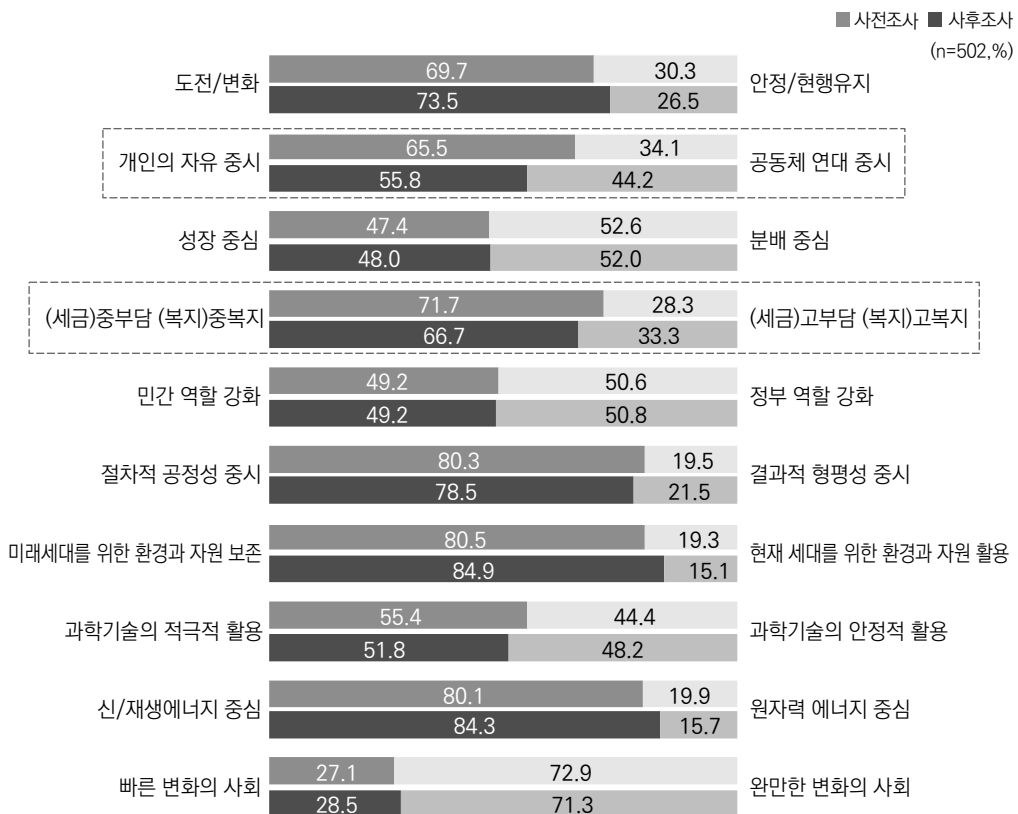
R미래가 실현된 미래 사회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지금과 비교해 무엇이 크게 달라진 것일까.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 공동체 해체 등의 문제의식은 현재도 갖고 있다. 같은 문제지만 풀어가는 방식에서 R미래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일까. 굳이 R미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앞서 언급한 문제들은 꼭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국민 참여단과 전문가들은 왜 R미래를 선택한 것일까. 어떤 사회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일까. 우선 R미래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가치의 변화를 살펴보자.

## 나. R미래의 실현을 위한 가치의 변화

우리는 선호미래 선택을 위한 숙의토론을 통해 시민 참여자들이 어떤 태도의 변화를 경험했는지 살펴보았다. 다양한 미래에 대한 숙의토론을 경험하기 전에 조사한 10가지 가치 선택과 숙의토론을 경험한 후에 선택한 가치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 세금의 고부담과 고복지를 선택한 참여자가 증가했다는 점들이다. 사전조사에서 응답자 중 34.1%가 공동체의 연대를 중시한다고 밝혔으나, 선호미래 속의토론 후에는 응답자의 44.2%가 공동체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10.1%포인트가 증가한 답변이었다. 사전조사에서 응답자의 28.3%가 고부담 고복지를 선호했으나, 선호미래 속의토론 후에는 33.3%가 고부담 고복지를 원했다. 5%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결국, 국민 참여단은 선호미래를 깊이 있게 토론한 뒤, 개인보다 공동체의 결속을 택하고, 세금과 복지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한다[그림 5-1].



[그림 5-1] 선호미래 속의토론 이전과 이후 참여단의 가치 변화

이 조사 결과는 R미래를 선호한다고 밝힌 참여자뿐 아니라 다른 미래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참여자까지 포함한 것이다. 선호미래 선택을 위한 숙의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 변화다. 선호미래를 선택하는 과정은 정치적 과정과 비슷하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을 뽑을 때의 과정과 비슷하다는 얘기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려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야 할지 선택하는 과정은 내가 선호하는 바람직한 미래를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숙의토론 전과 후의 가치 선택의 변화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연대와 결속을, 세금은 더 높이고 복지 수준도 높이는 방향을 국민이 제시했다. 공동체의 회복과 분배의 강화로 해석된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연대가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개인의 자유도가 높은 사회에서 공동체의 붕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북유럽 사회는 개인의 선택, 자유를 매우 중시하지만 수많은 개인이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 봉사하거나 헌신한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 어느 나라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그 예다.

그렇다면 위의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가. 30대 싱글들의 삶을 연구한 논문(박성원·진설아, 2019)을 보면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sup>1)</sup> 이들은 전국에 거주하는 30대 싱글 80여 명을 만나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 물었고, 30대 싱글들은 개인의 성장을 도와주는 공동체의 등장을 원한다고 대답했다. 공동체는 공동체의 구성원, 개인이 성장해야 성장한다. 개인은 성장하면서 얻은 열매를 공동체 구성원들과 나누고, 공동체는 성장한 개인들이 공유한 자원으로 또 다른 개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미국의 교육학자이자 철학자인 듀이가 주장한 위대한 공동체(Great Community)의 개념과 비슷하다(Dewey, 1927).<sup>2)</sup>

국민 참여단이 선호미래 숙의토론에 참여하면서 바뀐 가치의 변화는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을 원하는 것이다. 개인과 공동체가 같이 성장하는 사회를 원하는 것이다. 개인의 희생으로 공동체가 존속되는 기존의 공동체 개념과는 다르다. 개인이 없는 공동체가 없듯, 개인이 성장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공동체의 붕괴는 수많은 개인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획일적인 잣대

1) 박성원·진설아(2019), 청년 미래 성장 지원 방안의 새로운 관점: 30대 싱글들의 일, 주거, 관계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10 6호, 68~112.

2) Dewey, J.(1927), *The Public and Its Problems*, Denver: Alan Swallow.

로 개인의 성장을 평가하고, 줄을 세워 1등부터 꼴지를 나누고, 그에 따라 일자리와 임금에 차별을 두는 공동체는 지속할 수 없다. 국민 참여단은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R미래를 지지한 참여단이 밝힌 의견을 다시 살펴보자(제3장 선호미래 조사 결과 참조). R미래 지지자들은 성장의 기회를 차별 없이 공정하게 부여하는 사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성장을 연계해야 한다는 국민 참여단 전체의 의견과 연결된다. 결과적 형평성보다 절차적 공정성을 원하는 R미래 지지자들은 공정성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라면 개인은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능력을 믿는다는 점, 결과에 승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자신감 있는 시민들이다.

이들은 현재를 유지하는 것보다 도전과 변화를 선택해 현재를 바꾸려고 노력하며, 이런 노력을 기후변화, 환경문제를 극복하는 데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R미래 지지자의 90%가 신재생에너지로 사회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는 원하지 않는다. 완만하게, 시민들이 수용 가능한 속도로 목적을 이루자고 주장한다. 사회가 극복해야 하는 목적을 분명히 정한다는 점에서 목적 중심적으로 보이지만, 빠른 결과보다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적이다. 인간 중심의 사회를 실현하려는 노력으로도 보인다.

다시 전체 참여단의 가치 변화를 살펴보자. 앞서 두 항목에서 큰 변화를 확인했지만, 성장과 분배, 민간 역할 강화와 정부 역할 강화는 사전, 사후 의견선택에 변화가 미미했다. 매우 침예하게 의견이 엇갈린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어떤 미래를 선택하든 이 두 가지 이슈는 대립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듯 의견이 엇갈린다면 향후 이 문제는 성장과 분배의 갈등이 아니라, 어떤 성장이나, 또는 어떤 분배나 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예컨대, 꼭 경제적 성장이나고 물을 수도 있다. 최근 회자되는 포용적 성장도 대안이며, 정신적, 문화적 성장도 추구할 만하다. 분배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원을 우선해서 배분할 것이냐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성장과 분배처럼 늘 대립해왔던 이런 이슈 외에 눈에 띄는 것은 과학기술의 적극적 활용과 안정적 활용의 대립이다. 숙의토론을 경험한 후 국민 참여단은 과학기술을 좀 더 안정하게 활용하자는 의견에 더 많은 손을 들어줬다. 과거에 우리 사회 시민들은 과



학기술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데 이견을 달지는 않았다. 세계 선진국과 비교해 격차도 컸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일궈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무조건적 과학기술의 발달이 아니라 사회가 수용하는 선에서, 안정적이고 윤리적인 발전을 시민사회가 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과학기술의 활용과 윤리적 문제는 향후 우리 사회에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다. 전체 참여단의 이런 의견은 R미래 지지자들의 의견과 같았다.

## 2 세대별 선호미래의 시사점

### 가. 20~30대가 원하는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선호미래는 R미래지만 2위를 놓고는 세대별 의견이 엇갈린다. 사실 R미래가 선호미래 1위라고 해도 국민 참여단의 과반을 넘지 못했다. 선호미래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선호미래1위와 선호미래2위가 서로 타협하는 제3의 미래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원하는, 그리고 추구할 수 있는, 세대의 의견을 좀 더 포괄하는 미래상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대별 선호미래 2위의 차이는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20대와 30대가 뽑은 선호미래 2위는 P미래다. 그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미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 과학기술의 급진적 발전도 수용한다. 경제는 성장 중심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장려되며, 환경과 에너지의 문제도 기술력으로 풀어간다. 한마디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경제성장의 기초를 이어가는 미래다.

P미래에서 시민들은 스마트 시티에 거주한다. 어디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동화, 지능화된 미래 도시다. 거주하는 곳은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변한다. 반응형 주택이라고 부른다.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에너지는 핵융합, 수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에너지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기존의 신재생에너지원인 풍력, 조력, 태양열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이 미래에서 시민들은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다. 인공지능 로봇은 쉬지 않고 일하며, 사람처럼 유급 병가나 퇴직금을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업을 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기업은 탈중양화하여 주주들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서로 의견을 모아 회사의 경영 방침을 정한다. 2050년 P미래에서 10대 대기업은 플랫폼 운영회사, 인터넷 서비스 기반의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시민들은 인공지능 로봇, 증강 인간,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변형 인간 등과 함께 공존한다. 인공지능 로봇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도 머지 않은 미래에 정치적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가족의 개념도 많이 바뀌었는데, 1인 가족의 증가 추세는 여전하고, 유사 가족이나 사이버 가족도 확산되었다. 전통적인 결혼은 법적, 제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선호미래 선택에서 20대는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을까. 이들은 도전과 변화, 개인의 자유 중시, 분배보다 성장중심, (세금)중부담 중복지, 미래세대 중심, 과학기술의 적극적 활용,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절차적 공정성(기회의 평등) 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4가지의 미래 시나리오에서는 R미래를 가장 선호한다고 밝혔지만, 이들이 추구하겠다는 가치의 조합으로만 보자면 P미래에 가깝다. 연구진의 이론적 추정이지만, 가치의 조합만으로는 P미래를 가장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30대는 20대와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하지만, 몇 가지 가치의 선택에서는 독자적인 특징을 보인다. 30대도 20대처럼 선호미래 2위로 P미래를 뽑았다. 이들이 선호하는 가치의 목록에서 20대와 다른 점은 정부보다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 성장보다는 분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20대보다 사회생활의 경험이 많다는 점에서 정부보다 민간의 역할이 커져야 하는 점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분배를 선호한 배경에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지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수 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만 경쟁 중심 사회에 지쳐있다는 점, 자신이 일한 만큼은 적절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점 등은 이들의 의견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다.

#### 나. 40~50대의 2위, 60대의 1위 T미래

40대와 50대가 뽑은 선호미래 2위는 T미래다. 흥미롭게도 60대가 뽑은 선호미래 1위가 T미래다. 60대의 39.7%가 T미래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개최된 숙의토

론 공론조사에서 서울에 거주한다는 60대는 “2050년이면 90세가 넘는데, 죽기 전에 T미래가 실현되는 것을 꼭 보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T미래는 인구 감소로 지역의 소멸, 잦은 경제위기, 취약계층의 연이은 자살, 개인에게 생존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 분위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권, 다양한 정신병리의 증가라는 현상이 만연하자 정책가들과 시민들이 공동체별로 자생하는 방법을 찾자고 결심하면서 만들어진 미래다.

이 미래는 2000년까지 인구 감소와 도시 쇠퇴, 슬럼화로 고통을 겪다가 지역주민의 자발적 환경 개선 운동으로 새롭게 변모한 영국의 리버풀과 비슷하다. 영국의 록그룹 비틀스의 고향으로도 유명한 리버풀은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낡은 집을 수리하고, 도시 정원을 가꾸며, 철거되는 집의 폐자재를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파는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T미래 시민들은 도심 농장과 협동조합을 확산시켰다. 지역 화폐를 보급하고 물물교환과 공유의 공간도 확대했다. 이웃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고소득자에게는 부유세를 부과했다. 소비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동시간은 단축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제도를 정비했다. 이렇듯 축소지향의 경제, 사회시스템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것이 이 미래의 전략이었다. 축소 균형적 시스템의 운영으로 국내총생산은 사실상 0%대로 사회적 의미가 거의 없어졌다.

T미래는 중소 도시별로 주거, 탁아, 교육, 일터, 상업 시설을 갖췄다. 다른 지역으로 나가 공공서비스를 찾을 필요가 적어졌다. 자급자족이 권장되었다. 시민들은 본업이 서비스업이면서도 집에서 강아지 용품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한다. 어떤 시민은 중소기업 사원이지만 주말에는 수제 맥주 제조자로 변신한다.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시민들은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경제활동을 조율한다.

지역 내 쓰레기는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내의 자동차 속도는 30km/h 이하로 제한된다. 축소 균형의 원칙에서 대량생산은 축소되고, 개인의 취향을 고려해 소량 생산이 확대된다. 회사의 입사 연령은 제한이 없다. 학교, 병원, 공공교통시스템, 마을회관, 문화예술, 도서관, 녹지, 공원, 농장 등 자원 절감 녹색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이 많다. 산업형 효율성 높은 로봇보다 인간의 눈치를 잘 살피는 로봇을 개발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런 선호는 T미래의 특징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민간 중심보다 정부 중심을 선호하고, 세금은 고부담, 복지는 고복지를 추구한다. 정치는 시민의회 중심으로 운영된다. 직업정치인 30%, 무작위 추첨으로 선택된 시민 70%와 시민의회 의장 1명이 사회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든다.

이 미래에서 시민들은 인구 감소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마을의 아이로 간주한다. 다문화 3세, 4세들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마을 주민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회 실험을 진행하고, 열린 지역주의를 표방해 타지 주민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한다. 연대와 협력을 일궈내는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

40대~60대가 선택한 가치 목록에서 흥미로운 점은 20~30대와 달리 T미래의 구성요소를 더 많이 선호한다는 점이다. T미래의 구성요소는 안정/현행유지, 공동체 연대의 중시, 분배 중심, 고부담 고복지, 정부 중심, 현재세대 중심, 과학기술의 점진적 활용, 원자력 및 화석에너지 중심, 완만한 사회변화 그리고 결과적 형평성 등이다. 이중 20대와 30대는 T미래의 구성요소 중 완만한 사회변화만을 선택했다. 40대가 분배 중심, 정부 중심, 완만한 사회변화, 과학기술의 안정적 활용을 선택한 것과 비교된다. 50대와 60대도 40대와 의견이 비슷하다.

인구 구성 비율을 감안해 만약 투표로 선호미래를 결정한다면 R미래를 기본으로 T미래의 특징을 담은 제3의 미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20~30대보다 40~60대의 인구가 더 많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연환경 보존사회의 R미래에 경제적 성장, 과학기술의 급진적 발달보다는 분배와 완만한 변화를 추구하는 T미래가 섞일 가능성이 높다. 20~30대는 이 미래를 원할 것인가.

## 제2절

# 어떤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가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최가능미래 Q의 조건

앞서 우리는 세대를 아우르는 선호미래 R을 살펴보고, 20~30대가 그 다음으로 원하는 P의 미래, 그리고 40~60대가 원하는 T의 미래까지 살펴보았다. 선호미래는 당연한 말 같지만 선호함을 선언한다고 실현되지는 않는다. 선호미래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러줄 뿐이다. 물론 이 방향이 없으면 우리는 변화의 다양한 파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목적지가 있어야 변화를 순풍으로 해석하고 이용할지, 역풍으로 해석하고 맞서 싸우거나 회피할 수 있다.

여기서 변화의 바람이란 선호미래가 실현되는 조건과 환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래에 일어날 개연성이 가장 높은 미래가 선호미래 실현의 터전과 조건이 된다. 쉽게 말해,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 바람은 선호미래이고, 이 미래를 실현하려면 의사가 되는 조건, 즉 의대에 입학하고 수련의 생활을 통과해야 한다. 만약, 의대가 없거나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의사가 될 꿈을 이룰 수 없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꿈은 가장 개연성이 높은 Q미래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Q미래라는 조건에서 R미래를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Q미래는 개인의 자유 중시,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 부담의 가중, 갑작스런 사회변화는 혼란만 준다는 사회적 인식, 현재세대의 과중한 부담은 우려스럽다는 의견, 민간중심의 사회 운영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믿음이 만들어낸 미래다. 이 미래의 시민들은 안정적인 방법으로 경제성장의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이 미래의 시민들은 대도시, 메가 시티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한다. 지방 중소 도시는 인구가 감소한 지 오래되었다. 메가 시티는 디지털 기술, 첨단 교통수단, 다양한 신산업과 직업이 생겨나는 곳이다.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시민들은 불확실성이 높고 효율성도 낮은 신재생에너지나 핵융합에너지보다 원자력 에너지를 선호한다. 물론 이들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뛰어 들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점진적 에너지 활용의 변화를 추구한다.

기후변화 문제보다는 경제적 성장에 노력한 결과, 지구의 온도는 다른 미래와 비교해 가장 높이 올랐다. 홍수, 가뭄, 폭설, 폭염 등 자연재해가 증가했다. 여름 온도는 3도가 상승했고, 겨울 온도는 6도나 상승했다.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가 악화되어 의료비용으로 지출이 많다.

이 미래에서 시민들은 새로운 대기업에서 일한다. 2019년 기준으로 30대 대기업의 순위는 2050년 현재 많이 바뀌었다. 신생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올라선 것이다. 이런 자이언트 기업을 일군 기업가들은 권위주의 문화를 싫어하고, 창의적 발상을 중시하며, 치열하지만 룰을 지키는 공정한 경쟁으로 사회가 성장한다고 믿는다. 디지털 직(gig) 경제의 확대로 노동의 유연성이 강화되었다.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다만 세금의 중부담, 복지의 중복지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Q미래에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고령자 가구, 1인 가구, 다문화 가구, 외국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한다.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해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시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이 증대해 레즈비언이나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에 대한 포용력이 높다. 혈연, 혼인 중심의 전통적 가족제도 중심에서 1인 가족, 동거 가족, 게이 커플 등 가족 유형은 다양화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Q미래는 선호미래와는 거리가 멀다. 자연스럽게 회피미래 1위가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미래를 국민 참여단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해, 시민들은 이런 미래에서 살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현재도 이런 미래로 가고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 미래는 우리의 미래환경, 조건이 된다. 즉, Q미래에서 R미래를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의 모습은 어떠할까.

## 2 Q의 환경에서 R의 미래를 원하는 사회

국민 참여단이 가장 개연성이 높은 미래로 Q미래를 꼽았다. 이는 우리 사회가 현재 처럼 무한경쟁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대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으며,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에 살 것을 암시한다. 소비를 통한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에 여전히 기대어 있어 환경문제나 기후변화 대응은 차선으로 그 중요성이 떨어

어질 수밖에 없다. 개인적 자유를 증시하며, 가족의 구성도 기존의 전통적 가족과 유사 가족 같은 비전통적 가족도 별 무리 없이 등장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미래에서 국민의 바람은 R미래의 성취에 있다. R미래는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증시한다. 성장보다 분배를 증시하고, 세금을 높여서라도 복지를 더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간보다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과학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한다.

여러모로 Q미래와 방향성 측면에서 많이 다르다. 우리 사회는 근대화 이후 Q미래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이 미래의 핵심목표여서 그렇다. 에너지의 활용만 봐도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중심이다. 지금과 같다. 결과적 형평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부르짖는 절차적 공정성을 원하는 것도 지금 우리 사회와 닮았다. 세금을 가급적 적게 내려고 하는 점도 비슷하다.

이렇듯 우리 사회가 Q미래로 가고 있는데, 국민은 R의 미래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R의 미래는 Q와는 다른 방향이다. 가능할까.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미래의 시민들은 이런 미래를 일궈낼 수 있을까. 누가 이 미래를 이끌고 나아갈 수 있을까. 확대를 외쳤던 사람들 속에서 축소를 외칠 수 있을까. 수많은 성장(혁신성장, 포용성장, 녹색성장 등)을 주장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분배라는 올드한 가치를 다시 외칠 수 있을까. 세금을 더 건자고 말할 수 있을까.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자고, 그러자면 원자력 에너지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Q미래와 R미래가 매우 배타적이지는 않다. 예를 들어, 두 미래의 지지자들은 도전과 변화를 원하고 있으며, 절차적 공정성을 추구하고, 완만한 변화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도전과 변화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두 미래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 Q미래는 경제적 성장에, R미래는 기후변화 극복이 목적이다. 이 둘은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일까. Q미래는 소비의 확대를 통한 성장을, R미래는 소비의 축소를 통한 환경보존을 추구한다. 확대 균형과 축소 균형은 서로 배타적인 것일까.

우리는 Q의 조건에서 R로 나아가는 사회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물질적 풍요에서 마음의 풍요로 사회적 목표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완화하고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는 사회 통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가족의 개념도 유연하게 바뀌어야 하며,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들도 차별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좋은 삶을 꿈꿀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각각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의 장점을 연결하는 노력도 경주되어야 한다. 분야별 경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경계 밖으로 나가기를 서슴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단순한 경제·정치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문제이면서 환경적 문제이고, 사회적 문제이면서, 국제 사회의 이슈가 되는 문제이다. 이는 우리가 겪는 위험이 분야별 고유(idiosyncratic) 리스크뿐 아니라 분야 간 체계적(systemic) 리스크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 지구 생태계를 보존하는 청지기로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자연 생태계, 미래세대, 글로벌 시민사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우리가 당면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이 요구된다. 자연 생태계의 보존은 R미래뿐 아니라 다른 미래의 지지자들도 한결같이 걱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삶의 조건이 되는 주요한 터전이 망가지면 생존은 불가능하다.

### 3 R의 미래를 실현하는 방안: 전문가들의 견해

전문가 그룹도 국민 참여단과 마찬가지로 가능미래 1위로 Q미래(안정성장 미래)를 선택했다. 전문가 65명(거버넌스, 성장과 발전, 의식주, 개인과 공동체, 휴먼 분야 등으로 구성) 중 38.5%가 안정성장 미래가 가장 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사회가 추구한 신자유주의, 성장 중심, 도전보다 안정의 중시, 급진보다 점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측해 Q미래를 가능미래로 선택했다.

이들이 선택한 회피미래 1위도 Q미래(안정성장 미래)였다. 전문가 그룹 중 43.1%가 안정성장 미래를 가장 회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거 유입으로 사회 갈등 유발, 1인 가족 증가로 공동체 해체, 대기업 중심의 경제 개발모델의 한계, 계급제 사회의 심화, 성장 일변도의 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 실패 등은 피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선호미래 1위는 R미래(보존분배 미래)였다. 전문가 그룹 중 63.1%가 보존분배 미래를 가장 선호하다고 응답했다.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도전 지향성을 확대하고, 급



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의 마련, 성장 담론을 대신할 대안의 실행, 높은 복지 수준의 국민적 요구 등을 고려하면 R미래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경제학적 사고방식에서 인문학적 사고방식, 삶의 질을 향상하는 분배의 확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연대, 외국인노동자나 성 소수자 등과의 공생 등은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응답했다.

전문가 그룹은 R미래를 실현하는 정책으로 다음의 5가지 분야를 꼽았다.

거버넌스 분야의 정책과제로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국민청원제도 개선,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했다. 정치적 소외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선거제도의 개혁, 국회의 입법 및 정책역량 강화, 지방분권의 강화와 동북아 협력체계 구축 등도 제언했다.

성장과 발전 분야의 정책과제로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제 정책의 강화, 누진소득세 강화, 소득구간에 따른 세금차별화,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을 제시했다. 복지제도의 재구축,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전환, 기본소득 중심뿐 아니라 주 32시간 근로제 도입, 우주기술 혁신 역량 강화, 원자로 및 방사성 물질의 경제적이고 안전한 폐기 방법 개발 등도 주장했다.

의식주 분야의 정책과제로는 공용 주거 주택 공급의 확대, 청년층 주거 안정, 소규모 지역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생활권 단위의 자족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도로, 철도교통 및 대중교통망 강화로 이동성 보장, 교육 의료 등 주요 서비스의 지방연계 전략, 개인이나 가구 단위의 에너지 거래와 공유, 에너지 자급 마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인과 공동체 분야의 정책과제로는 가족 개념의 재구성, 이를 반영한 범제도적 개선, 유사 가족 등의 새로운 가족 지원 방안, 동물 및 로봇 등의 가족화를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개인을 존중하면서도 개인의 고립을 막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 도입, 다문화 가정지원 확대, 자율적 사회조직의 활성화, 지역 수준에서 다양한 공동체 사업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휴먼 분야의 정책과제로는 성 정체성, 맞춤형 아기 등 개인의 가치관을 고려해 규제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인간 이외의 주체(동물이나 로봇 등)에 대해서도 상속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고령화 시대에서 트랜스 휴먼의 역할, 기술중심 시대에 종교의 역할, 인간과 기계의 새로운 관계를 정책 연구의 과제로 제안했다. 표 5-1에서 전문가들의 의견 중 주요 과제들을 요약 정리했다.

[표 5-1] 5개 분야에서 제기된 R미래 실현 방안

분야	주요 정책과제	주요 연구 과제
거버넌스	-국민청원제도 개선, 국민소환제 도입 -정치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 제도를 개혁	-정부의 미래 계획 기능을 강화하고 계획의 실행에 관한 모니터링 구축
성장과 발전	-거주 지역 생활기반 협동조합 활성화 -주 32시간 근로제 도입 -자급자족이 가능한 스마트 홈 보급 -1인 기업이나 소기업 등을 위한 공유형 혁신 플랫폼 구축 -성과기반에서 신뢰기반으로 과학기술지원 정책 방향 전환	-기본소득 중심의 복지 제도와 이를 위한 세제 개편 -원자로 및 방사성 물질의 경제적이고 안전한 폐기 방법에 대한 기술개발
의식주	-고밀도 주거에서 저밀도 녹색 주거로 전환 -소규모 지역의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교육 의료 등 주요 서비스의 지방 연계 -기후환경 분야의 국제적 리더십 확보	-생활권 단위의 자족성 확보 -식량자원 변화에 따른 질병 및 신체 변화 등의 예측
개인과 공동체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과 정책 개편 -노인 돌봄에 관한 공동체 책임 강화 -다문화 공생 사회에 따른 인구 구성 변화 전망 및 정책 방향 설계 -사회적 신뢰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혈연이 아닌 사람들의 집합체로 유사 가족을 이루는 다양한 공동체 발굴 -한국형 공동체 사회의 실태 및 발전 전략
휴먼	-성 정체성, 맞춤형 아기 등의 허용 -인간 이외의 주체(동물, 로봇 등)에 대한 상속 허용	-트랜스 휴먼 시대의 새로운 윤리적 기준 마련

## 제3절

#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들 양성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미래 문해력과 미래 지향성의 향상

미래 문해력(futures literacy)은 미래적 상황을 예측하고 필요한 준비 및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문해력은 통상 언어를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앞에 미래를 붙여 미래이해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근대화에 급속도로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문해력의 증가이었다. 국민의 90% 이상이 글자를 읽고 쓰기 때문에 지식사회, 정보화 사회에도 잘 적응할 수 있었다.

지금은 미래 문해력이 필요하다. 미래에 대한 정보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다양한 변인들이 만들어가는 미래상을 이해하며, 이런 미래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예측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박가열 외(2019)는 혁신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240여명을 서면으로 인터뷰하면서 앞으로 갖춰야 할 역량 1위로 미래 예측력을 꼽았음을 밝힌 바 있다. 미래 예측력은 보유도와 필요도의 차이도 커서 지금 당장 이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었다(필요도가 높는데 현재 보유도가 낮으면 당장 역량을 키워야 한다).

시민들은 미래연구에 참여할 때, 즉 다양한 미래를 논의해보고 이 중에서 어떤 미래가 실현될 개연성이 높은지, 어떤 미래가 바람직한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래 문해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미래지향적(future oriented) 태도도 공고해진다. 변화를 앞서 예측해보고 대응하는 태도가 있다면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미래 지향성을 논의한 논문들은 많다. 분야도 다양한데 심리학, 행동과학, 청소년학, 직업학, 소비자학, 경영/마케팅, 공동체, 삶의 질, 문화, 경제학, 보건 의료, 미래학, 윤리학, 과학기술학, 사회학, 환경학 등을 들 수 있다(송영조 외, 2018). 매우 광범위하게 미래 지향성이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래 지향성은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이다. 미래의 나(future self)를 상상할 수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미래의 나라는 존재는 미래세대를 뜻하기도 한다. 현재세대의 목소리만 듣지 않고 미래세대의 목소리도 들으려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미래지향적 태도를 갖추고 있으면 미래 준비에도 도움이 된다. 미래를 적절히 예상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매우 유동적이고 비선형적이며 역동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또한 미래를 바꾸려면 내부와 외부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가능하다는 사실도 안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잠재적 이익, 손해보는 집단,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예상되는 위협에 대한 대비(prevention), 모든 위험 상황에 대한 대비(precaution), 가능성은 낮아도 발생하면 커다란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이슈에 대한 대비(preemption), 그리고 비상계획을 의미하는 대비(preparedness) 등이다. Precaution은 예컨대, 새로운 기술개발에 따른 윤리적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기술개발을 잠시 멈추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행동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진행한 선호미래를 위한 숙의토론이 앞서 언급한 미래 문해력, 미래 지향성, 미래준비력 등을 향상시킨다고 본다.

## 2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들

우리는 결론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들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글을 마칠까 한다. 미래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점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양한 가능성은 예측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닥칠 변화의 모습과 양상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2020년 초에 겪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이를 극명하게 증명한다. 전 지구적 바이러스의 창궐은 미래연구 보고서의 단골 메뉴지만 2020년에 발생할 줄은, 그것이 변종 바이러스임은, 그것이 특정 그룹에 의해 확산될 줄은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방법은 다양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역량의 향상이다.

우리는 미래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시민들을 양성하기 위한 7가지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다양한 변화를 이해하고, 필요한 변화는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해야 한다.

둘째, 과학기술의 발전을 사회적, 정치적 관점에서 적용하는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을 산업적 이해관계로만 보는 시대는 끝났다.

셋째,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문제를 지역의 인력과 자원을 연결해 해결하는 시민들을 육성해야 한다. 이런 지역사회는 글로벌 챔피언으로 대접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외 시민들과 연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사회적 프로그램이 확산되어야 한다. 지구적 문제에 기여하는 시민들이 많아야 한다.

다섯째, 사회 전 영역에서 미래세대의 필요를 예측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스웨덴의 15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적극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섯째, 혁신의 열매를 사회에 고르게 분배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정부에 주문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상상하고, 이를 만들기 위해 참여하며 형성하려는 시민들을 양성해야 한다.

## 참고 문헌

---

1. 문헌 자료
2. 웹 사이트





## 참고 문헌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문헌 자료

- 국무총리실(2017), 『신고리 5·6호기정책권고안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 김창수(2019), 「숙의민주주의 기반 공론조사와 정책딜레마: 부산광역시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 시민공론화 사례의 분석」, 『지방정부연구』, 23(2), 한국지방정부학회, p. 276
- 박성원 외(2018), 『국민선호미래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원·진철아(2019), 「청년 미래 성장 지원 방안의 새로운 관점: 30대 싱글들의 일, 주거, 관계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106), pp. 68~112
- 신상준·이숙중(2016), 「정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 행정학보』, 50(2), pp. 1~37.
- 아론 벤제브(2006), 『러브 온라인』, 시그마프레스.
- 임동우(2018), 『도시화 이후의 도시』, 스리체어스, p. 92.
- 오수길·이지문(2017), 「정부 신뢰 제고를 위한 공론조사의 활용 가능성」, 『한국부패 학회보』, 22(2), p. 31.
- 은재호(2016), 『갈등해결을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절차 매뉴얼 개발』, 국무조정실, p. 107.
- 정부부처합동(2019), 『2030 미래차 산업발전전략』
- 조성겸, 조은희(2007), 「공론조사의 숙의 유도 방법: 한국 상황에서의 문제점 검토」, 『한국조사연구학회』, 8(2), pp. 43~66.
- 조혜경(2017), 『탈성장(degrowth)의 이론적 기초』,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 최태현(2018), 「참여 및 숙의제도의 대표성: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2(4), 한국행정학회, pp. 501-529.



Dewey, J.(1927), *The Public and Its Problems*, Denver: Alan Swallow.

Miller, Riel.(2015), “Learning, the Future, and Complexity. An Essay on the Emergence of Futures Literacy”,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50(4), pp. 513-523

Poli. Roberto.(2015), “Social foresight”, *On the Horizon*, 23(2), pp. 85-99.

James S. Fishkin.(1991), *Democracy and Deliberation*, Yale University Press.

## 2 웹 사이트

국토교통 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

통계청, <http://census.go.kr>

문화체육관광부(2017. 7.17), 「이준웅 칼럼: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공론조사의 이해」,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cultureColumnView.do?newsId=148839269>)



## 부 록

---

부록 1: 공론조사 설문지

부록 2: 4가지 미래 시나리오



부 록 1

공론조사 설문지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2050년 대한민국 선호미래  
국민숙의토론』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아이디		분임	
이름		날짜	2019년 11월 ____일

Q1. 현재와 같은 상태로 30년이 지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가능성(개연성)이 가장 높은 미래 모습은 P, Q, R, T 중 무엇입니까?

- ① P                      ② Q                      ③ R                      ④ T

Q1-1.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가능성(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문장 이상으로 작성해 주세요)

Q2.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꼭 피해야 하는 미래의 모습은 P, Q, R, T 중 무엇입니까?

- ① P                      ② Q                      ③ R                      ④ T

Q2-1. 앞서 말씀하신 미래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문장 이상으로 작성해 주세요)

Q3. 선생님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 미래세대가 살고 싶은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모습은 P, Q, R, T 중 무엇입니까?

- ① P                      ② Q                      ③ R                      ④ T

Q3-1. 앞서 말씀하신 미래를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모두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문장 이상으로 작성해 주세요)

Q4-1. 앞서 말씀하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선호하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지를 선택(체크)해 주세요.

선호하는 미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우선시 해야 할 가치		
1	도전/변화 vs 안정/현행유지	<input type="checkbox"/> 도전/변화 <input type="checkbox"/> 안정/현행유지
2	개인의 자유 중시 vs 공동체 연대 중시	<input type="checkbox"/> 개인의 자유 중시 <input type="checkbox"/> 공동체 연대 중시
3	성장 중심 vs 분배 중심	<input type="checkbox"/> 성장 중심 <input type="checkbox"/> 분배 중심
4	중부담 중복지 vs 고부담 고복지	<input type="checkbox"/> (세금)중부담 (복지)중복지 <input type="checkbox"/> (세금)고부담 (복지)고복지
5	정부 중심 vs 민간 중심	<input type="checkbox"/> 정부 역할 강화 <input type="checkbox"/> 민간 역할 강화
6	공정성 vs 형평성	<input type="checkbox"/> 절차적 공정성 중시 <input type="checkbox"/> 결과적 형평성 중시
7	(환경, 자원) 미래세대 중심 vs 현재세대 중심	<input type="checkbox"/>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과 자원 보존 <input type="checkbox"/> 현재 세대를 위한 환경과 자원 활용
8	과학기술 적극적 활용 vs 과학기술 안정적 활용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의 적극적 활용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의 안정적 활용
9	신/재생에너지 중심 vs 원자력 에너지 중심	<input type="checkbox"/> 신/재생에너지 중심 <input type="checkbox"/> 원자력 에너지 중심
10	빠른 변화의 사회 vs 완만한 변화의 사회	<input type="checkbox"/> 빠른 변화의 사회 <input type="checkbox"/> 완만한 변화의 사회



※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DQ1. 귀하께서 현재 하고 계신 일(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1) 전문직         | (2) 경영/관리직        |
| (3) 사무직         | (4) 전문기술직         |
| (5) 판매/서비스직     | (6) 단순노무/생산/단순기술직 |
| (7) 자영업자        | (8) 가정주부          |
| (9) 학생          | (10) 무직           |
| (11) 기타 : _____ |                   |

DQ2. 귀하의 가구 전체의(세전)월 평균 소득은 대략 얼마입니까?

- (1) 200만원 미만
- (2)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3)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4)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 (5) 8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6) 1,000만원 이상

DQ4. 실례지만 귀하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 (1) 기혼
- (2) 미혼
- (3) 기타(이혼, 사별 등)

DQ5. 그럼 자녀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 연령대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 (1) 자녀없음
- (2) 미취학
- (3) 초/중/고 재학 중
- (4) 20대 이상 성인

DQ6.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 (1) 매우 진보
- (2) 다소 진보
- (3) 중도
- (4) 다소 보수
- (5) 매우 보수

### 국민 참여단 만족도 조사

2050년 대한민국 선호미래 국민속의토론에 참여해주신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론조사의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단의 평가 및 만족도에 대해 간략히 여쭙겠습니다.

문1. 먼저 선호미래 국민속의 토론 및 공론조사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대한민국 선호미래 국민속의 토론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및 미래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⑤	④	③	②	①
2	앞으로도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해야한다	⑤	④	③	②	①
3	정부가 나의 생각과 다르게 정책을 추진하여도 정부의 결정을 신뢰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4	나는 다음에도 공론화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할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문2. 다음은 국민속의 토론 및 공론조사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국민 참여단 선정과정	⑤	④	③	②	①
2	토론 및 속의 장소	⑤	④	③	②	①
3	토론 및 속의 프로그램 구성	⑤	④	③	②	①
4	속의 기간(시간)	⑤	④	③	②	①
5	사회자 및 퍼실리테이터(분임토의 진행자)	⑤	④	③	②	①
6	자료집 및 참고자료	⑤	④	③	②	①
7	운영과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⑤	④	③	②	①

문3. 선생님께서「2050 대한민국 선호미래 국민속의 토론」과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 부록 2 4가지 미래 시나리오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4가지 미래 시나리오 특징]

	P미래	Q미래	R미래	T미래	
주요 결과	사회 구성원	고숙련 외국인 증가, 트랜스 휴먼 등장	외국인 이민/노동자 증가	다문화 공생, 생애 현역, 젠더 프리	공동체의 다양한 이웃 중심
	주거 환경	스마트 시티 (어느 곳이든 연결)	메가 시티 (대도시 중심)	대중소 도시-농촌 공존 (탄소 제로 사회)	중소 도시+마을공동체
	자연 환경	기후변화 1.5°C 상승 여름철 평균 일최고기온 2°C 상승, 평균 폭염일수 28.5일 (2001~2010년 서울 11.1일) 곤충 6%, 식물 8%, 척추동물 4% 서식지 절반 감소 연안 홍수 위험 보통	기후변화 2.5°C 상승 여름철 평균 일최고기온 3°C 상승, 평균 폭염일수 45.4일 (2001~2010년 서울 11.1일) 곤충 18%, 식물 16%, 척추동물 8% 서식지 절반 감소 연안 홍수 위험 높음	기후변화 1.5°C 상승 여름철 평균 일최고기온 2°C 상승, 평균 폭염일수 28.5일 (2001~2010년 서울 11.1일) 곤충 6%, 식물 8%, 척추동물 4% 서식지 절반 감소 연안 홍수 위험 보통	기후변화 1.5°C 상승 여름철 평균 일최고기온 2°C 상승, 평균 폭염일수 28.5일 (2001~2010년 서울 11.1일) 곤충 6%, 식물 8%, 척추동물 4% 서식지 절반 감소 연안 홍수 위험 보통
	대인 관계	가상현실 만남 지향	온/오프라인 개인 취향 중심 만남	오프라인/사이버 공동체 만남 활발	오프라인 공동체 만남 선호
	가족 관계	1인 가구+유사 가족 +사이버 가족	1인 가구 증가, 가족 유형 점진적 다양화	공동체 가족+유사 가족 공존	전통+공동체 가족
	일터	온라인 플랫폼 기반, 로봇이 인간 일 대체	새로운 대기업 출현+ 온라인 플랫폼 혼합	대기업+중소기업 공생, 온라인 플랫폼 기반, 노동시장 자유로운 이동	거주 지역 중심
	상대적으로 중요한 가치	자유, 혁신, 성공	공정한 경쟁, 전문성, 효율성	공공이익, 협력, 위기 대응성, 책임성	대화/소통, 신뢰, 친밀감

## 2050년 P 미래

### • 왜 P 미래가 되었는가?

2050년 P 미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성장중심의 경제 체제를 지원하는 급진적 과학기술의 발전과 빠른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냈다. 시민들은 민간 중심의 사회 운영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요구하고, 세금은 중부담, 복지는 중복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 경제성장에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이들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은 건전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학기술의 빠른 성장 덕분에 생활이 편리해질 뿐 아니라,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평균 2.5%<sup>3)</sup>보다 높다.

### • 이 미래에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살까?

스마트 시티를 중심으로 자동화, 지능화, 네트워크화되어있다.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VR/AR/MR<sup>4)</sup>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전제품, 자율주행차, 스마트 홈 등 첨단 기술로 도시를 구성한다. 이는 끊임없이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다.

기술이 집적되는 곳에 일과 여가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설계하고 운영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는다. 반응형 주택<sup>5)</sup>을 공급해 수요자 중심의 가변형 공간도 구현했다. 맞춤형 기술의 적용과 생애 주기에 맞추어 자유로운 확장이 가능하다.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반응형 바닥, 스마트 가구 등을 통해 노약자와 장애인도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개발 등 전 세계적인 노력에 힘입어 지구의 기온이 1.5℃ 상승하는데 멈춰 환경 재앙을 맞이하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여름철의 평균온도는 2℃ 이상 상승하였으며, 폭염일수 증가와 열대야 지속 기간이 늘어나 기존의 뚜렷한 4계절은 사라지고 아열대 기후의 모습을 보인다.

3) PricewaterhouseCoopers : The World in 2050

4)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융합현실(Mixed Reality: MR)

5) 2018년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

기존 신재생에너지원인 풍력, 조력, 태양열 등의 사용을 지속해 왔으며 이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며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었다. 에너지 사용료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은 국민의 노력으로 점차 감소하였다.

2050년 에너지 산업의 큰 변화 중 하나는 2000년대부터 연구되었던 핵융합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신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이는 우주개발 기술에도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과 중국이 2030년 화성 유인 탐사를 시작하고, 2040년 소행성 탐사까지 성공하자 우주개발에 대한 기대는 한껏 높아졌다.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이 앞다퉈 달 탐사 경쟁에 나서고 있다. 차세대 핵융합발전의 연료로 알려진 헬륨3를 확보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헬륨3와 바닷물에 풍부한 중수소를 핵융합시키면 막대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한다. 헬륨3를 이용한 핵융합발전은 핵분열 방식의 원자력 발전소와 달리, 방사능 폐기물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킬 걱정이 적다.

인터넷은 국경 없는 경제를 만들었다. 인터넷만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거래가 폭증하고 있다. 전자투표와 인터넷 등을 활용한 국민 발의·청원제도는 보편화되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중앙집권화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민간 중심의 국가 운영이 활발하다.

•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까?

2050년에는 소재 과학, 3D/4D, 바이오프린팅, 센서, 나노테크놀로지, 합성생물학 등 신기술의 지속적인 개발 및 발전으로 건설, 제조, 유지관리, 수도, 에너지, 의약 및 식품생산 등의 원가는 파격적으로 낮아졌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 IT 기반의 기술발전으로 인간을 대체하여 운영된다.

인공지능 로봇은 급여를 받지 않으며 24시간 쉬지 않고 일한다. 이들에게는 유급휴가, 병가, 퇴직금도 주지 않는다. 이런 기술을 통해 보험, 생산, 유지관리, 노동력의 원가를 대폭 낮출 수 있었다. 자율 로봇 시스템은 농장의 과일 수확, 요리, 쓰레기 수거 등 인간이 하고 싶지 않은 거의 모든 일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자율 로봇 시스템은 가정을 범죄로부터 지켜주고 아이들을 보호한다.

인공지능 로봇은 많은 영역에서 인간의 지능과 능력을 대체한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었으며,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역할도 인공지능이 담당한다. 자율화 수준이 높아져 인간의 의사 결정을 돕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의 권고에 의존하고 이들의 지시를 받는 것을 익숙하게 생각한다.

대부분 노동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감을 찾는다. 인공지능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등록된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잘하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그에 따라 노동자에게 맞는 일감을 찾아준다. 첨단 IOT 시스템의 적용으로 개별 건강 및 개인의 삶을 설계해주는 시스템(개인맞춤형)이 통용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서비스로 최고경영자 없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서비스로 운영되는 회사는 직접 민주주의와 비슷하다. 이 서비스에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주와 계약인이 존재한다. 주주들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의견을 모아 회사 경영 방향을 결정한다. 각 주주의 의사 결정 권한은 보유한 가상화폐가 많을수록 커진다. 이러한 IT 기반 사회에서 2000년대 초반 제조업 기반의 10대 대기업들은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회사, 인터넷 서비스 기반의 회사 등으로 변신했다.

• 이 미래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까?

태어날 자손의 유전자 변이를 위해 부모의 정자와 난자를 변경하는 것에 사회적으로 반발이 있지만, 인간에 관한 유전자 치료는 2019년보다 활성화되었다. 낙태보다는 인도적으로 미래 고통을 제거할 방법으로 개인에게 유전자 변이 기술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정보화로 인간관계는 더욱 개별화되고, 기계인 컴퓨터와 대화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은 우애와 사랑을 나누며 일상의 삶을 지속시켜 나갈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대안으로 사이버 가족이 등장했다. 사이버 가족은 비록 직접 만나거나 대면하지는 않지만, 온라인으로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가족처럼 지낸다.

전통적인 의미의 결혼이 사라지는 대신 인터넷 사랑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로맨스 관계를 유지하는 데 인터넷보다 더 좋은 만남의 장은 없다. 안정적이면서도 짜릿한 느

꿈을 가질 수 있고, 서로 필요할 때만 연락을 취하면 된다. 이스라엘의 하이파 대학 아론 벤제브 교수는 혼외 사이버 섹스나 온라인 연애를 21세기 인간 교제나 만남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았다.<sup>6)</sup> 그러나 일부일처제의 혼인 관계는 법적 제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 존중, 경제성장, 급진적 과학기술을 추구한 결과,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 그리고 트랜스 휴먼으로 불리는 증강 인간이 공존한다. 인구의 감소 추세를 받아들이면서도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2050년 대한민국은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반기고 있다. 이들을 위한 정부의 세제 혜택과 시민권 부여 등 적극적인 유인정책은 국민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육체는 물론 정신(이성, 감성)까지도 증강된 인간은 2019년의 시각으로 보면 사이보그(기계화된 인간)에 가깝다.

청년들은 인공지능과 소통에 애착을 느끼고 있으며, 일부는 인공지능을 가족처럼 생각한다. 소수의 경우지만 인간과 관계를 끊고 오로지 인공지능과 소통하면서 살기도 한다. 과거 유럽연합은 생활동반자형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인격을 넘어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호주에서는 인간보다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과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더 적절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기에 인공지능 로봇에게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아직 결론은 내지 못했지만, 이 사안은 2050년 미래에 뜨거운 이슈다.

---

6) 아론 벤제브(2006), 러브온라인

## 2050년 Q 미래

### • 왜 Q 미래가 되었는가?

이 미래는 개인의 자유 중시, 점진적 과학기술개발, 안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낸 미래다. 사회시스템을 갑작스럽게 변화시키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비용이 현재 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정부보다는 민간 중심의 사회 운영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요구한다. 세금은 중부담, 복지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운용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점진적으로 조세부담률을 높여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를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려놓았다. 글로벌 저성장 고착화와 국내 경제성장률 저하 등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sup>7)</sup>.

### • 이 미래에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살까?

2050년 지방의 중소 도시, 농산어촌은 인구가 감소하여 전 국토에서 인구 감소 지역은 80%에 육박한다. 일부 대도시지역과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은 메가 시티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다. 과거 수도권으로 불리던 서울, 인천, 경기를 비롯하여 강원, 충북과 충남, 그리고 세종, 대전에 이르는 지역을 합해 총 2천5백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 수도권 메가 시티로 불린다. 메가 시티의 시민들은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태어난 세대로 농어산촌 등에서 거주한 경험이 적어 도시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한다. 사물인터넷을 통해 가전제품,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헬스 케어, 원격 검침, 스마트 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의 보편화로 생활의 편리성이 높아졌다.

대도시 중심으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형 교통수단의 보편화, 스마트 항만·공항 등 교통·물류·인프라 혁신, 인공지능·수소경제 등

7) 국회예산정책처(2018)에서 추정된 우리나라 실질 GDP성장률은 2020년 2.8%에서 2050년 1.2%로 지속적인 감소 전망(국회예산정책처, 2018.12.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 전망)이다.



다양한 신산업이 출현하면서 30년 전과 비교할 때 도시 모습은 크게 달라졌다. 초고속 열차의 보편화, 대도시 지하 공간의 발달, 자율주행 자동차, 소형 모빌리티(개인용 이동 수단)가 증가하면서 충전소, 통신·교통 관제 등 도시의 모습이 전반적으로 바뀌었다<sup>8)</sup>. 하이퍼 루프와 플라잉 카(flying car) 등은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유연한 근무 제도의 정착과 재택근무의 보편화 등과 맞물리면서 도시의 교통체증은 완화하였고 자율주행차는 차량 공유시스템과 연계하면서 별도의 주차공간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운전 중 사고율도 매우 낮아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등 도로환경을 개선하였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걱정되지만, 대체에너지 개발은 그 성과보다 비용이 많아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은 유지되고 있다. 값싸고 효율적인 원자력 에너지와 화석에너지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요 에너지원이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달로 위험성을 낮추고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며 대체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환경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2019년 ‘지구 탄소 프로젝트’의 한 과학자가 2049년 2.5°C 온난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 사실이 되었다. 2049년은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블랙 카본)이 역사상 가장 많이 배출된 해로 기록되었다. 2020년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면서 신기후체제에 균열이 생겼고, 파리협정의 1단계 목표인 2030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실패로 돌아간 결과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 재난재해 증가 우려로 지구적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노력이 많았으나,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완화나 적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홍수, 가뭄, 폭설, 폭염, 지진 등의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발생 시기나 패턴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정책 당국의 노력에도 2050년 6.9조원(GDP의 0.59%)에 달하는 피해 비용이 발생하였다(2020년 3.6조원, GDP의 0.31%) 한국처럼 중위도 국가는 여름 온도가 3°C까지, 고위도 겨울 온도는 6°C까지 상승했다. 폭염 현상이 더 자주, 더 오래 발생하고 있으며 습한 지역은 폭우의 빈도와 강도, 강우량이 증가하고 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겨울철 난방비가 이전보다 적게 들어간다는 점, 북한과 러시아 등의 온도가 올라가 개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은 기후변화

8) 2030년 수소차와 전기차가 신차의 20~30%를, 자율주행차는 레벨3 이상, 신차의 5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다. 정부 부처 합동(2019), 「2030 미래차 산업발전전략」.

의 상대적 이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의 악화로 시민들의 의료 관련 지출은 증가하고 있다.

• 이 미래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까?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한 한국은 기존 대기업 중심의 기업생태계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대기업이 등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에 지혜를 모았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개인이 많아야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 결과, 2050년 한국의 산업을 이끌어갈 30대 대기업 집단의 30%는 2019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은 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정보통신(IT)과 금융, 의료, 신소재, 서비스 분야 등을 융합하고 있다.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글로벌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이다.

이러한 대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경영자들은 과거 창조적 개인의 등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들이다. 주로 1990년~2000년에 태어난 이들은 위계질서, 권위주의를 싫어하며, 집단보다는 자기 자신에 높은 관심을 둔다. 업무가 재미없으면 꺼리지 않고 직장을 옮긴다. 조직에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는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한다. 반면, 자신의 일에 만족하면 높은 봉급과 출세를 보장한다고 해도 다른 부서로 이동하길 거부한다. 자신의 분야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장한다고 생각하며, 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시한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개인들은 기존 대기업의 권위주의적 문화를 거부하고 스스로 창업에 뛰어들어 성과를 일궈내 2050년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는 이전과 비교해 심화하고 있다. 2017년 기준 토지 소유 상위 10% 세대가 전체 사유지의 77%를 소유, 토지 소유 상위 1% 세대가 31.7%를 소유하는 등 토지 소유의 편중이 고착화하는 추세<sup>9)</sup>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소득, 자산의 양극화가 커지면서 세대 간, 계층 간 양극화 등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공정함에 대한 요구는 증대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사회적 형평성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중부담의 세금 제도나 다소 높은 수준의 복지가 그나마 사회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9)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100대 대기업 집단의 임원과 직원의 평균 연봉을 조사한 결과 2019년 11배에 비해 더욱 차이가 벌어졌다. 치열한 국가 간 경쟁에서 성장 중심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려면 성장을 견인하는 유능한 개인에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논리가 팽배하다. 성장의 과실을 소수의 개인이 독점한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근로자의 일하는 시간은 2019년과 비교해 많이 감소하고, 디지털 직(gig) 경제<sup>10)</sup>가 자리 잡으면서 노동유연성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일감을 구하기 위해 플랫폼에 접속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을 합하면 일에 묶이는 시간은 오히려 증가했다.

### • 이 미래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까?

2050년 인구는 4,700만 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2028년 인구 5,200만 명에서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sup>11)</sup>. 인구 구성비도 크게 바뀌었다. 고령자 가구가 증가하여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1인 가구<sup>12)</sup>, 다문화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와 가족 형태가 변화되었다. 귀화·혼인 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구와 외국인 가구도 증가하여<sup>13)</sup>, 농산어촌의 지역경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정도이다. 농산어촌으로 이주해온 다문화 가구도 더 이상 이질적이지 않으며, 외국인들에 대한 배타적 경계심도 많이 완화되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들로 넘쳐난다.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 한국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주한 외국인들뿐 아니라 이미 부모나 조부모 세대부터 한국에 이민 와서 지금은 다문화 3세, 4세가 된 한국인들도 거리를 채우고 있다.

한국인은 다양한 외국인들과 국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지만 많은 경우 이들 외국인의 진입을 반기고 있다. 인구 감소를 저지하는 효과뿐 아니라 자유롭고 창조

10) '디지털 직 경제(Gig Economy)'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문형 플랫폼 산업이 성장하면서 기존 오프라인 거래와 차별화된 유형의 일자리와 고용형태를 의미함

11) 2017년 현재 5,136만명에서 증가,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2050년 4,774만명에 이를 전망, 2017년과 2050년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감소(73.2%→51.3%),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증가(13.8%→39.8%),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감소(13.1%→8.9%)할 전망(통계청, 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12) 2047년 1인 가구는 37.3%,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49.6%로 전망(통계청, 2019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

13) 다문화가구는 2015년 229천 가구에서 2018년 334천 가구로, 외국인가구는 2000년 65천 가구에서 2017 478천 가구로 급증하는 추세(통계청, www.census.go.kr). 다문화가구의 증가로 결혼이민자의 자녀수(결혼이민 2세)가 증가하여 2050년에는 약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적인 개인의 증가가 권위주의적 문화를 약화시키며, 국부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다양성의 증가 때문에 예전에는 성 소수자로 차별했던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도 달라졌다. 혈연, 혼인 중심의 전통적 가족제도 중심에서 1인 가족 뿐 아니라 동거 가족, 게이 커플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한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다문화적 요소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갈등 요인들도 증가하였다. 사회 갈등이 커지면서 사회 내 분열과 혼란 요소들을 제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정책적, 정치적 노력에 힘쓴다. 사회적 다원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긍정하면서 이를 정책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한다. 기존의 정당 체제가 이념(진보 대 보수)과 지역에 기반했다면 인종, 종교, 젠더, 환경 등의 가치를 내세운 다양한 신당 출현으로 다당제 체제가 자리 잡았다. 시민들의 의견이나 정치적 표현도 훨씬 다양해졌다.

## 2050년 R 미래

### • 왜 R 미래가 되었는가?

경제적 양극화,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 문제와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환경오염,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유지와 지속에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하여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시민들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을 신뢰하면서 공동체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복지를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자력과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2050년 한국 사회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연대와 분배를 중시하면서도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빠른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다.

### • 이 미래에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살까?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식한 세계 각국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 하자는 합의를 순조롭게 이행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적으로 줄였다. 그 결과 2050년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12.8℃까지 올랐다. 12.8℃는 2019년 부안, 영덕, 청주의 수준이고, 2050년의 서울은 2019년 부산, 제주와 유사한 13.4℃의 평균기온을 보이고 있다.

남해안과 서해안, 경상북도 동해안 일부 지역 중심으로 아열대화된 것은 피할 수 없었다. 완만한 기온 상승으로 시민들은 적절하게 적응하고 있고, 생태계 교란도 크지 않다. 아열대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국민들의 해수욕장 이용이 급증하였다. 아열대 농작물의 재배 면적이 늘면서 이 농작물을 식재료로 많이 사용해 우리 식탁의 모습도 상당히 변화하였다. 평균기온의 완만한 상승으로 나무의 생육 기간이 연장되어 산림도 풍부해졌다. 나무가 많아졌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여도 산사태가 줄어들고 토양 유실도 적어졌다. 도시에 나무가 많아졌기에 2019년에 비하여 여름철 폭염 발생일이 상당히 증가해도, 도시의 열섬효과가 적게 나타나 시민들은 공원에서 열을 식힐 수 있게 되었다.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철저히 억제  
 결과 미세먼지 문제는 대체로 해결되었다. 시민들의 야외 활동도 증가하고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이었던 호흡기 질환 병발률과 그로 인한 사망률도 감소하였다. 이는 태양열,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연료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용 및 주거용 건물을 지을 때는 에너지 소비량과 생산량이 균  
 형을 이루는 제로에너지 설계가 법적 의무이다. 기계적 냉·난방시스템이 아닌 건물 자  
 체의 단열 성능을 극대화해 건물 외피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에너지양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 기능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소  
 규모 주택을 건축할 때에도 제로에너지를 달성하기 위한 법적 의무 사항 중의 일부가  
 적용된다.

도시에는 친환경 교통체계가 구축되었다.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미래  
 형 교통수단을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로써 교통사고가 감소하여 사람 중심 교통  
 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전자·정보·통신·제어 분야의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  
 한 지능형 교통체계를 도입하여 교통수단 간에 교통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교통센터에 수집되는 빅 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교차로 신호가 조정되어 도시의 교통체  
 증이 감소하였다. 전기와 수소를 교통수단의 에너지원으로 함으로써 탄소, 질소 화합물  
 과 같은 배기가스의 배출이 줄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면서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였  
 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필요한 상당한 경제적 지출의 증가를 감내하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줄여서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자는 것에 우리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였고 시민들의 국제적 연대 활동도 활발  
 하게 전개되었다. 산업기술 협력을 넘어서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협력도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면서 한중일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가하였다.

• 이 미래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까?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하게 되면서 시민들은 고부담 고복지의 사회복지 제도를 선택  
 하였다. 고복지는 높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의미하지만, 시민들은 감내하기로 하였

다. 나아가 고부담 고복지를 이루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근로 능력이 있고 근로 의사가 있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근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로 하였다. 노동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실현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이 사회의 핵심적인 윤리이다. 따라서 이 사회에는 효과적이고 두터운 고용복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는 충분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자신과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하락할 염려를 하지 않는다. 충분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효과적인 구직 서비스를 통해서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다.

근로 능력이 있고 근로 의사가 있는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채용에서 적극적으로 우대한다.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를 소수가 독점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안정성과 공정성이 실현되어 구성원들이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빠른 변화와 그에 대한 도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평생직장과 평생 직업은 이미 의미를 상실하였다.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직장 and 직업을 바꾸고자 한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별다른 제약 없이 고용 형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선택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노동력을 제공할 것인지, 특정한 회사에서 노동력을 제공할 것인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질 임금 격차는 크지 않아서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직장의 규모가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능력이다.

• 이 미래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갈까?

2050년 한국의 전체 인구는 4700만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15~64세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문화 가구 및 외국인 가구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첨단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무인화·자동화가 급격히 진전했고,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 참여도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는 제한적으로 받는다.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뿐만 아니라 온화한 기후로 기후 난민이 증가한 탓도 있다.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 참여가 대폭 증가한 것은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필요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차별과 장벽 없이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의식과 제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의식과 제도가 자리잡으면서 공동체 연대 의식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공동체 연대 의식은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구 및 외국인 가구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려는 의식으로 이어져 다문화 공생사회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에 대한 포용 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공동체도 가족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혈연과 혼인 중심의 가족관이 변화하였다는 점도 중요하다. 남녀가 애정·신뢰·부양 수준이 낮은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한 합리적인 목적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도 가족으로 인정한다. 혈연과 혼인으로 형성되는 전통적인 가족은 여전히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 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권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행정적·재정적 분권을 촉진했다. 지방 정부는 지역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를 실현하고 유지하는 데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회는 고부담·고복지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서 발생한 혼란과 갈등이 거리에서 폭발하지 않고 대의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회가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와 가치를 정당을 통해서 표출하고 정당이 국회 내에서 조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와 가치를 표방하는 정당의 원내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다양한 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었고 양당 구조의 극한 대립보다는 정당 간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 문화가 정착했다. 대의민주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고부담 고복지와 탄소 제로 사회의 실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노동



조합, 사용자단체, 환경 단체, 풀뿌리 시민 단체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잘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대타협을 함으로써 고부담·고 복지로 가는 길을 열었다.

## 2050년 T 미래

### • 왜 T 미래가 되었는가?

인구 감소로 벌어진 지방 소멸, 잦은 경제 위기의 반복, 전적으로 개인에게 생존의 책임을 부가하는 사회적 분위기, 줄지 않는 범죄, 폭력, 성범죄, 취약계층의 자살, 우울과 불안 등 다양한 정신병리의 증가,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치권 등의 현상이 맞물리면서 한국인은 공동체별로 자생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공동체의 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또한 무슨 일이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위험 요인을 분산시키고, 위협적 요인에 대한 시민들의 내성을 키우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2019년 시민들의 눈에 이런 2050년의 미래 모습은 낯설다. 될 수 있으면 생산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적 목표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물질적 풍요와 함께 세계시장의 리더를 꿈꾸던 한국인의 과거와 매우 다른 미래다.

### • 이 미래에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을까?

이 미래와 가장 닮은 2019년의 모습을 꼽으라면 세계적인 록그룹 비틀스의 고향, 영국 리버풀이 적절하다. 이 지역은 2000년까지 인구 감소, 도시 쇠퇴, 슬럼화 문제를 앓다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낡은 집을 수리하고 내부에 정원을 만드는 등 삶의 환경을 바꿔 나갔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과 다채로운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빈집은 물론 철거되는 집에서 나온 소품이나 폐자재를 활용해 새 제품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sup>14)</sup>

이 미래의 시민들은 도심 농장과 협동조합의 확산, 지역 화폐 도입, 물물교환, 공간의 공유, 이웃 간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구조 개혁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인구가 줄면서 학교, 병원, 문화시설 등 기본적인 공공시설이 사라지거나 폐쇄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하자 주민들 스스로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보건, 의료, 복지, 치안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하도록 노력한다. 고액 소득자에게는 부유세를 걷어 재분배 시스템을 강화했다. 또한 소비의 축소, 글로벌 분업 시스

---

14) 임동우(2018), p. 92.

템으로 조직된 산업 생산의 축소, 노동시간 단축 등 탈성장 방식의 생활을 실천하면서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려고 노력한다. 축소 지향적 삶의 확산으로 경제성장률은 0%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이 미래 사회는 축소 지향 경제 시스템으로 대대적인 전환을 감행했으나, 18세기부터 진행한 산업화의 영향을 뒤집기란 쉽지 않았다. 2050년 전세계 기온은 1.5도 증가한 상태다. 세계가 폭염과 열대야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국 같은 중위도 나라에서는 여름 평균온도가 30년 전에 비해 2℃가량 상승했다. 서울의 여름철 평균 일 최고기온도 3℃가량 상승했다. 2050년 연간 평균 폭염일수(일 최고기온이 33℃가 넘는 날)는 45.5일을 기록한다. 2001~2010년 서울의 1년 폭염일수가 11.1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배 증가한 셈이다. 곤충 6%, 식물 8%, 척추동물 4%는 서식지의 절반 이상을 잃었다. 지중해나 남아프리카는 건조 현상이 심해져 가뭄, 강수량 부족 현상이 빈발했다. 건조하지 않은 지역은 더 습해졌고, 폭우의 빈도와 강도, 강우량이 증가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두 현상이 겹쳐져, 장기간의 가뭄과 폭우가 연달아 발생하기도 했다.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변화에 대해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축소 균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주민들 각자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거대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다.

• 이 미래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2050년 한국은 중소 도시별 주거, 탁아, 교육, 일터, 상업 시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다른 지역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외부 환경이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소비재를 생산하고 소비해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도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않고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민들은 도시 안에서 농업을 발달시키고, 탈산업화를 진전시키고 있다. 과거 효율성을 추구하는 대량생산 제품보다 개인의 취향을 고려하는 소량생산 제품을 선호한다.

주민들은 자급자족의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수록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본업이 서비스업이어도 퇴근 후에는 집에서 강아지 용품을 만들어 팔 수 있다. 또, 평일에는 중소기업 사원으로 일하다가 주말에는 지역의 명물인 수제 맥주를 만드는 소규모 양조장의 대표가 될 수도 있다. 이 미래의 시민들은 비록

예전처럼 돈을 벌지는 못해도 다양하고 즐거운 일거리가 있다고 믿는다.

기업의 목표는 상품 생산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회사에 들어갈 때는 연령 제한이 없으며,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투자도 미래에 대한 헌신이라고 본다. 현재와 미래의 생산적 관계를 지향하면서, 학교, 병원, 공공교통 시스템, 마을회관, 문화예술 시설, 도서관, 녹지와 공원, 농장 등 자원 절감 녹색기술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sup>15)</sup>

이 미래는 공동체 연대의 중시, 분배 중심의 경제체제, 점진적 과학기술 개발,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낸 미래다. 시민들은 민간보다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사회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정부는 지역자치정부를 말한다. 세금은 고부담, 복지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운용하는 것이 공동체 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이 미래에서 정치적 의사 결정은 직업 정치인뿐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의회에서 이뤄진다. 2012년 아일랜드가 시민의회를 운영했던 방식을 따라 지역별로 100명의 시민을 모아 중요한 의사 결정을 진행한다. 시민의회는 직업 정치인 33명, 무작위로 추첨된 시민 66명, 그리고 의장 1명 등 10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결정해야 할 주요 의제들은 지역공동체의 삶에 관련한 것들이지만, 해외 지역공동체와 연대, 공동사업,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개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룬다. 기술개발과 관련해, 과거 시민의회에서는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산업형 로봇기술의 개발을 멈추고,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행동으로 인간의 삶을 보조하는 ‘눈치 빠른 로봇’을 개발하도록 권고한 일도 있다.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율주행차는 주로 나이가 많아 운전하기 힘든 노인,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사회복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주민들은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 움직인다. 도로는 여러 교통 센서를 활용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시내 주요 도로에서 자동차 속도는 30km/h 이내를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제한다.

15) 조혜경. (2017). 탈성장(degrowth)의 이론적 기초.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 이 미래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을까?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 4500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구 감소가 주춤하고, 지역에 따라 소폭 증가하는 곳도 생겨났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부터 진행해온 인구 감소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 마을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의 아이뿐 아니라 그 마을의 아이로 생각하면서 가족의 개념을 공동체로 확대했다. 마을 사람들은 남의 아이도 자신의 아이처럼 돌보고 있다.

다문화 가정도 지역사회에서 잘 어울려 살고 있으며, 다문화 3세, 4세들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덕분에 국제적 마을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사회를 운영하는 경험과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있다.

중소 도시와 다양한 마을의 주민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모임을 만들고, 여러 사회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은 적다. 자발적으로 다양한 대안을 개발하고, 함께 실험할 사람들을 찾아 시도해본다. 지역 주민들의 지식과 능력만으로 필요한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중소 도시와 마을 주민들은 ‘열린 지역주의’를 표방한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이들이 낸 아이디어를 함께 실험해본다. 이런 실험을 주도하고 있는 충남의 이승철씨는 모래를 가장 많이 손바닥에 올려놓는 방법은 손바닥을 가장 많이 펴는 것이라며 “손바닥을 열어놓으면 불안한 느낌이 들지만, 막상 열어놓으면 새로운 것을 공부하게 되고 대안을 찾게 된다.”고 말한다. 지역사회에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새로운 실험은 새로운 대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20세기 후반 새마을운동처럼 정부가 주민들에게 한 가지의 미래상을 심어주고 이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동원하는 방식은 거부한다. 이들은 각 지역사회, 농촌, 어촌, 산촌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주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이들은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밀쳐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이들에게 새로운 시스템이란 공동체 연대와 협력을 가장 잘 일궈내는 시스템을 말한다. 어떤 시도라도 서로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면 실천한다는 식이다.

## 한국인 선호미래 조사 연구

인 쇄	2019년 12월 27일
발 행	2019년 12월 31일
발 행 인	박 진 (朴 進)
발 행 처	국회미래연구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2층 222호
전 화	02)786-2190
팩 스	02)786-3977
홈페이지	<a href="http://www.nafi.re.kr">www.nafi.re.kr</a>
인 쇄 처	유월애 (02-859-2278)

---

©2019 국회미래연구원

ISBN 979-11-970575-6-4 93300

# 한국인 선호미래 조사 연구

박성원 외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2층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www.nafi.re.kr](http://www.nafi.re.kr)



9 791197 057564

ISBN 979-11-970575-6-4 93300

비매품/무료